

# 북한의 경제개혁과 이행

연구책임자 | 이 석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 KINU

통일연구원

북한의 경제개혁과 이행 ▶▶▶

본 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 목 차

I. 머리말 .....	1
II. 북한 경제정책 변화의 연대기 -개혁인가 복구인가? .....	7
1. 1982~1993년: 북한 경제정책 변화의 시발점 .....	9
2. 1994~1997년: 시스템의 와해와 새로운 전환의 필요성 .....	13
3. 1998년~현재: 제도의 개혁인가 시스템의 복구인가? .....	19
III. 북한의 경제개혁과 이행에 대한 가설들 .....	35
1. 예비적 논의: 북한경제 변화 가설과 사회주의 이행 가설 .....	37
2. 북한 불변화 가설과 사회주의 붕괴론 .....	42
3. 북한 시장화 가설과 사회주의 비공식화론 .....	53
4. 북한 계획경제 정상화 가설과 사회주의 비공식화론 비판 .....	66
5. 북한의 경제개혁과 이행에 관한 정치변화의 가설 .....	80
IV. 북한의 비공식 부문 규모 추정과 개혁 가설들의 평가 .....	97
1. 예비적 논의: 사회주의 비공식 부문 추정방법과 북한경제 .....	100
2. 전기 소비량을 이용한 북한의 비공식 부문 규모 추정 .....	108
3. 수송용 석유 소비방정식을 이용한 북한 비공식 부문 규모 추정 .....	118
4. 북한의 비공식 부문 추이와 개혁가설들의 평가 .....	130

V. 맺음말 ..... 135

참고문헌 ..... 141

최근 발간자료 안내 ..... 149

## 표 목 차

<표 II-1> 북한의 거시경제 지표: 1990~2000 .....	14
<표 II-2> 북한의 산업구조, 1993~1999 .....	15
<표 II-3> 북한당국의 (농민)시장 정책변화 추이 .....	31
<표 IV-1> 전기소비 증가율을 이용한 북한의 GDP 증가율 추정 결과, 1993~2000 .....	112
<표 IV-2> 북한의 공식부문과 비공식 부문의 경제규모 추정 결과, 1993~2000 .....	113
<표 IV-3> 북한의 비공식 부문 비중 추정 결과, 1993~2000 .....	113
<표 IV-4> 북한의 수송용 석유소비 방정식 추정결과 .....	127
<표 IV-5> 북한경제(수송용 석유소비)에서의 비공식 부문 비중 추정결과, 1971~2000 .....	128

## 그림 목 차

<그림 III-1> 북한경제 불변화 가설과 사회주의 경제 붕괴론	52
<그림 III-2A> 북한경제 시장화 가설	65
<그림 III-2B> 북한경제 시장화 가설과 사회주의 경제 비공식화론	65
<그림 III-3> 북한경제의 일반성과 특수성	72
<그림 III-4> 북한 계획경제 정상화 가설과 사회주의 비공식화에 대한 반론	79
<그림 III-5A> 생산자 모니터링과 근로자 노력 투입 그리고 사회주의 경제의 균형	85
<그림 III-5B> 정치변화와 모니터링 스케줄의 이동 그리고 사회주의 경제의 붕괴	85
<그림 III-6>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와 계획자 모니터링 스케줄의 이동	90
<그림 III-7> 북한 신정부의 등장과 그 효과	95
<그림 IV-1> 사회주의 경제 비공식 부문 추정방법	101
<그림 IV-2> 북한경제(수송용 석유소비)에서의 비공식 부문 비중(%) 추이, 1983~2000	130

# I

## 머리말



북한을 바라보는 외부 관찰자들 사이에서 ‘경제개혁’이라는 주제만큼 다양한 관심과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킨 주제는 흔치 않을 것이다. 아마도 그것은 경제개혁이라는 단어가 상징하는 북한의 변화가 결국에는 북한경제의 시장경제로의 이행을 촉진하는 디딤돌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서 일 것이다. 실제로 대다수 연구자들은 최근 북한당국의 경제정책 변화를 개혁이라는 단어로 총괄하면서, 그 핵심적 내용을 시장화라는 적극적인 개념으로서 이해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 북한경제가 시장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기존의 사회주의적 시스템에 접목시키려는 ‘돌이킬 수 없는’ 경제적 실험에 돌입해 있으며, 이러한 실험의 결과는 궁극적으로 북한경제 자체의 점진적이고도 연속적인 시장경제로의 이행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 서게 되면 외부세계가 북한에 제공하는 경제적 지원 역시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된다. 때로는 그것이 북한경제의 시장화를 촉진시키는 촉매제의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이를 통해 북한경제의 과거로의 회귀를 차단하는 버팀목의 역할을 기대해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적극적인 해석과는 반대로 최근의 북한경제가 보여주고 있는 다양한 변화를 매우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시각 또한 엄연히 존재한다. 이러한 시각에 서게 되면, 우리가 흔히 개혁이라고 부르는 북한경제의 변화는 단지 표피적인 중요성만을 가지고 있을 뿐, 북한경제의 본질은 여전히 변화하지도 또 변화할 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 북한경제의 앞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 역시 점진적이고도 연속적인 시장경제로의 이행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라, 갑작스런 체제의 붕괴나 고통스러운 경제위기의 연장과도 같은 암울한 현실감뿐이다. 또한 외부세계가 제공하는 경제적

지원은 북한경제의 시장화를 촉진하는 촉매제로서가 아니라, 이미 사망선고가 내려진 식물체제의 생명을 강제로 연장시키는 낭비뿐인 산소호흡기로만 여겨진다.

물론 어떤 사회현상에 대해서나 서로 다른 시각과 논점의 차이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최근 북한경제의 변화를 둘러싸고 나타나고 있는 외부 관찰자들 사이의 시각과 논점의 차이는 이런 상식적인 논의의 수준을 조금은 벗어나 있다는 느낌이다. 무엇보다 이들은 색다른 시각과 익숙하지 않은 논점을 제공하는 상대방의 논의에 직면했을 때, 이를 진지하고도 객관적인 방법으로 검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모두들 자신의 시각을 표명하는 데에는 익숙하지만, 상대방의 시각을 이해하거나, 심지어는 자신의 시각을 보다 정련된 형태로 가공해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데 사용하는 것에도 별로 익숙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이로 인해 북한경제의 변화와 관련된 여러 의견이 분분하지만, 이들 의견 사이의 치열한 논쟁이나 이를 통한 자기발전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2002년 북한의 ‘7.1조치’를 계기로 잠시 불거졌던 북한 시장화 논쟁이 어느덧 수그러 들고, 이후 오늘날까지 수많은 북한경제의 변화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우리의 이해수준은 여전히 당시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이를 잘 말해준다.

이 글은 북한의 경제개혁을 둘러싼 이러한 답답한 논의 현실을 조금은 벗어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작성된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작업을 수행한다. 하나는 북한의 경제개혁과 그 의미를 둘러싼 다양한 해석과 시각들을 하나의 공통된 평면 위에서 보다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이렇게 정리된 해석과 시각들을 평가 가능한 실증명제의 형태로 전환하여, 현재 우리가 가지

고 있는 데이터와 분석방법이 허락하는 수준에서 그 타당성 여부를 토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이 글에서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질문들을 제기하고, 이후 장들에서 이들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 방식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첫째,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북한의 경제개혁이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둘째, 이러한 북한의 경제개혁과 그것의 의미와 관련해서는 어떤 해석과 시각들이 존재하고 또 존재할 수 있을까? 셋째, 이러한 시각과 해석들의 타당성을 어떻게 알아 볼 수 있을까?

이 글은 북한의 경제현상을 묘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가설(이론)을 정리하고 또 경험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의 주제는 본격적인 경제학적 토론의 대상과 매우 가깝다. 실제로 이 글에서 우리는 여러 그림과 모형을 사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글에서 일반적인 경제학적 논의가 추구하는 엄밀성이나 과학성을 추구하지는 않는다. 불행하게도 북한경제에 대한 우리의 논의 수준은 아직 이런 것들을 추구할 만큼 발전해 있지 않다. 우리가 이 글에서 중요시하는 것은 ‘직관’과 그를 통한 ‘자극’이지 ‘우아한 논리적 체계’나 ‘엄밀하고도 실증적인 과학성’이 아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 주장하고 있거나 주장하려고 하는 것들은 보다 진전된 논의를 위한 ‘잠정적’ 토론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지, 이미 과학적으로 검증된 실증명제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은 아니다.

이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II장에서는 1980년대 이후 북한 경제정책의 변화를 정리함으로써 과연 우리가 경제개혁이라고 부르는 북한의 변화가 무엇인지를 알아본다. III장에서는 이러한 변화와 관련된 다양한 시각을 ‘북한경제 불변화 가설’과 ‘북한 시장화 가설’ 그리고 ‘북한 계획경제 정상화 가설’로 대비한 후, 이들이 사회주의

경제개혁과 이행에 대한 일반적 가설이라 할 수 있는 ‘사회주의 붕괴론’과 ‘사회주의 경제 비공식화론’ 및 그에 대한 ‘반론’들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를 검토한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검토를 토대로 사회주의 경제의 변화에 있어서 정치의 변화를 명시적으로 고려하는 또 다른 가설 하나를 제출한다. IV장에서는 앞에서 검토한 여러 가설들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북한의 비공식 부문(시장)의 규모를 추정하고 그 추이를 관찰한다. 마지막으로 V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고, 향후의 보다 진전된 논의를 위해 추가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을 적시하는 것으로 맺음말을 대신한다.

## II

# 북한 경제정책 변화의 연대기 -개혁인가 복구인가?



우리는 흔히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 북한이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북한경제에서는 과연 무엇이, 얼마만큼, 어떻게 변화한 것일까? 북한경제의 변화에 대한 여러 가설들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초적인 사실에 대한 확인 작업이 미리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앞으로의 본격적인 논의를 위해 1980년대 이후 북한 경제정책의 변화 내용과 요인들을 연대기의 형태로 정리한다. 편의상 여기에서는 이 시기를 세단계로 구분한다. 첫 번째 단계는 북한경제의 변화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한 1982~1993년의 시기이며, 두 번째 단계는 기존의 북한 경제시스템이 사실상 작동을 멈추고 이에 따라 새로운 변화의 요구가 팽창했던 1994~1997년의 시기이고, 마지막 단계는 북한당국이 그간의 경제위기를 추스리기 위해 실질적인 정책의 변화 또는 복구를 시도했던 1998년 이후 현재까지의 시기이다.

## 1. 1982~1993년: 북한 경제정책 변화의 시발점

1960년대 이후 북한당국이 매우 통제적인 배급경제체제를 유지해 왔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식량 및 주요 소비재에 대한 배급제를 통해 모든 경제주체의 소비행위를 중앙의 계획당국이 직접 통제해 왔고, 이러한 배급제를 유지하기 위해 농업부문의 생산, 분배, 유통 역시 국가가 장악했을 뿐만 아니라, 산업부문의 모든 경제행위 또한 중앙화된 행정기구를 통해 통제하는 사회주의 배급경제를 유지한 것이다.<sup>1</sup>

<sup>1</sup> 과거 북한의 경제 시스템과 그 성과에 대해서는 Chung, J-S., *The North Korean*

그런데 이처럼 통제적인 배급경제에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 것은 1982년부터였다. 이 해를 기점으로 북한당국이 그간 식량배급제도에 전적으로 의존해 오던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집단적인 토지개간과 영농활동 일부를 허용하는 한편, 당시까지 거의 사라졌던 농민시장을 1일장으로 복원시켜 평양 등 주요 대도시에 그 설립을 허가하는 새로운 실용정책을 선보였기 때문이다.<sup>2</sup> 이러한 실용정책은 그 후에도 이어져 1984년의 경우 경공업 분야에서 8.3 인민소비품 생산운동이 시작되었으며, 농민시장 역시 그 규모와 범위가 빠르게 확대되어 북한의 거의 모든 군에서 3~4개의 시장이 개설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러한 실용정책이 기존의 통제적인 배급경제의 변화를 목적으로 하거나 또는 그것의 현실적인 기능약화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었다. 실제로 북한은 1980년대 초반까지 식량의 자급자족 목표를 거의 달성하였으며, 이를 반영하듯 해외와의 식량교역에서 국내의 주요 배급품목인 쌀과 옥수수를 수출함으로써 소곡의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었다. 다만, 이러한 자급자족 정책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국내의 식량생산 거의 전부가 상대적으로 수확량이 높은

---

*Economy* (Stanford, Hoover Institution Press, 1974)와 양문수, 『북한경제의 구조』 (서울대 출판사, 2001)가 자세하다. 특히 북한의 배급제 형성 과정과 그 운영 및 성과에 대한 평가에 관해서는 Lee, Suk, "Food Shortages And Economic Institution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PhD Thesis, University of Warwick, 2003)을 참조하라.

<sup>2</sup> 이에 대해 한 탈북자는 다음과 같은 증언을 하고 있다.

“이러한 경황하에서 어쩔 수 없이 김부자는 1982년 가을 “개인별이 아닌 집단별로 빈 땅을 뚜져(개간하여) 부업농사를 해서 식량보충과 식생활 개선을 한 데” 대한 지시를 내렸다. 강냉이 밭에 강냉이로 만든 된장만 먹는 주민들에게 오폭밥과 콩된장을 해서 먹으라는 권한을 주민에게 부여한 것이다… 집단별 부업밭에서 생산한 농산물들이 자기들에게 직접 돌아온다는데 일할 재미가 붙은 주민들은 열성적으로 나서다 못해 한편으로는 슬금슬금 개인적인 부업농사에도 맛을 들이기 시작하였다” (리민복, “북한주민들의 개인화와 체제 변화 가능성,” 『북한』 (북한연구소, 1996.7), pp. 95~96).

쌀과 옥수수에 편중됨으로써 국내 경제주체들의 식량소비패턴이 극히 단순해지는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1982년 시작된 북한의 실용정책은 쌀과 옥수수를 중심으로 하는 기존의 배급제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각 경제주체들로 하여금 콩이나 채소 등 여타의 작물을 경작, 식량소비패턴을 다양화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정책이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sup>3</sup>

그러나 이러한 실용정책의 성격은 1987년을 기점으로 근본적으로 변화하게 된다. 이 해 북한당국은 1973년 이후 변동 없이 유지되던 주민들에 대한 식량배급을 일괄적으로 10%씩 삭감하는 대신, 이를 보상하기 위해 산업부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소규모의 텃밭 보유를 허용하였고, 각 국영 기업체들을 통해서는 종업들에게 공식적인 영농 시간을 배정해 줄 것을 지시하였다. 1982년 실시된 유사한 정책이 배급제에 기초한 주민들의 식량소비 패턴 다양화를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면, 이번에 실시된 정책은 배급제의 기능 약화를 반영하여 주민들의 식량소비수준 보호를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은 곧바로 부작용을 불러왔다. 각 경제주체들이 개인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주변의 토지를 무단으로 경작, 주요 배급품목인 옥수수 등 곡물을 생산·소비·유통시켰고, 이로 인해 공식적인 배급제의 기능이 더욱 약화되는 악순환이 초래된 것이다. 따라서 북한당국은 1990년대 초반까지 기존 배급제의 기능약화를 방지하기 위해 일련의 규제조치들을 새로이 내놓게 되었다. 1987년 농민시장을 종래의 1일장에서 7~10일장으로 환원시키고 거래품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 것을 계기로, 1989년에는

---

<sup>3</sup> 이러한 논점에 대해서는 Lee, Suk, "Food Shortages And Economic Institution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pp. 22~24를 참조하라.

김일성 명의로 ‘인민생활향상 3개년 계획’을 제시하는 것과 동시에 불법적인 토지경작을 금지하였으며,<sup>4</sup> 1992년에는 이른바 ‘비사회주의 타파 그루빠’ 등을 조직해 농민시장과 불법적인 토지경작을 단속하는 실행행사에 나섰다.<sup>5</sup>

그러나 1990년대 들어 북한의 식량사정은 계속 악화되었고 이로 인해 공식적인 배급제의 기능은 더욱 약화되었다. 1991년부터 전 주민을 대상으로 소위 ‘하루 두끼 먹기’ 운동이 시작되었으며,<sup>6</sup> 1992년에는 군인과 중노동자를 제외한 주민들의 식량배급이 다시 10%씩 감량 되었고,<sup>7</sup> 1993년에는 태국과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긴급식량확보가 추진되는 등 비상상황이 초래되었다.<sup>8</sup> 이에 따라 기존의 농민시장은 당국의 감시를 피해 ‘유동장’이라는 형태로 암시장화 하기 시작했으며, 1992년부터는 남포 등 대도시에서조차 주요 배급품목인 쌀이 농민시장에서 거래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sup>9</sup> 이처럼 식량사정이 계속 악화되고 농민시장에 대한 통제불능 상태가 지속되면서, 1993년을 기점으로 북한당국의 경제정책 역시 다시금 실용적인 유화정책으로 변모하게 된다. 암시장화 하던 농민시장을 다시 1일장으로 환원시켜 합법적인 거래공간을 만들어 주는 대신, 장세를 부과하고 공업제품 등 금지된 거래품목을 규제하는 등의 체제내

<sup>4</sup> 리민복, “북한주민들의 개인화와 체제 변화 가능성,” p. 98.

<sup>5</sup> 이에 대한 자세한 검토는 전홍택, 『북한의 비계획 경제부문: 제2경제의 기능과 역할』 (KDI, 1998.10)을 보라.

<sup>6</sup> Noland, M. Robinson S and Wang T., “Famine in North Korea: Causes and Cures,”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rual Change*, Vol. 49, No. 4 (2001)

<sup>7</sup> 오경찬, 『북한의 식량난 해결할 수 있다』 (서울: 대왕사, 1997), p. 145.

<sup>8</sup> 일본의 라디오프레스가 발행하는 월간지 『北朝鮮 政策動向』은 1990년대 중후반 북한의 식량사정에 대한 자세한 사건일지를 기록하였다 (『北朝鮮 政策動向』, No. 12, 1993).

<sup>9</sup> 김영윤, “북한 암시장의 사회경제적 역할,” 『통일연구논총』, Vol. 6, No. 1 (서울: 통일연구원, 1997).

화 노력이 시작되었다. 생존을 위한 주민들의 불법적 토지경작 역시 사실상 묵인하는 정책 역시 실시되었다.<sup>10</sup>

## 2. 1994~1997년: 시스템의 와해와 새로운 전환의 필요성

북한의 경제정책은 1994년을 기점으로 커다란 요동을 경험하게 된다. 이 해부터 북한의 경제위기가 본격화되면서 기존의 모든 경제적 시스템이 작동을 중지하는 제도적 공황상태가 초래되었기 때문이다. 북한의 공식통계에 따르면, 1994년 북한의 GDP는 총 154억 달러로 전년에 비해 무려 25%가 하락했다. 이러한 GDP의 하락추세는 1990년대 중후반 더욱 악화되어 1996년의 경우에는 106억 달러 수준에 불과하게 된다. 1993년 북한의 GDP가 210억 달러 내외였다는 점을 상기하면, 불과 3~4년 만에 북한의 총산출량 수준이 절반 이하로 급락했다는 의미이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GDP의 하락은 북한의 주요 산업이라 할 수 있는 공업과 건설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실제로 1996년 북한의 공업 및 건설업 생산량은 1993년 수준에 비해 1/3 수준으로 떨어졌다. 문제는 1990년 후반까지 공업과 건설업을 위주로 하는 북한의 노동력 고용구조가 전혀 변화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1993년의 경우 북한의 공업과 건설업은 전체 노동력의 42%를 고용하고 있는 최대 산업부문이었고, 이러한 고용구조는 1999년까지 거의 변화하지 않았다. 따라서 1990년

<sup>10</sup> 내외통신사, 『북한실상 종합 자료집』 (내외통신사, 1995), pp. 71~72 및 전홍택, 『북한의 비계획 경제부문: 제2경제의 기능과 역할』, pp. 9~10.

<표 II-1> 북한의 거시경제 지표: 1990~2000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GDP (공식통계, 億 달러)	전체			208.8	209.4	154.2	128.0
	농업			78.1	82.3	64.3	52.2
	공업			45.5	46.9	32.2	22.3
	건설			13.1	12.6	9.1	8.2
	기타			71.6	67.6	48.6	45.3
Cf. 한국은행 추정치		231	229	211	205	212	223
곡물생산 (공식통계, 백만 MT)	알곡	9.10	(8.90)	(8.80)	(9.00)	7.08	3.50
	쌀+옥수수	8.38	8.29	8.17	8.69	6.66	3.37
무역총량 (億 달러)	한은 추정	46.4	27.2	26.6	26.4	21.1	20.5
출생률 (공식통계)	1000명당	22			20		
사망률 (공식통계)	1000명당	5.9			5.5	6.8	

		1996	1997	1998	1999	2000
GDP (공식통계, 億 달러)	전체	105.9			102.7*	105.9*
	농업	47.8				
	공업	15.6				
	건설	5.1				
	기타	67.5				
Cf. 한국은행 추정치		214	177	126	158	168
곡물생산 (공식통계, 백만 MT)	알곡	2.50	2.69	3.20	4.28	3.26
	쌀+옥수수	2024	2.58			
무역총량 (億 달러)	한은 추정	19.8	21.8	14.4	14.8	19.7
출생률 (공식통계)	1000명당	20.1		13.8	13.2	13.4
사망률 (공식통계)	1000명당	6.8		5.3	5.2	5.2

\* 1999, 2000년은 GDP가 아니라 GNP 통계임.

( )는 평양방송이 발표한 곡물 생산량임.

- 출처) 1. DPRK, *Core Document Forming Part of The Reports of State Parties* (United Nations Human Rights Instruments, 24 Jun 2002).  
 2. DPRK/UNDP, *Thematic Round Table Meeting on Agricultural Recovery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For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Geneva, 28~29 May 1998* (UNDP, 1998).  
 3. 한국은행, 「북한 GDP 추정 결과」 (한국은행, 각년도).

<표 II-2> 북한의 산업구조, 1993~1999

(1,000명)

	농업	공업	건설, 토목	교통, 통신	상업, 수매	문화, 교육, 보건	토지 및 도시행정	기타	계
1993	3,381 (30.7)	4,118 (37.4)	464 (4.2)	402 (3.7)	508 (4.6)	843 (7.7)	250 (2.3)	1,034 (9.4)	11,004 (100.0)
1995	3,454	4,284	460	415	514	863	258	-	-
1999	3,567	4,410	482	434	529	886	265	-	-

\* ( )는 구성비

출처) 1. DPRK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Tabulation on the Population Censu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31 December 1993)* (DPRK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1995).

2. DPRK, *Core Document Forming Part of The Reports of State Parties.*

대 중후반 북한의 공업과 건설업 생산량이 종래의 1/3 수준 이하로 급락했다는 사실은 북한 노동력의 대다수를 점하고 있는 이들 부문에서 최고 60~70%의 노동력이 사실상 실업상태로 전락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농업의 경우에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1993년 900만 톤에 이르던 북한의 곡물생산량이 1996년 250만 톤까지 떨어졌고, 그 결과 1994년부터 공식 사망률이 점프하는 기근(famine) 현상이 일반화되었다. 이로 인해 도시의 산업부문에서는 대다수 노동자가 실업자로 전락하여 이들을 통제하던 기존의 중앙집중적 행정명령경제가 작동을 멈출 수밖에 없었을 뿐만 아니라, 농업부문에서의 식량생산 실패로 인해 기존의 배급체계 또한 작동이 중지됨으로써 모든 주민이 생존을 위해서는 체제 밖의 새로운 생계원천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었다. 실제로 1998년 한국 통일부가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식량을 중심으로 한 북한주민들의 소비행위 60~70%가 체제 밖의 농민시장이나 암시장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up>11</sup> 이것은 모든 주민들의 경제행위를 국가가 직접 통제하는 것을 그 목적

으로 하여 구성된 기존 북한의 경제 시스템이 1990년대 중후반 사실상 완전히 붕괴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당국은 이러한 기존 경제시스템의 와해에 대응하기 위해 1994~1997년 사이에 여러 가지 새로운 경제정책을 시도하였다. 무엇보다 북한당국은 기존 배급제도의 변화 또는 재정비에 나섰다. 지속적인 식량생산의 실패로 더 이상은 국가에 의해 충분한 식량배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식량배급에서 국가가 차지하는 부담을 제도적으로 완화시키고자 시도한 것이다.<sup>12</sup> 이로 인해 과거 국가, 특히 중앙정부의 몫이라고 인식되던 식량배급의 책임을 지방정부, 심지어는 기업에까지 분담시켜 배급의 주체가 삼원화 되었다. 이는 모든 주민이 지역이나 소속 등에 관계없이 국가에 의해 균등한 식량배급을 받는다는 기존의 원칙이 수정됨으로써 이제는 지역이나 소속기관의 사정에 따라 차등적인 식량배급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또한 북한당국은 이러한 배급제도의 변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의 중앙-지방-기업간의 관계에도 일정한 변화를 시도하였다. 식량의 생산과 분배, 유통에 관한 지방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과거 중앙정부가 일률적으로 행사하던 외국무역의 권한을 지방정부, 심지어는 개별 기업에까지 허용하였다. 이는 기존의 중앙집중적 경제관리로부터 벗어나 경제적 분권화의 단초가 마련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배급제도의 변화는 주민들의 사적인 식량과 (농민)시장에 대한 북

<sup>11</sup> 통일부, “최근 북한농민시장의 실태와 가격동향분석 (보도자료)” (통일부: 1998. 12).

<sup>12</sup> 『중앙일보』, 1995년 5월 28일. 당시 북한정부는 道차원에서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식량을 수입해 배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러한 권한은 이후 기업의 차원에까지 확대되었다.

한당국의 정책에도 변화를 몰고 왔다. 1994년 이후 농민시장에 대한 모든 규제가 사실상 철회되었으며, 식당이나 좌판과 같이 시장에서의 식량유통을 돕는 사적인 이윤추구행위는 당국에 의해 오히려 권장되기도 하였다. 주민들의 텃밭 경작은 물론 폐기밭 등 불법적인 토지의 경작행위 역시 사실상 묵인되었고, 심지어는 공장 또는 협동농장 단위로 집단적으로 폐기밭을 개간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었다.

농업부문에서는 식량증산을 위한 새로운 협동농장 관리제도들이 도입되었다. 1996년에는 기존의 협동농장 관리제도의 두 축을 이루던 작업반 우대제와 분조관리제가 폐지되고, 이를 대체하는 新분조관리제가 실시되었다.<sup>13</sup> 新분조관리제의 핵심은 농장원들이 국가의 생산 목표를 초과하여 생산한 식량에 대해서는 자율적 처분권을 갖는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1952년 ‘모든 식량(곡물)은 국가만이 거래할 수 있다’는 내각명령을 통해 확립된 국가적 곡물통제권이 사실상 해체된 셈이었다. 또한 1997년부터는 기존의 주체농법을 재해석함으로써 쌀과 옥수수 위주의 농업생산을 감자나 보리, 콩 등 기타 작물에 대한 생산으로 다변화 시키고, 각 협동농장의 작물선택권 역시 협동농장 스스로에게 일부 이양하는 조치가 실시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그 후에도 이어져 1990년대 후반 나진선봉 지역 협동농장의 경우 작물선택권과 종자선택권을 스스로 가지고, 내부에서 선출된 위원장을 통해 농장을 자율 경영해 나가는 새로운 실험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sup>14</sup>

<sup>13</sup> 이에 대해서는 『조선신보』, 1997년 7월 30일 및 김연철, 『북한의 배급제 위기와 시장개혁 전망』 (삼성경제연구소, 1997)을 참고하라.

<sup>14</sup> 1990년대 후반 북한이 협동농장을 대상으로 더욱 많은 자율권을 부여했다는 사실은 여러 외부 관찰자들에 의해 목격되었는데, 대표적으로 WFP/FAO, *Special Report-FAO/WFP Crop and Food Supply Assessment Mission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WFP/FAO, 8 November 1999)를 보라.

마지막으로 이 기간 중 북한당국은 이미 와해되어버린 기존의 경제시스템을 대체할만한 새로운 경제시스템을 모색하는 데 적극적으로 있었다. 이러한 모색은 크게 두 가지의 방향으로 이루어졌는데, 하나는 시장경제적 요소의 도입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세계경제로의 편입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1996년 북한 외무성의 김정우는 미국의 한 대학에서의 강연을 통해 “북한경제를 회생시키는 데 필요하다면 그간의 자립경제원칙에서 벗어나 국제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경제정책 전반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sup>15</sup> 1997년 북한 농업위원회의 정장시 역시 베트남의 경제정책을 언급하면서 “북한은 농업생산성 증대와 식량문제의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면 농산물 가격 구조의 전반적 재조정이나 소규모 농업시장 도입 및 자유화와 같은 시장화 조치를 실시할 수도 있다”고 말하였다.<sup>16</sup> 이러한 북한당국의 태도는 곧바로 나진선봉지구에서의 경제적 실험으로 나타났다. 1997년을 기점으로 나진선봉 지역에서 식량의 국정가격이 폐지되고, 곡물의 국가배급제도가 폐지되었으며, 이에 상응하여 노동자들의 월 급여액 또한 3,000~4,000원으로 3~40배 인상된 것이다.<sup>17</sup> 따라서 이 지역 노동자들은 이제 더 이상 국가의 배급이 아니라 자신들의 인상된 월급여를 이용해 필요한 물품을 시장에서 시장가격(당시 쌀 kg당 60원)으로 구매할 수밖에 없는 새로운 경제적 환경이 조성되었다.

<sup>15</sup> 『北朝鮮 政策動向』, No. 6 (1996), pp. 56~57.

<sup>16</sup> 황동인, “북한 식량난과 남북한 농업협력,” 『통일경제』 (1998.5), p. 86.

<sup>17</sup> 『조선일보』, 2002년 7월 19일 (경제특구 나진선봉, 6년전 배급제 폐지).

### 3. 1998년~현재: 제도의 개혁인가 시스템의 복구인가?

1998년을 기점으로 북한당국은 기존의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본격적인 정책적 대응방안을 내놓기 시작하였다. 실제로 우리가 개혁이라고 부르는 북한경제의 변화는 대부분 1998년 이후 현재까지 나타난 이러한 북한당국의 새로운 정책대응에 다름이 아니다.

#### 1998년: 新헌법의 도입

1998년은 계속되는 북한의 경제위기가 조금씩 호전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한 해였다. 물론 이 해 북한의 GDP는 전년에 비해 여전히 소폭 하락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sup>18</sup> 그러나 이 해 북한의 곡물생산은 전년의 270만 MT 수준에서 320만 MT로 20% 가까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북한당국은 종래 거의 중단되었던 국가적 식량배급을 재개하는 등 새롭게 ‘경제 창기기’에 나섰다.

북한당국의 ‘경제 창기기’는 1990년대 중반 거의 통제불능 상태로 빠져들었던 사회질서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되었다. 1996년 6월에 새로운 주민등록증이 도입되었으며, 9월에는 차표와 여행 허가증 없이 여행을 하는 주민들에 대한 통제가 시작되었고, 이러한 규제를 바탕으로 새로이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을 선출하는 전국적인 선거가 실시되었다. 새롭게 선출된 최고인민회의는 이후 북한 경제정책의 방향을 규정하는 ‘1998년 신헌법’을 제정하였다.<sup>19</sup>

<sup>18</sup> 1997년과 1998년의 경우 북한의 공식 GDP는 발표되지 않았다. 다만,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북한 GDP 추정치에 따르면 이 해 북한의 경제는 전년에 비해 여전히 침체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sup>19</sup> 북한의 신헌법의 전문과 그 변화내용에 대해서는 장명봉 편, 『김정일체제하의 최근 북한 법령집』(서울: 북한법연구회, 2005)을 보라. 이 밖에 북한당국이 발간한

1998년 신헌법은 북한의 경제정책 또는 경제제도와 관련하여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먼저 그것은 1980년대 후반 이후 북한당국이 실시한 여러 가지 정책적 변화들을 사후 추인하여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예를 들어, 과거 헌법은 식량과 관련된 텃밭의 경작을 협동농장원만이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신헌법에서는 이러한 협동농장원에 대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사실상 전 주민이 텃밭경작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화 하였다. 또한 과거 국가만이 수행할 수 있었던 대외무역의 주체를 국가와 사회협동단체로서 분할, 명시함으로써 기업의 대외무역 권한 역시 제도화 하였다. 한편 협동농장이 소유할 수 있는 생산수단을 종래의 농기구에서 농기계로 확대함으로써 국가의 협동농장 통제권 약화를 수용한 것도 신헌법의 중요한 특징이었다.

그러나 신헌법의 두 번째 중요 내용은 그간의 북한경제를 떠받치고 있던 사회주의 경제질서 자체에는 그 어떤 변화도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신헌법은 북한경제가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와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 위에 구축되어 있으며, 모든 소유권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에만 귀속되고, 모든 경제적 발전은 사회주의 경제발전의 경로에 따른다는 등의 경제체제와 관련된 기본 내용들에 있어서는 과거와 완전히 동일하였다. 이는 1980년대 이후 비록 북한당국이 거듭되는 경제난으로 일부 경제정책의 변화를 꾀하고는 있지만 그것이 결코 사회주의적 경제질서 자체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신헌법은 이러한 사회주의 경제질서 자체의 변화에는 반대하지만 그 질서의 운영방법과 관련해서는 북한당국이 새로운 방

---

법률출판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법전 (대중용)』 (평양: 법률출판사, 2004)에도 북한의 헌법과 최근 제·개정된 각종 법률이 망라되어 있다.

식을 모색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적으로 신헌법에는 과거 헌법에서는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경제 용어들이 삽입되었는데, 그것은 ‘독립채산제’, ‘원가’, ‘가격’, ‘수익성’과 같은 용어들이다. 이미 언급한대로 1960년대 이후 북한은 매우 통제적인 배급제 경제를 유지해 왔고, 이러한 배급제 경제에서는 원가나 가격, 수익성과 같은 경제적 개념들은 사실상 무의미한 것들이다. 따라서 북한당국이 1998년 신헌법에 이러한 경제 용어들을 새로이 삽입했다는 사실은 향후의 경제정책이 과거와 같은 통제적 배급경제에서는 벗어난 새로운 경제원리에 의해서 작성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었다.

북한당국이 향후의 경제정책을 어떤 원리에 입각하여 끌고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해 12월 북한과 UNDP가 공동으로 주최한 ‘북한의 경제재건과 농업복구를 위한 원탁회의’가 매우 시사적이었다.<sup>20</sup> 이 회의에서 북한은 “현재 오스트레일리아 등 서구 각국에 경제전문가를 파견하여 시장경제제도를 학습하고 있으며, 농업 부문에서는 경작지 일부에 대해 실질적 사유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sup>21</sup> 한국 정부 또한 북한이 1998년 들어 100여 명의 경제관료를 홍콩 등지에 파견하여 시장경제를 배우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는 비록 북한이 기존의 사회주의 경제질서 자체를 포기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사회주의 경제질서 자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라도 일정부분 시장경제적인 요소를 적극 도입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sup>20</sup> 이 회의의 구체적 의제와 논의 내용에 관한 보고서는 이후 DPRK/UNDP, *Thematic Round Table Meeting on Agricultural Recovery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For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Geneva, 28~29 May 1998*라는 형태로 발간되었다.

<sup>21</sup> 『北朝鮮 政策動向』, No. 12 (1998), p. 34.

## 1999년: 경제제도의 재정비

북한당국의 경제 챙기기는 1999년 들어 더욱 구체화되었다. 이 해 들어 한국은행은 북한의 GDP가 수년래 처음으로 (+)의 성장세를 기록했다고 추정하였으며, 북한당국 역시 10월의 평양 방송을 통해 이 해 3/4분기의 공업생산량이 전년동기에 비해 19%나 상승했다고 밝히는 등 경제회복에 자신감을 보이기 시작했다.<sup>22</sup> 이러한 자신감을 토대로 북한당국은 1998년 신헌법의 경제적 내용을 구체화하는 일련의 경제입법 작업에 돌입하였다.

먼저 1998년 12월에 농업법이 제정되었다.<sup>23</sup> 농업법은 1990년대 중반 이후 거의 형해화된 사회주의적 농업관리제도를 재정비하는 동시에 농업부문에서 일어난 일련의 정책적 변화를 제도화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 특히 후자의 목적과 관련하여 북한당국은 2002년 6월에 이 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종래의 작업반우대제와 분조관리제에 대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1996년 실험적으로 도입된 신분조관리제에 대한 제도화의 길을 열었다.

한편, 1999년 4월에는 새로이 인민경제계획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기존의 사회주의적 경제질서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1998년 신헌법의 정신을 구체적인 경제법의 형태로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었다. 이처럼 기존 사회주의 경제질서의 회복을 위한 법제정과 더불어 새로운 경제관리의 원칙 또는 그에 기반한 경제정책의 수립을 위한 법 제정 또한 시도되었다. 그 대표적인 것이 1997년 제정된 ‘가격법’을 이 해 8월 새로이 개정한 것이다. 개정된 ‘가격법’은 공식 가격의 제정권

<sup>22</sup> 『北朝鮮 政策動向』, No. 12 (1999), p. 9.

<sup>23</sup> 이 당시 북한이 제·개정된 각종 법률의 원문과 그 변화 내용에 대해서는 장명봉 편, 『김정일체제하의 최근 북한법령집』을 보라.

한을 기존의 중앙 및 지방정부로부터 중앙 및 지방의 기관, 기업소, 단체 등으로 대폭 확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는 1990년대 중반 시도된 경제관리체계에서의 중앙-지방-기업의 관계변화를 수용하고, 각 지역 및 기업차원에서의 분권화된 경제관리 능력 제고를 제도화했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 2000년: 기업조직의 재편과 그 의미

이처럼 1999년 말까지 일련의 경제입법을 통한 당국의 경제 창기가 일단락 되면서, 북한은 2000년 들어 새로운 기업형태의 도입 또는 기존 산업조직의 재편 작업에 박차를 가하였다. 물론 이러한 산업조직의 재편은 1998년 말 이미 시작된 것이었다. 그러나 2000년 들어 이것이 보다 구체화된 형태로 최종 완성된 것이었다.<sup>24</sup>

이 해 완성된 북한의 기업조직 개편 내용을 간단히 표현하면, 종래 북한경제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했던 ‘연합기업소’나 ‘종합기업소’, ‘관리총국’ 등을 개별 공장 또는 기업소 단위로 분리 해체함으로써, 한편으로는 각 기업의 재산성을 높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들에 대한 행정당국의 직접적 통제를 더욱 강화하려는 것이었다. 연합기업소 등은 지리적으로 또는 생산기술적으로 상호 연관관계가 높은 여러 기업들을 하나의 경영단위로 통합한 기업조직형태를 말한다. 이러한 형태는 1990년대 후반까지 ‘김책제철연합기업소’나 ‘대안중기연합기업소’처럼 북한의 거의 모든 주요 기업들을 총망라하는 기업형태로 자리를 잡았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북한의 경제위기가 본격화되면서

<sup>24</sup>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통일부, 『주간 북한동향』, 제 474호 (2002년 2월 12일~2월 18일)에 게재된 “북한의 산업조직개편동향”을 참고하라.

이들 기업형태와 관련된 두 가지의 커다란 문제가 발생하였다. 하나는 재산성의 악화였으며, 다른 하나는 정부 통제력의 악화였다. 별개의 기업들을 하나의 경영단위로 묶으면서 이들 기업들간의 거래가 내부거래로 전환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개별 기업의 수익성 추구 약화와 자원 낭비 그리고 관리조직의 비대화에 따른 재산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또한 이들 연합기업소 등이 하나의 독립적 계획단위로 기능하면서 정부의 경영통제력이 이완됨으로써 심지어는 중앙 정부에 납부해야 할 기업소 자원이 내부에서 자체 소진되는 등 정부의 자원 통제력 역시 급격히 악화되었다. 이에 따라 북한당국은 이들 연합기업소 등을 각각의 개별 공장 또는 기업소 단위로 분리함으로써, 한편으로는 개별기업에 대한 재산성의 확대를 강조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들 기업들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 통제력 회복에 나선 것이다.

이러한 기업조직의 재편은 북한당국의 경제정책 변화라는 측면에서 매우 시사적인 것이었다. 무엇보다 이러한 재편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상당한 시간을 두고 철저한 준비 하에 이루어졌다. 또한 그 재편 대상도 북한의 주요 산업체 거의 전부를 망라하는 대규모적인 것이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재편의 목적이 이제까지 북한의 경제관리체계에서는 상대적으로 도외시 되었던 기업의 수익성 확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세 가지 사실을 종합해 볼 때, 1998년 이후 북한당국은 위기에 빠진 기존의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재생시키기 위해 ‘수익성’이라는 보다 시장경제에 가까운 새로운 기준으로 전체 경제체제를 재구축하려 시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분명해졌다.

## 2001년: 새로운 경제관리 원칙의 등장

이처럼 1998~2000년 사이에는 북한경제정책의 새로운 밑그림이 그려졌고, 또 그 가운데 일부 중요 정책들은 기업조직 재편 등을 통해 이미 현실화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2001년에는 이들 정책들을 종합하여 하나의 새로운 ‘경제관리모형’ 또는 ‘경제관리이론’으로 제시하려는 시도가 나타났다. 이른바 ‘2001년 김정일의 경제메모(또는 지시)’가 등장한 것이다.

이 해 10월 김정일은 당과 내각에 경제정책과 관련된 일종의 비밀 지시를 내렸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당국이 조심스럽게 추진해온 여러 실험적 경제정책들을 집대성하여 한층 발전시키는 것이었다.<sup>25</sup>

우선 계획 및 경제의 분권화에 대한 강조가 이루어졌다. 중앙정부는 군수산업 등 전략적으로 중요한 기간산업을 제외한 여타의 산업을 과감히 지방으로 이전하여야 하며, 이를 토대로 계획지표의 설정과 실행 역시 중앙정부-지방정부-기업들이 각자의 수준에 맞게 분담하여 독립적으로 추진하는 경제질서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경제질서에서는 가격의 제정권한 역시 최하 지방공장으로까지 확대되어야 하며, 분권화된 경제질서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 경제주체의 책임과 권한의 한계가 보다 분명해져야 한다. 따라서 경제관리 역시 내각과 중앙경제기관이 중심이 되어, 각 지방과 기업의 경제활동을 철저히 감독하는 한편, 이들 내각과 중앙경제기관이 다시 당과 국가에 책임을 지는 내각 중심·경제관료 중심의 경제운영이 강조되었다.

---

<sup>25</sup> 『중앙일보』, 2002년 8월 2일.

경제의 분권화와 더불어 기업의 수익성 제고와 이를 위한 자율성 확보 또한 강조되었다. 이제 기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수익성을 확보하는 일이며, 이를 위해 기존의 양적인 생산량 중심의 경영에서 질적인 생산물 중심의 경영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고, 이러한 기업의 수익성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별 기업에까지 독립채산제를 철저히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수익성 확보를 위해서는 개별 기업이 경영의 전분야를 합리적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자율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의 원활한 생산활동과 수익성 제고를 위해 사회주의 물자교류 시장의 창설 필요성 또한 제기되었다. 종래 계획당국의 일방적 명령에 의해 수행되던 기업간 물자공급을 각 기업이 생산량의 일정 부분을 여분으로 보유, 시장에서 교환함으로써 보다 효율화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이 경우 각 기업은 시장거래 물자에 대해 보다 탄력적인 가격을 적용함으로써 수익성 제고는 물론 생산확대의 인센티브까지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와 관련된 국가의 무상지원제도를 개선하고 임금 등 분배제도에 있어 생산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일이 강조되었다. 국가의 재정지원을 통해 거의 무상으로 지원되던 식량, 의료, 교육 등 제반 사회적 서비스의 가격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근로자의 임금 또한 단순히 생활안정을 위한 비용의 측면에서 일률적으로 균등 결정하기 보다는 각자의 근로형태와 질에 따라 차등 결정하는 등 분배에서의 평균주의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미 언급한대로 이상의 지시내용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정부가 실험적으로 추진해온 새로운 경제정책들과 그 궤를 같이한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도 특별한 주목을 끌었던 것이 바로 사회주의 물

자교류시장의 창설과 사회복지와 관련된 평균주의의 극복이었다. 이들 내용이 사회주의 경제에서의 시장의 존재와 기능에 대한 북한당국의 시각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그간 북한당국은 대안의 사업체계가 주장하는 중앙집중적 자재공급체계를 근거로 사회주의 기업활동에 있어서의 시장의 필요성을 부인해 왔다. 따라서 2001년 김정일의 경제관련 지시내용 가운데 사회주의 물자교류시장의 창설이 포함되었다는 사실은 이제 북한당국 역시 사회주의 경제의 기업활동에 있어서도 시장이 존재하고 또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의미였다. 또한 복지제도에서의 평균주의의 극복이란 일반 주민들의 경제생활과 관련해서도 시장의 기능과 역할을 적절히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었다. 국가가 거의 무상으로 지원하던 사회적인 서비스의 가격이나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적절히 재조정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들 가격이 시장에서 어떻게 통용되고 있는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2001년 김정일의 경제관련 지시내용은 북한당국의 시장에 대한 인식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고, 이러한 관심은 이들 지시내용이 2002년 현실로 구체화되면서 더욱 증폭되었다.

## 2002년: 7.1조치를 통한 新경제원칙의 실현

2002년 7월 북한은 ‘7.1조치’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진 새로운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발표하였다. 북한당국의 표현에 따르면 이 조치는 1945년 토지개혁에 비견할 만한 ‘혁명적’ 조치였으며, 이후 북한당국은 공공연히 경제개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등 ‘7.1조치’ 이후의 북

한경제가 이전의 북한경제와는 완전히 달라졌음을 강조하였다.<sup>26</sup>

발표된 ‘7.1조치’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였다.<sup>27</sup> 하나는 기존의 식량을 비롯한 공식가격체계를 당시의 시장가격체계에 맞게 전면(상향) 재조정한다는 것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이러한 공식가격체계의 상승을 상쇄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임금 역시 상향 재조정하는 것이었고, 나머지 하나는 이러한 임금과 물가의 변화를 반영하여 공식환율을 역시(하향) 재조정한다는 것이었다. 그 결과 ‘7.1조치’ 이전 킬로그램당 8전에 불과했던 공식 쌀 가격은 무려 550배가 오른 44원으로 상승하였고, 월평균 110월에 불과하던 일반 노동자의 임금 또한 18배가 났 2,000원으로 상승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가격수준의 전반적 상승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상대적 가격체계의 변화였다. 예를 들어, ‘7.1조치’ 이전의 공식가격 체계에서는 세수비누 한 개의 가격이 쌀 1킬로그램의 가격 보다 더욱 비쌌다. 그러나 ‘7.1조치’ 이후 세수비누의 가격은 종래의 2원에서 20원으로 인상되는데 그쳐 오히려 쌀과의 가격이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임금의 경우에도 사정은 비슷해서 중노동자의 임금인상률이 평균 20-25배인데 반해 일반노동자의 임금인상률 18배에 불과하는 등 근로형태별 임금구조에도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sup>28</sup>

한편, 이처럼 발표된 ‘7.1조치’의 내용과는 별도로 이 조치의 실질적 내용이 북한기업의 독립채산제 강화에 맞추어져 있다는 보고 또

<sup>26</sup> 남성욱·공선영, “2002년 북한의 임금과 물가인상에 따른 주민 생산 소비행태의 변화에 관한 연구” (고려대 북한학 연구소 제 4차 국제 학술세미나 발표자료, 2003.6.26).

<sup>27</sup> 『조선신보』, 2002년 7월 26일.

<sup>28</sup> 남성욱·공선영, “2002년 북한의 임금과 물가인상에 따른 주민 생산 소비행태의 변화에 관한 연구” 및 강일천, “7.1경제관리개선조치 1년의 평가와 재해석” (고려대 북한학 연구소 제4차 국제 학술세미나 발표자료, 2003.6.26).

한 등장했다. 이 조치를 계기로 북한당국이 ‘번 수입’ 지표 등 새로운 수익성 개념을 각 기업에 하달하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수익성 개념을 토대로 전체 경제를 꾸러 나가기 위해 2001년 말을 기준으로 북한 내 모든 기업의 부채를 동결, 손익상태를 영(零)으로 조정했다는 것이다.<sup>29</sup> 실제로 북한 무역성의 김용술은 2002년 9월 동경에서 개최된 경제정책 설명회에서 ‘7.1조치’의 주요 내용이 기업의 독립채산제를 강화하고, 가격 및 임금을 대폭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혀 이러한 보고를 뒷받침했다.<sup>30</sup>

‘7.1조치’의 주된 내용이 무엇이든 이 조치가 ‘2001년 김정일의 경제지시’를 실현하는 것이었음은 틀림없었다. 이를 계기로 1) 그간 국가가 거의 무상으로 제공하던 식량 등 사회적 서비스의 가격을 현실화하고, 2) 근로자의 임금을 재조정하여 분배에서의 평균주의를 극복하며, 3) 기업활동의 근간을 기존의 양적 생산에서 수익성으로 전환하려는 시도가 구체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이러한 ‘7.1조치’가 기존의 배급제를 철폐하고 북한에 본격적인 시장을 도입하려는 혁명적 조치로 이해되었다는 점이다.

물론 이와 관련해서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 그러나 당시 북한당국이 실시한 구체적인 정책의 전개과정을 보면, ‘7.1조치’는 북한에서의 본격적 시장의 도입이나 배급제의 철폐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실제로 이 조치 직후 북한당국은 UN산하 구호기관 등을 대상으로 향후에도 배급제는 지속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더욱이 북한당국은 이 조치 직후 그간 관행적으로 묵인되어 오던 농민 시장에서의 곡물거래를 전면 금지시키고자 시도했을 뿐만 아니라, 개

<sup>29</sup> 양문수, “역사적 관점에서 본 7.1경제관리개선조치,” 『7.1경제관리개선조치 현황 평가와 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3), p. 59.

<sup>30</sup> 김용술, “북한경제정책 설명,” 『KDI 북한경제리뷰』 (서울: KDI, 2002.10).

인들이 불법 경작하고 있는 폐기밭 등을 몰수하는 등 식량의 사적 생산에까지 제재를 가하고자 하였다.<sup>31</sup> ‘7.1조치’로 시장의 성장을 유도한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그간 체제 밖에서 발전해 온 시장의 성장을 가로막아 과거로 회귀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7.1조치’는, 한편으로는 공식가격체계를 당시의 시장가격수준으로 끌어 올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식량 등 주요 물자의 시장유통을 차단함으로써 기존에 형해화된 배급제를 복구하려는 목적이 더욱 컸다고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만일 이러한 배급제의 복구가 실현된다면, 생존을 위해 체제 밖의 시장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던 대다수 북한 주민들이 다시 체제내부의 기업으로 회귀할 것이고, 이들의 노동력과 재산성을 위주로 한 새로운 경영원리로 체제내 기업활동이 다시 활성화된다면, 북한경제의 전반적 회복 역시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당국이 기대했던 ‘7.1조치’의 성과는 충분히 나타나지 않았다. 정반대로 배급제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장을 규제함에 따라 식량을 중심으로 한 시장가격 수준은 더욱 급격히 상승하였고, 그 결과 ‘7.1조치’ 이후의 공식가격체계와 시장가격체계의 괴리수준은 그 이전보다 오히려 더욱 확대되었다. 이로 인해 ‘7.1조치’ 이후 조정된 근로자들의 임금수준은 그 실질 구매력이라는 측면에서 전보다 더욱 크게 하락하였고, 이는 다시 대다수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체제 안의 기업에서 이탈해 체제 밖의 시장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악순환이 초래되었다.

<sup>31</sup> 『조선일보』, 2002년 9월 10일; 2002년 10월 1일.

<표 II-3> 북한당국의 (농민)시장 정책변화 추이

	정 책 변 화
1945~1959	모든 군과 노동자 구에서 1일장으로 존재
1959~1981	10일장(1일, 11일, 21일 개최), 평양 등 특별시에서는 불허
1982	1일장으로 환원, 특별시에도 개설 허가
1984	각 군에서 1~2개의 추가 시장 개설 허용, 각 군 평균 3~4개의 시장 존재
1987~1989	시장의 수와 기능을 제한 (비인가 시장 철폐, 87년 1일장을 7일장으로, 89년 다시 10일장으로 전환)
1989~1993	암시장인 '유동장'의 확대에 따른 비사회주의 타파 그루빠 운영
1993	시장 자유화 (10일장을 1일장으로 환원, 곡물을 포함한 모든 식량거래를 사실상 묵인)
1994~1998	전체 시장의 수 300~350여 개로 확대, 곡물 및 공산품 등 모든 물품에 대한 거래 사실상 묵인
1999	불법적인 시장을 철폐하고 주민들을 직장으로 회귀시키라는 김정일의 지시
2002	시장에서의 곡물거래 금지 (30평 이상의 불법적 돼기밭 강제 몰수) 시도
2003	농민시장을 종합시장으로 개편 (곡물 등 거의 모든 물품 거래 합법화)
2005	종합시장에서의 곡물거래 금지 (식량배급제 정상화) 추진

### 2003년~현재: 시장화인가 기존 시스템의 복구인가?

이러한 '7.1조치'의 부작용으로 인해 북한당국은 2003년 초반 기존 시장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를 체제 안으로 끌어들여야 하는 새로운 정책적 전환을 모색하게 된다. 이 해 3월 조선중앙통신은 종래의 농민 시장이 (종합)시장으로 변모하여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보도 하였으며, 이러한 현상은 노동당 중앙위원회가 각 시도에 기존의 시

장을 종합시장으로 인정하고 그 거래품목을 확대하는 대신 지방의 행정기관이 장세를 징수하고 전반적인 시장거래를 감독하라는 지시를 내린 때문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sup>32</sup> 또한 이 해 5월 들어서는 시장에서 활동하는 사영 기업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수를 자유로이 확대하는 새로운 정책 역시 실시되었다.

북한당국의 이러한 정책 전환으로 인해 2003년 이후 ‘시장’은 북한 주민들의 일상적 경제행위 대부분을 장악하는 가장 중요한 경제기구로 등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평양을 비롯한 북한의 전 지역에 합법적인 시장이 개설되어 있으며, 곡물을 비롯한 거의 모든 재화가 이들 시장에서 자유로이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sup>33</sup> 그러나 이처럼 시장이 확대되고 그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시장을 중심으로 한 지역별·계층별 격차 역시 확대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시장물가의 상승으로 인해 종래 배급제의 보호를 받던 많은 한계계층들의 소비생활에도 문제가 생겼다는 보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sup>34</sup>

한편 북한당국은 이러한 시장친화적인 정책과 더불어 시장을 이용한 기존 계획경제의 복구 노력 또한 기울이기 시작했다. 2003년 초반 인민생활공채를 발행해 주민들의 퇴장화폐(소득)를 공식부문으로 끌어들이려 시도한 것이나, 각 기업들로 하여금 종업원들의 시장활동을 보장해 주는 대신 그들에게 일정액의 납입금을 받아 기업자원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시장에 대한 장세부과는 물론 주민들

<sup>32</sup> 『北朝鮮 政策動向』(2003), p. 37.

<sup>33</sup> 최근 북한의 (종합)시장에 대해서는 김영운·최수영, 『북한의 경제개혁동향』, 통일정세분석 2005-02 (서울: 통일연구원, 2005) 및 양문수, “북한의 종합시장: 실태, 파급효과, 성격과 의미,” 『KDI 북한경제리뷰』(서울: KDI, 2005.2)를 참고하라.

<sup>34</sup> 이러한 보고는 주로 북한에서 활동하는 국제 구호기관 및 NGO들을 통해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WFP/FAO, *Special Report-FAO/WFP Crop and Food Supply Assessment Mission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WFP/FAO, 22 November 2004)를 보라.

에게 각종의 실질적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시장에서 창출된 소득을 국가의 재원으로 활용하려 시도하고 있는 것들이 그 좋은 예이다.

요컨대 2003년 이후 현재까지 북한 경제정책의 특징은 체제 밖 시장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이를 체제 안으로 끌어드리려는 시도와 이들 시장의 자원을 이용해 체제 안의 계획부문을 복구하려는 시도가 서로 양립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한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북한경제의 정책적 특징은 2005년 후반을 기점으로 변화의 과정에 돌입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다. 이 해 10월부터 북한당국이 식량에 관한한 과거의 배급제를 전면 부활하고, 시장에서의 곡물거래를 일체 불허하기 시작했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이러한 보고가 사실이라면, 이는 북한당국이 1990년대 초반과 2002년 ‘7.1조치’를 통해 시도했던 ‘국가의 곡물통제권 확보와 이를 통한 시장의 규제’를 다시 시도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 2003년 이후 북한의 경제정책이 시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경제에서 시장이 차지하고 있는 의미와 위치는 아직까지 매우 불확실하다는 의미이다.



# III

## 북한의 경제개혁과 이행에 대한 가설들



우리는 앞에서 1980년대 이후 북한경제에서 무엇이, 얼마만큼 그리고 어떻게 변화했고 또 변화하지 않았는지를 살펴 보았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 또는 불변화를 어떻게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과 관련하여 이 장에서는 북한의 변화와 관련하여 제기 될 수 있는 다양한 가설들을 검토한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가설들을 있는 그대로 검토하는 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북한경제의 이행과 관련해서는 어떤 함의를 내포하고 있는지를 동시에 검토한다. 이를 위해 우선 1절에서는 북한경제의 변화 가설과 사회주의 경제 일반에 대한 이행의 가설들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토론하며, 2절부터 4절까지는 이들 가설들을 결합하여 북한경제의 변화와 이행을 설명할 수 있는 대표적인 가설 몇 가지에 대해 검토하기로 한다.

## 1. 예비적 논의: 북한경제 변화 가설과 사회주의 이행 가설

1980년대 이후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를 꼼꼼히 따져보면, 우리가 흔히 경제개혁이라고 부르는 북한의 변화는 서로 이질적인 다수의 정책적 수단으로 구성된 복합적 구조물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실제로 이 기간 중 북한당국은 크게 세 가지의 경제정책을 실시하였는데, 하나는 기존의 경제시스템을 유지 또는 복구하려는 정책이었고, 다른 하나는 기존의 시스템을 전제로 하여 그것의 운영방법을 개선하려는 정책이었으며, 나머지 하나는 기존의 시스템 이외의 새로운 ‘시장’이라는 시스템 또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정책이었다. 북한의 계획경제 시스템 자체를 그대로 유지하려 한 것이나 주기적으로 배급제를 부활하려 시도했던 것이 첫 번째 정책의 사례라고 한다면, 계

획기구의 운영을 분권화 시키고 기업의 자율성과 수익성을 강조했던 시도는 두 번째 정책의 사례로, 그리고 종합시장을 개설하고 기업간 물자시장을 개설하여 새로운 경제적 인센티브의 제공에 주력했던 시도는 세 번째 정책의 사례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1980년대 이후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를 설명하는 입장 역시 형식논리적으로 크게 세 가지가 존재할 수 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북한의 첫 번째 경제정책, 다시 말해 기존 시스템의 유지를 위한 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이 기간 중의 변화를 이해한다면, 그는 ‘북한이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말하려 할 것이다. 반면, 그가 기존 시스템의 운영방법을 개선하려는 시도에 집중한다면, 그는 ‘북한은 변화하고 있지만, 그 변화의 목적은 기존 계획경제를 되살리려는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가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중요성을 둔다면, 그는 ‘북한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그 변화의 핵심은 시장이다’고 판단할 것이다. 편의상 첫 번째의 시각을 ‘북한 불변화 가설’이라고 말한다면, 두 번째의 시각은 ‘계획경제의 정상화 가설’ 그리고 세 번째의 시각은 ‘북한 시장화 가설’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1980년대 이후 북한의 경제정책변화를 대상으로 한 현실적인 논의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세 가지의 가설들이 모두 존재했고 또 존재하고 있다.<sup>35</sup> 그러나 매우 아쉽게도 이러한 가설들은 현재 발전

<sup>35</sup> 2002년 이후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주요 토론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라. 김연철 외, 『북한경제개혁연구』 (서울: 후마니타스, 2002); 김연철, “북한의 경제개혁 전략-쿠바사례의 적용가능성,” 『아세아연구』, 제45권 제1호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02), pp. 210~241; 김진향, “북한경제의 위기와 대응: 경제관리개선조치의 본질과 전망,” 『한국동북아논총』, 제26호(한국동북아학회, 2003), pp. 101~127; 남성욱, “북한의 7·1 경제관리개선조치와 농업개혁 전망,” 『농촌경제』, 제28권 제1호 통권 108호(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5 봄), pp. 17~40; 박광작, “북한 신경제 관리체제의 평가와 전망,” 『비교경제연구』, 제10권

하고 있다기보다는 정제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욱 맞을 것이다. 실제로 2002년 ‘7.1조치’를 계기로 활발히 제출되기 시작한 이러한 가설들은 이후의 풍부한 토론과 다양한 경험적 증거들을 통해 세련되고 엄밀해지기보다는 점차 명시적인 토론의 주제에서도 밀려나 퇴색해 가고 있는 느낌이다. 물론 이러한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은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 그 자체에 있을 것이다. 북한당국이 실시하는 대부분의 정책적 변화들은 비공개로 불확실한 상태에서 진행됨에 따라, 외부 관찰자들이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입수하기가 매우 곤란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필자의 주관적인 느낌일지도 모르겠지만, 이러한 현상에는 또 다른 원인 역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것은 위의 가설들이 제시되고 토론되는 방식이 상대적으로 ‘긴장감이 떨어지는 형태’로 진행된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이다.

우리가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는 크게 두

---

제1호(한국비교경제학회, 2003), pp. 87~127; 박석삼, “북한경제의 구조와 변화,” 『금융경제총서』, 제9호(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2004); 박순성, “김정일 시대(1994~2004) 북한 경제정책의 변화와 전망,” 『북한연구학회보』, 제8권 제1호(2004); 박제훈, “북한경제체제의 변화 전망: 체제동학적 연구,” 『비교경제연구』, 제9권 제1호(2002); 박형중, “국제비교와 관점에서 본 북한의 경제개혁: ‘부분’ 개혁과 ‘시장도입형’ 개혁의 구분 -북한과 소련의 비교를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제5권 제2호(2002); 양문수, “북한의 종합시장: 운영실태, 파급효과, 성격과 의미,” 『2005 경제학 공동학술대회』(한국경제학회, 2005); 이석기, “북한의 1990년대 경제위기와 기업지배구조의 변화,” 『비교경제연구』, 제11권 제1호(한국비교경제학회, 2004); 이영신, “이행경제의 정치경제학: 북한의 체제이행에 대한 시사점을 위하여,” 『국제경제연구』, 제9권 제1호(한국국제경제학회, 2003); 임채완, “북한과 중국의 경제적 개방·개혁 비교 분석,” 『한국동북아논총』, 제32권(한국동북아학회, 2004); 임현진, “북한의 경제개혁: 자본주의로의 길인가,” 『현대북한연구』, 제7권 제1호(2004); 정세진, “이행학적 관점에서 본 최근 북한경제 변화 연구,” 『국제정치논총』, 제43권 제1호(한국국제정치학회, 2003); 조동호, “계획경제시스템의 정상화-최근 북한 경제조치의 분석 및 평가,” 『KDI 정책포럼』, 제160호(서울: KDI, 2002); 조동호, “북한 경제정책의 변화 전망 -1960~70년대 동유럽 경제개혁의 시사점을 바탕으로,” 『비교경제연구』, 제11권 제1호(2004); 하상식, “북한경제의 개혁전망-7.1 경제관리개선조치의 성격평가를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제32권(한국동북아학회, 2004).

가지인데, 하나는 변화 그 자체가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며, 다른 하나는 이러한 변화가 북한경제의 미래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특히 두 번째의 이유와 관련해서 우리는 북한경제의 궁극적 미래에 대해 이미 그 해답을 알고 있다. 과거와 현재의 모든 사회주의 경제에서 보듯이 북한경제 역시 결국에는 시장경제로 이행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를 보다 긴장감 있게 토론하는 방법은 이러한 변화가 북한경제의 이행에는 어떤 함의를 내포하고 있는가를 이야기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한 토론이 서로를 자극하기는 했지만 명시적으로 하나의 장에서 만나는 모습은 크게 보여지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 장에서는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에 대한 여러 가설들을 북한경제 또는 사회주의 경제의 이행이라는 주제와 보다 직접적으로 연결시켜 검토하기로 한다.

그런데 또 다시 형식논리적으로 보면, 사회주의 경제의 이행 또는 그것의 형태에 대한 시각은 크게 세 가지가 존재할 수 있다. 하나는 ‘사회주의 경제는 궁극적으로 붕괴하고, 이에 따라 기존 시스템이 없어진 상태에서 시장 메커니즘이 도입되는 방식으로 시장경제로 이행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사회주의 경제는 기존 시스템이 붕괴하지 않은 상태에서 점진적으로 시장 메커니즘을 도입하고, 이것이 기존의 시스템을 점차 대체함으로써 시장경제로 이행한다’고 보는 것이다. 마지막 하나는 ‘현실적으로 사회주의 경제가 시장경제로 이행하는 것은 당연할지도 모르지만,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또는 개념적으로는 사회주의 경제가 붕괴한다거나 점진적으로 시장화 되어 필연적으로 시장경제로 이행한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편의상 첫 번째의 시각을 ‘사회주의 경제 붕괴론’이라고 부른다면, 두

번째의 시각은 ‘사회주의 경제 비공식화론’ 그리고 마지막 시각은 이들에 대한 ‘반론’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뒤에서 살펴 보듯이, 이러한 시각은 과거 舊 소비에트 및 동유럽 경제의 이행 과정에 대한 토론에서 모두 현실로 나타난 것들이다.<sup>36</sup>

그런데 이러한 사회주의 이행에 대한 가설들을 위의 북한 경제정책 변화에 대한 가설들과 연결시켜 토론할 경우 두 가지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발생한다. 하나는 이렇게 하여 만들어질 수 있는 가설들의 수가, 다시 한번 형식논리적으로, 매우 많아질 것이라는 점이다. 또한 현실에서 제출된 북한 경제정책 변화에 대한 가설들은 북한경제의 이행을 명시적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여기에 다양한 이행의 가설들을 첨부한다면, 그 세세한 내용에 손상이 갈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 글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우선 우리는 북한 경제정책 변화에 대한 가설들과 사회주의 이행에 대한 가설들을 연결시킬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설들 가운데 前者의 논리적 친화력을 고려할 때 가장 가능성이 높은 네 가지의 가설만을 고려한다. 그것들은 1) ‘북한 불변화 가설+사회주의 붕괴론’, 2) ‘북한 시장화 가설+사회주의 비공식화론’, 3) ‘계획경제 정상화 가설+사회주의 붕괴론 및 비공식화론에 대한 반론’, 그리고 4) 이러한 가설들에는 결핍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주의 ‘정치’를 고려한 별도의 가설 등이다. 또한 우리는, 매우 위협스러운 일이지는 하지만, 북한 경제정책 변화와 관련해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다양한 토론의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완전히 구속을 받지 않는다. 필요할 경우 그 내용을 다듬거나 그 논리적 외연을 확대하여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

<sup>36</sup> 이러한 가설들에 대해서는 뒤의 본문의 내용을 참고하라.

리한 측면에서 이 글에서 이야기하는 북한경제정책 변화에 대한 가설은 현실의 연구자들이 실제로 제출한 내용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작업은 자칫 공허해지기 쉬운 위험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에 말해진 여러 구체적 이야기들을 조금은 다른 각도에서 전개함으로써 그것의 추가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자극제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우리가 이 글에서 기대하는 바도 바로 이것이다.

이제 이와 같은 논의를 전제로 하여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와 그것의 이행에 대한 함의를 이야기 할 수 있는 몇 가지의 대표적 가설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기로 하자.

## 2. 북한 불변화 가설과 사회주의 붕괴론

1980년대 이후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를 설명하는 한 가지 극단적인 방법은 ‘북한은 변화하지 않는다’라는 주장과 ‘사회주의 경제는 붕괴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서로 연결시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북한의 경제개혁이란 결국 과거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시스템을 복원시키려는 시도에 불과하며, 이에 따라 이러한 경제개혁의 성공여부와는 상관없이 북한경제는 스스로 붕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언뜻 보면, 이러한 주장은 최근 수년간 북한경제에서 나타난 증대한 변화들을 모두 도외시하는 비현실적인 주장으로 보인다. 더욱이 그것은 현존하는 사회경제체제의 미래를 몇 개의 단어로 예단하는 공허한 운명론처럼 들리기도 한다. 그러나 조금만 꼼꼼히 따져보면, 이러한 주장 역시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

를 설명하는 나름의 합리성을 갖추고 있고, 무엇보다 사회주의 경제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 여러 관념들과도 잘 맞기 때문에 의외의 설득력 있는 가설로 등장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와 관련된 여러 가설들을 검토하는 한 가지 방안으로 먼저 이러한 ‘북한 불변화 가설’과 ‘사회주의 붕괴론’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 북한 불변화 가설

만일 누군가가 1980년대 이후에도 북한경제는 과거의 사회주의 경제시스템에서 달라진 것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려 한다면, 그는 어떤 방식으로 이러한 주장을 전개하는 것이 효과적일까? 이러한 질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서로 연결된 일련의 부분 명제 또는 주장들에 대해 생각해 보자.<sup>37</sup>

<sup>37</sup> 현실적으로 ‘북한은 변화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대부분의 논자들은 이러한 자신들의 주장을 전개하는 데 있어 일종의 방어법을 사용하고 있다. 다시 말해, ‘북한은 변화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강조하기 위해 정반대의 입장인 ‘북한은 변화한다’는 주장을 비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조금은 길지만, 다음과 같은 에버스타트(Eberstadt)의 언급을 생각해 보자.

“미국과 일본 특히 한국의 학자들과 연구자들 그리고 정책 결정자들은 이러한 변화[북한의 경제개혁]의 중요성에 대해 조심스러운, 그러나 너무도 낙관적인, 낙관론을 펼쳐왔다. 이들은 북한이 마침내 실용적인 경제정책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심지어는 베트남과 중국경제의 변화와 이행을 몰고 왔던 것과 유사한 종류의 시장지향적 사회주의를 향해 북한이 움직이고 있다고 주장한다.

외부 관찰자들이 북한에서 경제개혁이 일어나길 바라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햇볕정책의 옹호자들은 자신들의 정책의 정당성을 찾으려 할 것이고…… 그러나 최종 분석에 있어 중요한 것은 북한에 실제로 무엇이 존재하는가 하는 것이지, 우리가 무엇이 존재하면 좋겠다고 바라는 것이 아니다. 현재까지의 증거들은 북한이 어떤 의미 있는 경제개혁의 단계로 진입했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것은 마치 20여년 전의 북한이 어떤 의미 있는 경제개혁의 단계로도 진입하지 않았었다는 사실과 동일하다. 당시 북한 문제를 막 다루기 시작한 젊은 학자였던 나는 그때에도 북한에 대한 이러한 희망 섞인 견해를 듣기 시작했었다”(Eberstadt, N., “Don’t Believe North Korea’s Economic Reform,” *Asian Wall Street Journal* (April 8 2004).

- [A-1]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는 1980년대 이후 계속된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 과정이었다.
- [A-2] 이러한 정책변화의 목적은 경제위기로 작동불능 상태에 빠진 기존의 경제시스템을 유지·보호하려는 것이었다.
- [A-3] 물론 이러한 정책변화 과정에서 기존의 경제시스템 일부를 변화시키거나 시장과 같은 새로운 경제적 요소를 도입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1) 경제위기의 과정에서 기존의 경제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했던 위기 대응책이었으며, 2) 특히 기존 경제시스템의 복원이 가능한 상황이 도래 할 경우 언제든지 폐기될 수 있는 임시적인 것이었다.
- [A-4] 따라서 그간의 경제정책 변화로 인해 비록 북한의 현재 모습이 과거와 다른 것처럼 비칠지도 모르나 그 본질에 있어서는 변한 것이 없고, 또한 이러한 경제정책이 성공할 경우에는 북한의 현재 모습 역시 과거의 경제시스템으로 복귀할 것이다.

---

한편, 이와는 조금 궤를 달리하지만, 이석 또한 보다 구체적인 사례를 이용하여 ‘북한은 변화한다’는 주장에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Lee, Suk, “Food Shortages And Economic Institution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pp. 289~310). 그는 1980년대 이후 북한경제정책 변화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식량·농업부문의 개혁은 1) 사실상 과거 북한당국이 경제적 어려움을 처했을 때 이미 모두 사용한 경험이 있는 ‘옛’ 정책들이며, 2) 이러한 정책들을 새로이 제시한 1980년대 이후에 있어서도 그에 대한 끊임없는 반작용 또는 반정책들을 동시에 실시했다는 점에서, 3) 이를 통해 북한이 과거와 달라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성급한 견해라고 말한다.

이처럼 북한 불변화 주장은 현실적으로 반어법의 형태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장의 논리적 구조를 재정리하기가 매우 힘들다. 그간 이러한 주장이 본격적인 토론의 대상이 되지 못했던 한 가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주장이 보다 분명한 형태로 명시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이유 또한 여기에 있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주장이 의외로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 북한의 경제개혁을 말하는 거의 모든 논의에 대한 하나의 유력한 반론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위의 본문에서는, 약간의 무리가 따르는 것을 감수하고, 이러한 주장의 내면에 존재하는 논리구조라고 생각되는 명제들을 보다 명시적으로 드러내어 토론해 보기로 한다.

아마도 위의 주장들 가운데 [A-1]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만일 북한에 경제위기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현재 우리가 보고있는 정책적 변화가 과연 나타날 수 있었을 것인가가 회의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A-2]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사정이 다르다. 북한당국은 1980년대 이후 기존의 경제 시스템과는 다르거나, 심지어는 그를 약화시킬 수 있는 많은 정책들을 시행해 왔다. 이러한 정책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떻게 기존의 경제시스템을 유지하려는 것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러한 질문과 관련하여 한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만일 [A-2]의 주장을 ‘합리적’인 것이라고 받아들인다면, 그에 따라 나오는 [A-3]와 [A-4]의 주장을 이해하기가 매우 쉽다는 점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일단 [A-2]의 주장을 합리적이라고 가정된 상태에서 [A-3]와 [A-4]의 주장을 살펴본 후에, 마지막으로 과연 [A-2]의 주장이 정말로 합리적인가를 논의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자.

만일 [A-2]의 주장이 합리적이라고 가정한다면, [A-3]의 주장을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다. 한가지만 예를 들어 보자. 1980년대 이후 북한은 한편으로는 시장의 성장을 용인함으로써 기존 배급제의 기능을 대체하려는 정책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의 성장을 억제하여 배급제를 부활시키려는 정반대의 노력 또한 주기적으로 반복해 왔다. 1990년대 초반 농민시장을 규제하려 시도한 것이나, 2002년 ‘7.1조치’ 직후 사적인 곡물생산과 거래를 통제하여 국가의 곡물 통제권을 확보하려 한 것, 또한 2005년 9월 이후 또다시 시장에서의 곡물거래를 규제하고 이를 배급제로 대체하려 시도하고 있는 것 등이 그 좋은 예이다. 만일 북한이 기존의 배급제에 연연하지 않고 이것이 시장과 같은 또 다른 경제제도로써 대체되는

것을 정말로 용인할 의도가 있다면, 이러한 배급제의 부활시도는 전혀 이해할 수 없게 된다. 비록 북한이 어떤 정치적인 이유에서 명목적으로나마 배급제에 대해 애착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번번히 좌절된 배급제의 부활시도를 주기적으로 반복함으로써 쓸데없는 경제적 비용을 낭비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는 정반대로 북한이 여전히 배급제를 포기하지 않고 있고, 이를 부활시키는 것이 진정한 정책의 목적이라면, 그간 북한이 왜 시장의 성장을 인정하고 배급제의 약화를 용인하는 정책을 실시해 왔는가를 이해하는 일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 거듭되는 경제위기로 인해 충분한 경제적 자원을 보유하지 못한 북한당국의 입장으로서의 기존의 배급제 자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잠시나마 그것의 기능과 역할을 현실에 맞게 제한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었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주민 50명에 대한 배급량 밖에 보유하지 못한 상황에서 여전히 전체 주민 100명을 대상으로 하는 배급제를 유지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감내하기보다는, 배급제의 대상을 핵심주민 50명으로 한정하고, 나머지 50명에 대해서는 시장을 통해 생존하라고 허용하는 편이 배급제 자체의 보호를 위해 더욱 효과적일 수도 있다. 더욱이 이 경우 배급제의 영역 축소는 배급제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만일 북한당국이 추가로 20명 분의 배급량을 더 확보한다면, 배급제의 영역은 다시 주민 50명에서 70명으로 확대될 것이고, 이에 따라 그만큼 시장의 성장을 규제하려는 새로운 정책이 실시될 것이다. 우리가 북한의 경제개혁이라고 부르는 많은 정책들이 실제로는 임시적이며 위기 대응적인 것들이어서, 상황의 전개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폐기되고 또다시 반대의 정책이 실시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A-4]의 주장은 매우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다. 현재 북한이 과거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은 경제위기의 과정에서 북한당국이 과거의 경제시스템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것의 기능과 역할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고 있었기 때문인데, 이러한 재조정 작업은 북한의 경제위기가 완전히 종식되는 순간 이후에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고, 이제는 과거의 시스템을 복원하는 일만 남게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앞의 [A-1]에서 [A-4]의 주장들은, [A-2]의 주장이 합리적이라고 가정하기만 한다면, 1980년대 이후 북한 경제정책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좋은 설명틀이 될 수 있다. 그럼 과연 [A-2]의 주장이 합리적일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상당한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그렇다고 [A-2]의 주장이 합리적이 아니라고 말할 이유도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인다.

과거 북한경제는, 현존했던 모든 사회주의 경제가 그러했듯이, 사회주의 경제로서의 보편적 특징과 북한경제로서의 고유한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경제에서는 사적인 소유가 부정되기 때문에 재화를 소유한 개인들의 자발적인 계약을 통해 시장에서 경제행위를 조직하는 데에는 본질적인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이러한 경제체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소유를 대표하는 경제주체(국가)가 기업이나 개인과 같은 경제주체에게 특정의 경제행위를 하도록 명령하는 ‘계획’이 존재해야만 하고, 이러한 계획을 관철시키고 감독할 수 있는 계획기구 또한 존재해야만 한다. 또한 이러한 사회적 소유형태와 계획을 물리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정치기구, 다시 말해 ‘공산당 독재’의 유지가 필수적이기도 하다. 과거 북한경제의 경우 이러한 ‘사적소유의 부재-계획 및 계획기구의 존재-공산당 독

재'라는 사회주의 경제의 본질적 요소들을 모두 가지고 있었다.<sup>38</sup> 더욱이 북한의 경우에는 다른 사회주의 경제에서 잘 발견되지 않는 '배급제 경제'와 같은 고유한 특징까지 보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1980년대 이후 현재까지의 경제위기 가운데에서도 북한당국은 소유형태와 계획 그리고 공산당 독재라는 사회주의 경제의 본질적 요소들에 대해서는 일체의 변화도 허용하지 않았다. 정반대로 이러한 요소들에 대해 변화를 기대하는 그 어떤 세력에 대해서도 '결연히 투쟁할' 것을 분명히 해 왔다. 물론 배급제 경제와 같은 북한경제 고유의 특징에 대해서는 여러 변화를 허용하고, 새로운 정책적 실험 등을 수행했다. 그러나 앞에서 이미 언급한 것처럼 이러한 변화와 정책적 실험 역시 거의 주기적으로 그에 반대되는 逆변화와 反실험에 시달리고 굴절되었다. 이러한 두 가지 사실을 종합해 보면, 북한당국은 그간의 경제정책과 관련하여 1)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질서 자체를 유지하는 것에는 확고하고, 2) 북한식 사회주의 경제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그것을 변화시킬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충분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 이런 측면에서 위의 [A-2]의 주장처럼 1980년대 이후 북한경제정책의 목적이 기존 경제 시스템의 유지에 있었다고 말할 경우, 이것을 단순히 비합리적인 가정이라고 몰아 부칠 수는 없는 것이다.

<sup>38</sup> 사회주의 경제의 핵심 또는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여기에서는 1980년대 말 소비에트 체제가 무너지기 이전의 舊소련 및 동유럽 사회주의 경제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요소들을 그 핵심으로 제시한다. 사회주의 경제의 기본 성격과 관련해서는 Nove, A., *The Soviet Economic System* (1978)의 제1장; Gregory & Stuart, *Comparative Economic Systems* (Boston: Houghton Mifflin, 1980)의 제2장과 6장; Davies, Harrison and Wheatcroft., *The Economic Transformation of the Soviet Union 1913~1945*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의 제1장; Gregory & Stuart, *Russian and Soviet Economic Performance and Structure* (Addison-Wesley, 2001)의 제1부 등을 참고하라.

## 사회주의 붕괴론

이상에서 우리는 ‘북한의 여러 정책적 변화들에도 불구하고 북한경제의 본질은 여전히 변화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 보았다. 그렇다면 이러한 주장은 북한경제의 미래 또는 그것의 시장경제로의 이행과 관련하여 어떤 함의를 갖고 있을까? 흥미롭게도 이러한 주장은 이른바 ‘북한 붕괴설’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sup>39</sup> 다시 말해, 북한경제는 연속적이고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 시장경제로 이행한다기보다는, 어떤 시점에서 사회주의 체제 자체가 붕괴하고 이를 계기로 시장경제로의 이행이 비로서 시작되는 불연속적인 이행과정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1980년대 후반 舊소비에트 경제가 몰락하면서 소비에트 사회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사회주의 경제의 몰락원인에 대해 다양한 가설이 제출된 일이 있었다. 이들 가설들 가운데 특히 지배적이었던 것은 이른바 본질주의자(Essentialists)들이라고 불리는 연구자들의 가설이었는데, 이들은 사회주의 경제가 그 태생에서부터 이미 몰락이 운명지워진(predestined) 경제체제였다고 보았다.<sup>40</sup> 어떤 경제체제가 정

<sup>39</sup> 물론 이러한 주장을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곤란하다. 뒤의 본문에서 언급하지만, ‘북한은 변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사회주의 경제는 반드시 붕괴한다고 말할 수 없다’는 주장을 연결시켜 새로운 가설을 만드는 일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러한 북한 불변화 주장의 하나의 논리적 연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시범 사례로서만 이를 사회주의 붕괴론과 연결시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사례를 택한 것은 현실적으로 북한경제의 변화에 대해 부정적인 논자들 대부분이, 비록 명시적으로 주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북한경제의 미래에 대해서도-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다 강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필자의 개인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다.

<sup>40</sup> ‘본질주의자(Essentialists)’라는 용어는 Dallin, A., “Causes of the collapse of the USSR,” *Post-Soviet Affairs*, Vol. 8, No. 4 (1992)에 따른 것이다. 이들의 견해에 대해서는 McNeill, T., “Soviet Studies and the Collapse of the USSR,” in Cox, M. (ed.), *Rethinking the Soviet Collapse: Sovietology, the Death*

상적이고 안정적으로 운행되기 위해서는 그 속에 참여하는 각 경제 주체들의 동의(consent)가 필수적인데, 사회주의 경제는 명령과 억압 그리고 강제를 속성으로 함으로써 각 경제주체의 동의를 사실상 체제로부터 추방하는 비정상적(abnormal) 경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정상성으로 인해 사회주의 경제는 여러 체제적 문제점들에 시달리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경제의 불안정성과 각 경제주체의 체제에 대한 충성도 부재(disloyalty)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지속적인 생산성 증가가 일어나기 힘들며, 조그마한 충격에도 경제가 요동을 경험하고, 각 경제주체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체제로부터 일탈하려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본질주의자들의 가설이 과연 얼마나 설득력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적이다. 그러나 적어도 1960년대 이후 북한경제에 관해서는 이들 본질주의자들의 가설이 상당히 유효하다고 볼 수도 있다. 우선 북한경제는 과거의 다른 사회주의 경제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에도 매우 통제적인 배급제 경제를 유지하고 있었다. 본질적(?)으로 억압적인 사회주의 경제 가운데에서도 가장 억압적인 셈이었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1960년대 이후 북한경제가 끊임없는 불안정성에 시달려 왔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1960년대 이후 북한의 생산성 변화를 추적한 거의 모든 기존의 연구들은 북한경제의 장기적 생산성 증가를 추세가 (-)를 기록하고 있다고 말한다.<sup>41</sup> 또한

---

*of Communism and the New Russia* (London, 1998); Malia, M., "The Highest Stage of Socialism," in Edwards (ed.), *The Collapse of Communism* (Stanford, 1999); Brezkeski, A., "The End of Communist Economics," in Edwards (ed.), *The Collapse of Communism* (Stanford, 1999) 등을 참고하라.

<sup>41</sup> 예를 들어, 1966년 이후 북한의 총생산함수의 요소생산성 변화를 추정한 양문수, 『북한경제의 구조』 (서울: 서울대 출판사, 2001), p. 113와 1970년대 이후 북한 곡물생산함수의 요소생산성 변화를 추정한 이석, 『1994~2000년 북한기근: 발생, 충격 그리고 특징』 (서울: 통일연구원, 2004), pp. 183~190을 보라.

북한경제는 조그마한 외부의 충격에도 경제가 급변하는 요동 현상을 경험해 왔다. 1980년대 말 사회주의 경제권과의 교역 단절로 인해 불과 4~5년 사이에 총산출량이 절반 이하로 급락했던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sup>42</sup> 물론 이러한 북한경제에 대해 각 소속 경제주체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대다수 주민들이 생존을 위해 시장에 참여하고 있고, 또 상당수의 탈북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체제에 대한 충성도가 반드시 높다고만은 할 수 없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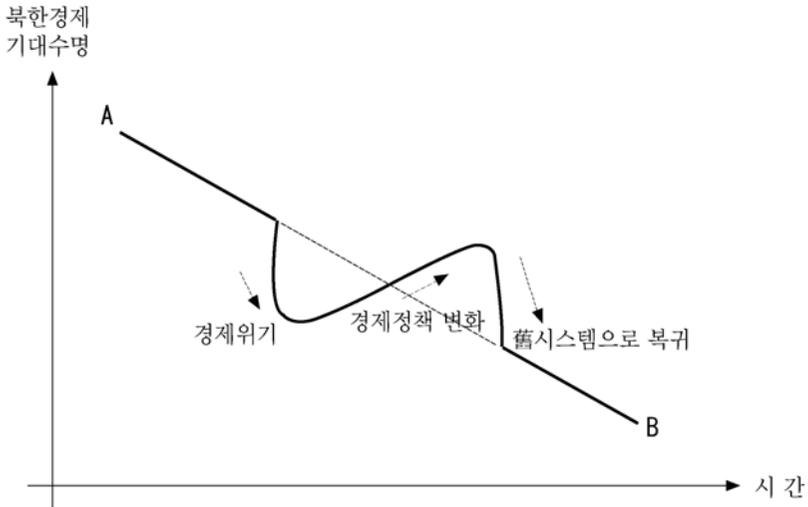
그런데 앞에서 우리는 1980년대 후반 이후의 여러 정책적 변화들에도 불구하고 북한경제는 본질적으로 과거와 달라지지 않았다는 주장을 살펴 보았다. 만일 이러한 주장을 그대로 받아 들인다면, 그것은 북한경제가 지난 1960년대 이후 경험했던 체제적 불안정성을 앞으로 도 극복하기 힘들 것이라는 말이 된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경제위기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이 앞으로도 계속 그러한 체제적 불안정성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북한경제의 붕괴를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의 장기적 생존 가능성을 논의하는 것이 더욱 이상한 일이 될 것이다.

### 북한 불변화 가설과 사회주의 붕괴론

<그림 III-1>은 이상에서 논의된 ‘북한경제 불변화 가설’ 또는 ‘북한 붕괴설’을 조금은 도식적인 방법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가설에 따르면 과거 북한경제는 그 체제상의 문제점으로 인해 언젠가는 붕괴할 수밖에 없는 경제체제였다. 이를 나타내기 위해 북한경제의

<sup>42</sup> 이 글 제II장의 <표 II-1>을 참조하라.

<그림 III-1> 북한경제 불변화 가설과 사회주의 경제 붕괴론



(잔여)기대수명선은 우하향하는 직선 AB로 표시되어 있다. 그런데 1980년대 후반 이후 북한경제는 舊사회주의권과의 교역단절 등으로 인해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았고, 이로 인해 기존의 경제시스템이 급작스럽게 작동불능 상태에 빠지는 체제의 붕괴위험에 직면하였다. 이를 표현하기 위해 북한경제의 기대수명선은 198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기존의 직선적인 추세에서 벗어나 아래로 급락하는 것으로 그려져 있다. 한편, 이러한 경제위기를 맞아 북한당국은 기존의 경제시스템 일부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경제적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정책적 변화에 나섰다. 그 결과 직접적인 체제붕괴의 위험은 상당 부분 완화되었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사실로 인해 북한경제의 기대수명선은 다시 급 종래의 직선적 추세 또는 그것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회복되게 그려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북한경제의 본질이 변한 것은 아니다. 더욱이 일정한 계기가 마련되면, 북한은 과거

의 경제시스템을 회복하려 들 것이다. 따라서 북한경제의 기대수명선 역시 원래의 직선적인 우하향 추세로 복귀할 것이며, 이에 따라 언젠가 북한경제가 붕괴하는 것은 필연적인 일이 될 것이다.

### 3. 북한 시장화 가설과 사회주의 비공식화론

1980년대 이후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를 설명하는 한 가지 또 다른 방법은 ‘북한은 변화(시장화)한다’는 주장과 ‘사회주의 경제는 점진적이고 연속적인 방법으로 시장경제로 이행할 것이다’라는 주장을 서로 결합시키는 것이다.<sup>43</sup> 다시 말해, 우리가 흔히 이야기 하는 북한의 경제개혁으로 인해 ‘북한경제는 점차 시장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장화 추세가 앞으로도 더욱 확대되어 북한경제 자체가 시장경제로 이행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앞에서 살펴본 ‘북한 불변화설’ 또는 ‘북한 붕괴설’과 정반대의 입장에서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흥미롭다. 더욱이 그것은 사회주의 경제의 이행경로에 대한 일반적 관념에도 일정한 의문을 제기한다는 점에서 이론적으로도 도전적이다. 사회주의 경제의 이행과정에 대한 일반적 관념에 따르면, 북한과 같이 계획경제가 완전히 성숙한 국가에서 시장화를 통해 점진적이고도 연속적인 형태로 경제이행이 이루어진 사례는 없었으

<sup>43</sup>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러한 결합이 언제나 필연적인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1980년대 이후의 경제정책 변화로 북한이 시장화 하고는 있지만, 이러한 시장화 경향은 일정 기간이 지나서는 진정될 것이며, 이로 인해 뒤의 본문에서 언급하듯이 북한경제 역시 향후에는 시장을 포함한 보다 유연한 사회주의 계획경제로서 장기간 존재할 것이라는 주장 역시 얼마든지 구성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북한 시장화 가설과 사회주의 비공식화 가설을 서로 연결시키는 것은 전자의 논리적 외연의 하나의 시험사례로서만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며, 이론적으로도 그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44</sup> 그러나 앞의 주장은 이것이 가능하며, 더욱이 북한에서도 가능하다고 말

<sup>44</sup>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경제의 이행은 크게 두 가지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하나는 舊소비에트 및 동유럽 모델로 흔히 빅뱅(Big-bang)이라고 불리는 형태이며, 다른 하나는 중국과 베트남 등의 아시아적 모델로 보통 점진주의(Gradualism)라고 불리는 형태이다. 빅뱅이란 기존의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한 이후 시장경제체도가 이를 전면적이고도 즉시적으로 대체하는 이행의 형태를 말하며, 점진주의란 기존의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경제도를 연차적이고 점진적으로 주입하여 중국에는 사회주의 계획경제 자체가 시장경제로 이행하는 형태를 지칭한다. 그런데 왜 이처럼 사회주의 경제의 이행에는 두 가지의 서로 다른 형태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다만, 한가지 분명한 것은 이러한 이행의 경로에는 대상이 되는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초기 조건(initial condition), 다시 말해 이행이 시작되기 이전의 계획경제의 성격이 크게 작용한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과거 사회주의 경제에서의 계획의 비중이 높거나 그것의 중앙집중도가 높을수록, 빅뱅식의 이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또한 그 이행과정에서 경제의 혼란이 더욱 클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북한은 점진주의적 이행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국가의 하나일 것이다. 1990년대 초까지 북한경제의 거의 전부분이 계획에 의해 움직여 왔고, 계획의 중앙집중도 역시 그 어느 나라보다도 높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빅뱅과 점진주의를 자연발생적인 경제적 현상 또는 제도의 변화가 아닌 인위적으로 선택 가능한 정책의 형태라고 해석한다면, 논의는 약간 달라질 수 있다. 舊소비에트 및 동유럽의 빅뱅모델에서보다는 아시아의 점진주의 모델에서 그 경제적 성과가 더욱 좋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의 경우에도 빅뱅과 점진주의 가운데 하나를 정책결정자가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는 당연히 빅뱅보다는 점진주의를 더욱 선호할 것이다. 그러나 양자가 과연 자유로이 선택 가능한 정책의 문제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의 여지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들 이행의 형태에 대한 경제학적 논의와 관련해서는 Ellmann, M., "General Aspects of Transition," in Admiral P. (ed.), *Economic Transition in Eastern Europe* (1993); Coricelli, F & Milesti-Ferretti, G, "On the Credibility of Big Bang Programs," *European Economic Review* (April 1993); Dewatripoint M & Roland G, "The Virtues of Gradualism and Legitimacy in the Transition to a Market Economy," *Economic Journal* (March 1992); Fischer S & Gelb A, "The Process of Socialist Economic Transformation,"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May 1991); Kornai, J., *The Road to a Free Society* (1990); Aghion P., "Economic Reform in Eastern Europe: Can Theory Help?," *European Economic Review*, Vol. 37 (1993); Aghion P & Blanchard O, "On the Speed of Transition in Central Europe," *NBER Macroeconomics Annual* (1994); Chang H & Nolan P (ed.), *The Transformation of Communist Economies* (ST Martin Press, 1995); Roland G, *Transition and Economics* (MIT Press, 2000) 등을 참고하라.

한다. 물론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점진적 시장화를 통한 이행의 사례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들 국가는 대부분 계획경제가 충분히 발전하지 않은 사회주의 농업경제였다는 점에서 성숙한 계획경제의 이행사례로 간주하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sup>45</sup> 아무튼 여기에서는 이처럼 현실적으로도 흥미진진하고 이론적으로도 도전적인 이른바 ‘북한 시장화 가설’과 ‘사회주의 비공식화 가설’이 어떤 내용인지를 검토하도록 한다.

### 북한 시장화 가설

만일 어떤 사람이 ‘1980년대 이후의 경제정책 변화로 인해 북한경제는 시장화라는 본질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고 주장하려 한다면, 그는 이러한 주장을 어떻게 전개하는 것이 효과적일까? 이러한 질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서로 연결된 몇 가지의 부분 명제 또는 주장들에 대해 생각해 보자.

[B-1]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는 1980년대 이후 계속된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 과정이었다.

---

<sup>45</sup> 왜 중국 사회주의 경제가 舊 소비에트 및 동유럽과는 다른 이행경로를 걸었는가에 대해서는 백가쟁명식의 다양한 논의들이 존재해 왔지만, 아직 이에 대해 모두가 동의할만한 정립된 설명 틀은 구축되지 않은 느낌이다. 참고로 과거 사회주의 이행경로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을 때 중국식의 점진주의를 ‘중국식 문화’(Weitsman, “Economic Transition: Can Theory Help?,” *European Economic Review*, Vol. 37 (1993))나 ‘중국식 계획경제의 특성’(Qian Y and Xu C., “The M-form Hierarchy and China’s Economic Reform,” *European Economic Review*, Vol. 37 (1993)) 또는 ‘다양한 중국적 요인들’(Chang H and Nolan P., “Europe versus Asia: Contrasting Paths,” Chang H. & Nolan P. (eds.), *The Transformation of Communist Economies* (ST Martin Press, 1995))로 설명하고자 시도한 서구 경제학자들의 작품을 감상해 보는 것도 매우 흥미로울 것이다.

[B-2] 이러한 정책변화의 궁극적 목적은 북한경제의 생존을 위해 경제위기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었다. 물론 북한당국은 내부적으로 기존의 경제시스템을 유지한다는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은 북한경제 자체의 생존이라는 목적에 비하면 언제나 부차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B-3] 북한 경제위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 과정에서 주민들 스스로의 자구노력에 의한 자생적 시장화의 경향이 태동했다는 것이다. 북한당국으로서는 기존 경제시스템의 작동이 중지된 상태에서 이러한 자생적 시장화의 경향을 부정할 수가 없었다. 이 경우 북한경제의 생존 자체가 문제시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의 경제정책 역시 1) 이러한 자생적 시장화의 경향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그 확대를 용인하는 한편, 2) 기존의 경제시스템 역시 시장화 경향에 맞게 개혁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었다.

[B-4] 물론 시장화의 경향이 매우 가속화되었을 경우 북한당국은 이를 규제하기 위해 여러 반개혁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들 정책은 1) 주민들의 생존수단으로 등장한 시장을 축소하려 든다는 측면에서 결국에는 실패하지 않을 수 없었고, 2) 이러한 실패가 오히려 시장화 경향을 다시 가속화 시키는 역효과를 불러왔다.<sup>46</sup>

<sup>46</sup> 북한 시장화 가설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명제는 위의 본문의 [B-3]와 [B-4]이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대다수 연구자들은, 비록 그들이 북한 시장화 가설에 우호적인 입장에서 논의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B-3]와 [B-4]와 같이 단정적인 주장을 내세우는 데에는 조심스럽다. 이러한 명제들이 향후 북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경제정책의 방향과 효과를 미리 예단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에 대한 진지한 연구자라면 이러한 조심스러운 태도는 매우 당연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경제에 대한 주목할만한 연구자 가운데 한 사람인 남성욱(2005)의 다음과 같은 논의 전개는 충분히 경청할 만하다.

[B-5] 그 결과 북한경제는 과거의 ‘시장 없는 사회주의 경제’에서 이  
미 ‘시장 있는 사회주의 경제 또는 시장과 병행하는 사회주의  
경제’로 변화하였다.

앞에서 검토한 ‘북한 불변화설’과는 대조적으로 위의 ‘북한 시장화

---

“북한은 2002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기존 경제관리체제와 운영에 대한 대규모 개혁을 단행하였다… 특히 최근의 개혁조치가 북한 지도부의 ‘계획적인 추진의도’와 ‘의도하지 않은’ 시장지향적 결과의 격차로 말미암아 예상치 않은 변화를 수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진행과정과 향방이 주목되고 있다. 7.1조치가 발표되었을 당시만 해도 이 조치가 과연 어떤 성격의 조치였는가에 초점이 모아졌다. 본격적인 시장개혁을 위한 신호탄이나 혹은 사회주의 내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일시적인 과도기 조치인가를 둘러싸고 많은 논쟁이 이어졌다.

2003~2004년 들어 종합시장 육성 등 7.1경제개선관리조치가 경제개혁으로 전환되는 등 각종 후속대책이 나오므로써 이러한 논쟁은 초점이 변화하고 있다.

……이런 북한의 비공개적인 추진으로 인해 전문가들 사이에 논란이 있었으나 경제관리개선조치는 일종의 ‘북한식’ 경제개혁조치로서 앞으로 북한경제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이다. 북한은 7월 경제개선관리조치를 발표하면서 이 조치가 1946년 토지개혁에 버금가는 사회·경제적 파장을 내포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종합시장 육성 인민생활공제 발행 등 사경제를 국가의 통제 안에 끌어들이는 조치들이 효과를 거두게 될지, 아니면 국가통제를 벗어나 경제개혁으로 나아갈지 미지수이나 북한이 개혁을 위한 첫발을 내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남성욱, “북한의 7.1경제관리개선조치와 농업개혁 전망,” 『농촌경제』 (2005년 봄), pp. 17~19: 인용문의 강조는 필자에 의함).

북한은 1) 현재 경제정책의 변화를 추진 중이며, 2) 이러한 변화가 당국의 의도와는 달리 시장지향적 결과를 몰고 올 가능성이 있으며, 3) 따라서 이러한 ‘변화+가능성’을 종합해 볼 때 북한은 이미 개혁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4) 그렇다고 그 가능성이 현실로 구체화되는가 아닌가는 미리 예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1) 북한의 정책변화가 내포하는 시장화의 가능성이 구체화될 경우 북한 시장화 가설로 연결될 수 있지만, 2) 반대로 그 가능성이 실현되지 않을 경우에는 뒤의 본문에서 언급하는 계획경제의 정상화나 다른 여타의 가설로도 얼마든지 발전가능 한 것이다.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에 대한 진지한 현실의 논의들은 위의 본문에서 서술된 [B-3]와 [B-4] 보다도 훨씬 더 풍부하고 탄력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 글에서는 [B-3]와 [B-4]처럼 단정적인 명제를 제시하였는데,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이 글의 목적이 각 가설들을 비교 분석하는 것이므로 그들의 차이를, 비록 과장의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보다 분명하게 명시적으로 드러낼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이들 가설들이 모두 북한경제의 미래에 대한 일정한 전망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B-3]와 [B-4]를 현실의 구체적인 논의에 곧바로 적용시켜 재단해서는 안될 것이다.

설'의 여러 주장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매우 쉽다. 우선 [B-1]과 [B-2]의 주장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것이다. 1980년대 이후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가 경제위기의 산물이었고, 이렇게 시도된 변화의 목적이 경제위기에서 벗어나 북한경제의 생존을 유지하려는 것이었다는 주장은 매우 자연스럽다. 비록 북한당국이 경제위기 동안 기존 경제시스템의 보전을 목표로 했을지라도 북한경제의 생존 자체가 문제가 될 경우에는 모든 것이 부질없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B-3]의 주장 역시 커다란 설득력을 갖고 있다. 앞의 제2장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1990년대 중후반 -비록 일부일지도 모르지만- 북한 주민들의 소비생활 가운데 60~70% 이상이 시장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자생적 시장화 경향을 부인한다는 것은 전혀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이러한 자생적 시장화가 북한당국의 정책변화로 연결되는 형태이다. 일반적으로 자생적 시장화가 사회주의 당국의 정책변화를 이끌어내는 데에는 크게 세 가지의 형태가 있다. 하나는 당국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러한 시장화를 규제하거나 처벌하지 않는 '묵인'의 형태이다. 다른 하나는 이러한 묵인의 형태가 장기간 계속되거나 또는 별도의 이유로 인해 당국이 종래의 묵인을 제도화하는 '승인'의 형태이다. 마지막 하나는 이러한 시장의 제도화가 달성될 경우 당국이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기존의 경제시스템을 보완하거나 또는 그와 통합하는 '이용'의 형태이다. 예를 들어, 1990년대 중후반 북한당국이 극심한 식량난으로 주민들에 대한 정상적 식량배급을 중단한 상태에서 불법적인 농민시장에서의 곡물거래를 처벌하지 않은 것은 시장에 대한 '묵인'이라고 할 수 있으며, 2003년 초반 농민시장을 종합시장으로 제도화하여 식량을 포함한 대부분의 재화에 대한

거래를 인정한 것은 시장에 대한 ‘승인’이라고 할 수 있고, 이처럼 시장이 제도화되면서 국영기업들로 하여금 시장을 통해 수익을 내도록 유도함으로써 전반적인 계획부문의 활성화를 기도하고 있는 것은 다시 시장에 대한 ‘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위의 [B-3]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해석한다면, 그것은 1980년대 이후 북한당국은 이미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자생적 시장화의 경향을 배경으로 종래 시장을 부정하던 정책을 점진적으로 시장에 대한 ‘묵인’→‘승인’→‘이용’의 정책으로 변화시켜 왔다는 말이 될 것이다. 반면, 이를 소극적으로 이해한다면, 그것은 자생적 시장화의 경향을 맞아 종래 시장을 부정하던 북한의 경제정책이 이제는 철폐되었다는 말이 될 것이다. 그러나 [B-3]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든 소극적으로 해석하든, 그것의 핵심적인 내용은 1980년대 이후 북한에서는 자생적 시장화의 경향이 출현했으며, 이러한 경향이 시장에 대한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처럼 북한에서의 자생적 시장화 경향과 그에 따른 정책적 변화를 인정한다면, 위의 [B-4]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도 별로 어렵지 않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자. 1990년대 초반 북한은 농민시장을 규제해 불법적인 공산품 거래나 곡물거래를 금지하고자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그 후의 식량위기 악화로 실패했고, 그 결과 1990년대 중후반에는 농민시장에서 거의 모든 물품이 거래되는 것이 묵인되었다. 북한경제가 회복기미를 보이던 2002년에는 ‘7.1조치’를 통해 또다시 시장에서의 곡물거래를 금지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이러한 시도 역시 시장에서의 급속한 인플레이션을 불려와 실패함으로써 2003년에는 농민시장 자체를 종합시장으로 제도화하는 새로운 정책이 실시되었다. 이처럼 북한에서의 자생적 시장화가 뚜렷

해진 상황에서는 1) 설사 북한당국이 시장을 규제하려는 반개혁적 정책을 실시한다고 해도 그것은 증대하는 시장의 영향력으로 인해 실패할 수밖에 없고, 2) 이러한 실패를 북한당국이 인식하게 되는 경우, 그것은 다시 당국에 의한 공식적인 시장의 인정을 불러올 수밖에 없으므로, 3) 시장의 영향력이 다시 상승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 초래되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북한에서의 시장화 경향이 때로는 당국의 정책적 도움을 받으면서, 때로는 그것의 규제 노력을 극복하면서 지속되어 왔다는 사실은 현재의 북한경제가 사실상 ‘시장이 존재하는 사회주의 경제’의 단계로 진입했다는 말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이런 측면에서 위의 [B-5]의 주장 역시 매우 당연한 것이다.

### 사회주의 비공식화론

그런데 [B-5]의 주장처럼 북한이 이미 과거의 ‘시장 없는 사회주의’에서 ‘시장 있는 사회주의’로 변화했다면, 이러한 ‘시장 있는 사회주의’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북한의 시장화 추세는 ‘시장 있는 사회주의’에서도 더욱 확대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현재 북한은 경제위기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시장의 성장이 용인되는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경제위기가 종식된 상황에서는 북한당국이 새로운 규제책을 들고 나와 더 이상 시장의 확대가 불가능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질문들과 관련하여 북한의 시장화 경향에 대한 다음과 같은 추가적 명제 또는 주장들에 대해 한번 더 검토해 보기로 하자.

[B-6] 사회주의 경제의 운영을 위해서는 시장의 존재가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사회주의 경제는 계획으로 이루어지는 공식부문(formal sector)과 계획 밖의 시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비공식부문(informal sector)으로 이분화될 수밖에 없다.

[B-7] 사회주의 경제가 발전할수록 비공식 부문의 비중은 점차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B-8] 앞의 [B-6]와 [B-7]을 북한의 경우에 적용하면, 북한의 시장화 경향은 앞으로도 꾸준히 계속되어 북한경제 자체가 시장경제로 이행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북한경제가 그간 ‘시장 없는 사회주의’에서 ‘시장 있는 사회주의’로 점진적·연속적으로 변화해 온 것처럼, 앞으로는 ‘시장 있는 사회주의’에서 ‘사회주의 없는 시장’으로 점진적·연속적으로 변화해 갈 것이다.

우선 [B-6]의 주장을 살펴보자. 우리는 앞에서 사회주의 경제의 핵심이 ‘사적 소유의 부재’와 ‘계획 및 계획기구의 존재’ 그리고 ‘공산당 독재’라는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경제의 운영에 있어서 시장의 존재가 과연 필수적일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론적으로 매우 커다란 논란거리이지만, 적어도 현실로 존재했던 거의 모든 사회주의 경제에서는 시장이 존재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 이유는 사회주의적 계획의 현실적 한계 또는 특징 때문이었다. 복잡한 이론적 논쟁거리를 회피하기 위해 한 가지 직관적인 예만을 들어 이를 설명해 보자. 어떤 사회주의 경제의 A라는 공장에서 한 대의 자동차를 만들 경우 여기에 소요되는 중요 자재인 1톤의 철을 B와 C공장에서 공급 받으라는 계획을 중앙계획자가 만들기는 상대적으로 쉽지만, 이를 위한 보조 자재인 1,000개의 볼트를 D와 E공장에서 공급 받으라는 계획을 만들기는 상대적으로 어렵고,

더욱이 자동차 생산에 필요한 7cm짜리 볼트를 공급 받으라는 계획을 만들기는 상대적으로 더욱 어려울 것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A공장으로 하여금 일반적으로 수요되는 자동차가 아니라 소수의 특정 소비자들만이 원하는 보라색 좌석을 갖춘 자동차를 만들어 그 소비자들에게 공급하라는 계획을 만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다. 아마도 이러한 상황에서 현실적인 계획이란 일반적으로 수요되는 자동차의 생산을 위한 철과 볼트의 공급만을 규정하고, 이를 위해 몇 cm짜리 볼트를 공급 받을 것인가는 A공장과 D, E공장이 서로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또한 보라색 좌석을 갖춘 자동차의 경우에는 A공장과 소비자들이 서로 협의하거나 아니면 소비자들이 스스로 해결하도록 맡기는 것이 될 가능성이 크다. 북한식으로 말하면, A공장과 D, E공장이 서로 협의하는 과정은 기업간 물자시장으로, 그리고 A공장과 소비자 또는 소비자들 사이의 협의과정은 (종합)시장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론적으로 사회주의 경제에서 시장의 존재가 필수적인가 하는 문제와는 별도로 현실적으로는 시장이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클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그런데 문제는 [B-7]의 주장처럼 사회주의 경제의 발전에 따라 이러한 시장 또는 비공식부문의 비중이 점차 증대하는 경향이 있는 가이다. 이러한 주장은 흔히 사회주의 경제의 ‘비공식화’ 가설이라고 불리는데, 바로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반론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반론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장이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먼저 개념적으로 사회주의에서의 각 경제주체들은 계획부문에서의 활동보다 시장 또는 비계획부문에서의 활동에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이려는 유인을 갖는다. 그것이 자신들의 효용이나 후생에 더욱 직접적인 연관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

장의 생산성이 계획부문의 생산성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사회주의 경제의 발전에 따라 자원이 계획부문에서 시장으로 점차 이동하려는 경향이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더욱이 舊소비에트 경제에서처럼 현실로 존재했던 많은 사회주의 경제에서는 이러한 비공식화 경향이 경험적으로 관찰되는 현실적 추세였다고 말할 수도 있다. 실제로 舊소비에트 경제에서의 비공식부문 규모를 추정했던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러한 주장에 공감을 표하고 있다.<sup>47</sup> 예를 들어, 알렉세프와 트레믈(Alexeev and Tremml 1994)은 舊소비에트 경제에서 공식부문의 소득과 저축, 지출간의 상관관계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고 말하고 있다. 비공식부문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이들 공식부문의 경제 변수들 사이의 상관관계가 계속 약화되었다는 뜻이다. 이처럼 사회주의 경제의 비공식화 가설은 개념적으로 또 경험적으로 충분히 주장 가능한 가설이다.

그런데 이러한 비공식화 가설을 받아 들여 북한에 적용할 경우, 그것은 위의 [B-8]의 주장처럼 현재 관찰되고 있는 북한의 시장화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 진행되어, 중국적으로 북한경제가 시장경제로 이행할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왜냐하면 비록 북한이 현재와 같은 경제위기에서 벗어나 안정을 찾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하나의 사회적 제도로서 자리를 잡은 시장의 상대적 규모는 계속 팽창할 것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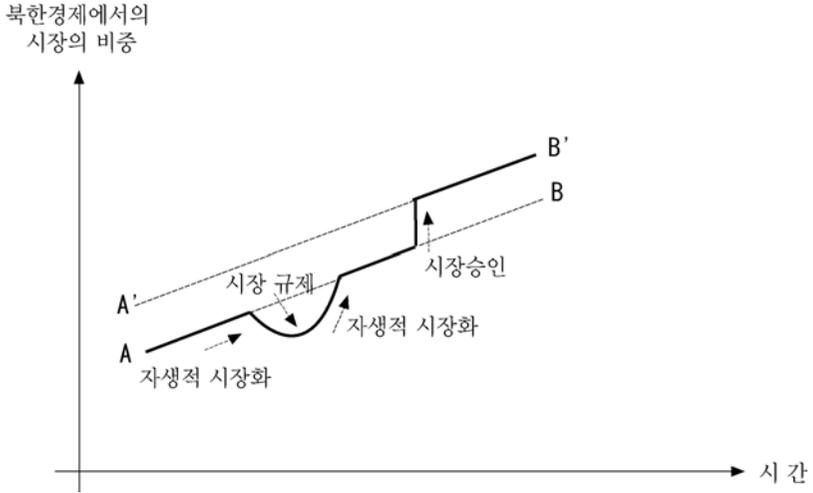
<sup>47</sup> Alexeev, M., "The Russian Underground Economy in Transition," in Lippert O & Walker M (eds.), *The Underground Economy: Global Evidence of Its Size and Impact* (Vancouver, 1997); Rutgaizer V., "The Shadow Economy in the USSR," *Berkeley-Duke Occasional Papers on the Second Economy in the USSR*, No. 34 (February, 1992); Alexeev M and Tremml V., "The Growth of the Second Economy in the Soviet Union and Its Impact on the System," in Campbell (ed.), *The Postcommunist Economic Transformation* (Boulder: Westview Press, 1994).

이고, 이러한 팽창은 결국 계획부문의 비중을 상대적으로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수준까지 진행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북한은 기존 사회주의 (정치)체제의 붕괴 없이 자연스럽게도 연속적인 시장 경제로의 이행을 경험할 것이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러한 연속적인 시장화를 통한 이행을 경험한 나라는 중국과 베트남과 같은 아시아의 농업위주 사회주의 경제밖에 없었다. 북한과 같이 충분한 사회주의적 공업화를 경험하고, 또한 전일적인 계획경제를 추구했던 나라의 경제적 이행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와는 경제구조가 전혀 다른 중국이나 베트남의 사례가 빈번히 이용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때문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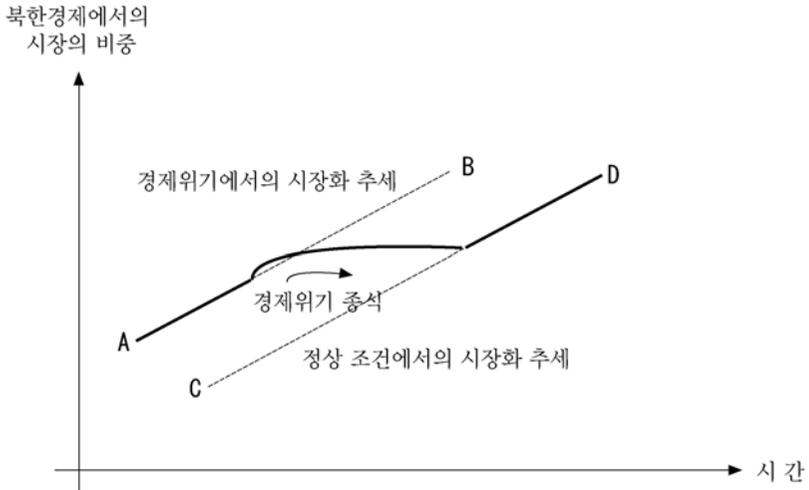
### 북한 시장화 가설과 사회주의 비공식화론

<그림 III-2A>와 <그림 III-2B>는 이상에서 논의한 북한 시장화 가설 또는 사회주의 비공식화 가설을 조금은 도식적인 형태로 정리하고 있다. 과거 북한경제는 매우 통제적인 배급제 경제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그 속에서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미약했을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북한의 경제위기가 시작되면서 북한 경제의 시장화가 시작되었으며, 이에 따라 북한경제에서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점차 증가하였다. 이러한 사실로 인해 북한경제에서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의 추세는 우상향하는 직선 AB로 표시되어 있다. 그런데 북한당국은 경제위기 동안 시장의 빠른 성장을 규제하려는 여러 통제정책들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통제정책들은 북한 경제의 시장화 추세 자체로 인해 모두 실패로 돌아 갔으며, 특히 북한당국이 이러한 실패를 인정하고 시장에 우호적인 정책적 변화를

<그림 III-2A> 북한경제 시장화 가설



<그림 III-2B> 북한경제 시장화 가설과 사회주의 경제 비공식화론



도모함으로써 기존의 시장화 추세는 더욱 강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따라 북한경제에서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당국의 통제정책 실시 시기에는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곧바로 원래의 증가추세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북한당국이 시장에 친화적인 정책을 실시하는 시기에는 그 증가추세 자체가 점프하여 새로운 증가추세인 직선 A'B'로 연결되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그림 III-2B>는 이러한 시장화 추세가 어떻게 북한경제의 시장경제로의 이행으로 연결되는가를 표시한다. 즉 북한이 현재의 경제위기를 벗어나 설사 시장에 대한 통제를 다시 시도한다고 해도, 사회주의 경제 자체의 비공식화 경향으로 인해 북한의 시장화 추세는 새롭게 시작될 것이며, 이에 따라 종국적으로는 북한경제가 점진적이고도 연속적인 시장경제로의 이행을 경험할 것이라는 주장이 두 가지 조건 하에서의 시장화 추세선, 다시 말해 직선 AB(경제위기 하에서의 시장화 추세선)와 직선 CD(정상 조건 하에서의 시장화 추세선)가 서로 연결되는 형태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다.

#### 4. 북한 계획경제 정상화 가설과 사회주의 비공식화론 비판

우리는 앞에서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와 그 의미에 대한 두 가지의 대극적 가설들을 살펴 보았다. 하나는 ‘북한경제는 변화하지 않으며, 따라서 붕괴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반면, 다른 하나는 ‘북한경제는 시장화라는 본질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따라서 점진적으로 시장경제로 이행할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대극적인 가설들 이외에 보다 중립적인 어떤 가설은 존재할 수 없는 것

일까? 아마도 이러한 가설이 존재한다면, 그 내용은 ‘북한경제는 변화하고 있지만, 이러한 변화를 시장화라고 볼 수는 없으며, 더욱이 이를 통해 북한경제가 시장경제로 이행한다거나 붕괴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고 말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2002년 북한의 ‘7.1조치’가 발표된 직후 이른바 북한의 ‘계획경제 정상화 가설’이 제출되었다.<sup>48</sup> 이러한 가설에 따르면, 북한 경제정책의 목표는 경제 위기를 불러온 자본과 노동의 부족과 비효율을 해소하고, 이를 통해 기능정지 상태에 빠진 계획경제를 정상화 시키는 것이지 결코 북한 경제의 시장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설명은 앞서 살펴본 북한 불변화 가설이나 시장화 가설 모두와 일정한 차별성을 갖는다. 물론 이 가설은 북한경제의 이행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러나 사회주의 경제의 이행과 관련해서도 앞서 언급한 붕괴론이나 비공식화론에 대한 여러 반론이 존재한다. 만일 이러한 반론을 북한 계획경제 정상화 가설과 연결시킨다면 위와 같은 보다 중립적인 내용의 가설을 만드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가설은 1980년대 후반 북

<sup>48</sup> 이러한 가설은 ‘조동호, “계획경제시스템의 정상화: 최근 북한경제조치의 분석 및 평가,” 『KDI 정책포럼』, 제160호(서울: KDI, 2002.7)’라는 선구적인 연구에 의해 제출되었다. 그는 2002년 ‘7.1조치’가 자본과 노동 그리고 기술이라는 북한경제의 기본적 취약 요소들을 어떻게 개선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와 연관이 있다고 보고, 이를 분석함으로써 이 조치의 목적이 북한 계획경제시스템의 복구에 있다는 가설을 제출했다. 이 글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북한 계획경제 정상화 가설 역시 기본적으로 그의 논의를 차용한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1) 타 가설들과의 보다 효과적인 비교와 2) 이 가설을 보다 확장하여 북한경제의 이행과 관련된 시사점을 끌어내기 위해 두 가지 측면에서 약간의 서술상의 또는 강조점의 차이를 둔다. 하나는 이 가설을 서술하는 데 있어 자본과 노동 같은 투입요소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과거 북한 경제시스템의 유지와 변화라는 측면에 더욱 초점을 맞추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이 과정에서 시장과의 관계를 보다 명시적으로 고려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 제시하는 가설은 본래 이 가설이 제출되었던 모습과는 일정한 차이를 보일 위험이 있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한의 경제정책 변화를 가장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진진 하지만, 상대적으로 이러한 정책적 변화가 북한경제의 이행에는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별다른 정보를 제공해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론적으로 그다지 도전적인 가설은 아니다.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와 관련하여 계획 정상화 가설과 사회주의 경제 붕괴론 및 비공식화론 비판을 서로 연결할 경우 어떤 강점과 약점을 가지는지에 대해 조금은 꼼꼼히 검토해 보기로 한다.

### 북한 계획경제 정상화 가설

만일 누군가가 ‘북한경제는 변화하고 있지만 그것은 시장화와는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려 한다면, 그는 이러한 주장을 어떤 방식으로 전개하는 것이 효과적일까? 이러한 질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서로 연결된 몇 가지의 부분 명제 또는 주장들에 대해 생각해 보자.

[C-1]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는 1980년대 이후 계속된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 과정이었고, 따라서 그 변화의 궁극적 목적은 북한경제의 생존을 위해 경제위기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었다.

[C-2] 그런데 과거 북한경제는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일반적 특징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이러한 계획경제의 북한식 운영방법에서 발생한 고유의 특징이었다. 특히 후자의 대표적 특징으로는 ‘과도히’ 중앙집중적인 계획경제 운영과 시장을 완전히 배제한 배급제적 경제운영을 들 수 있다.

[C-3] 북한당국은 경제위기를 맞아 더 이상 과거 북한식의 고유한 계획경제 운영방법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과거의 운영방법을 개선해 기존의 계획경제를 부활시킴으로써 경제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시도 하였다. 이런 측면에서 북한의 경제정책 역시 1) 기존 사회주의 계획경제 자체는 굳건히 지키되, 2) 그 운영을 분권화하고, 계획에 일부 시장적 요소를 도입함으로써 전체 계획경제의 효율성을 증대 시키며, 3) 계획경제가 완전 정상화되기 전까지 주민들의 자구적 생존을 위해 일정 부분 시장을 제도화하여 체제 내화 시킴으로써, 한편으로는 계획경제 자체에 대한 체계적 도전을 방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의 자원을 활용해 계획경제 정상화를 꾀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C-4] 이러한 정책의 결과 북한경제에서 시장의 위치가 더욱 중요해졌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북한에서 시장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과잉 해석할 수는 없다. 북한 경제정책의 근본 목적이 계획경제의 정상화에 있다고 볼 때, 만일 시장의 성장이 이에 걸림돌로 작용할 경우, 얼마든지 시장을 규제하려는 노력이 나타날 수 있고, 또 실제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C-5] 따라서 현재 북한경제의 변화를 과거의 ‘시장 없는 사회주의 경제’에서 ‘시장 있는 사회주의 경제’로 변모한 것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과거의 ‘통제적이고 경직적인 계획경제’에서 보다 ‘분권화되고 유연한 계획경제’로 변모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다.

우선 위의 [C-1]의 주장은 앞에서 여러 번 언급한 것처럼 매우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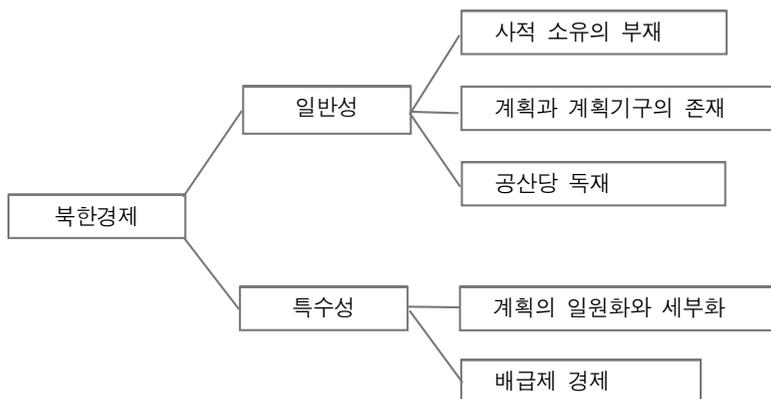
연스러워 보인다. 또한 [C-2]의 주장 역시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다. 실제로 과거 북한경제는 정상적인 사회주의 경제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만큼 매우 독특한 여러 고유한 특징을 갖고 있었다. 물론 그것은 ‘사적 소유의 부재’와 ‘계획 및 계획기구의 존재’ 그리고 ‘공산당 독재’라는 사회주의 경제의 기본 원리 위에 건설된 경제였다. 그러나 그 운영방법은 독특하였다. 무엇보다 북한당국은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라는 원칙을 내세워 말단 경제주체의 모든 구체적 경제행위를 중앙 집중적인 위계화된 행정기구의 명령으로 해결하려 했다. 다시 말해, 사회주의 경제 내의 모든 경제행위를 중앙계획자가 계획하고 통제하는 완전 계획화 체계를 구축하려 시도한 것이다. 이러한 체계에서는 당연히 계획부문 내부의 모든 자원배분이 계획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 자원배분을 둘러싼 기업간, 성(省)간 또는 기업과 성사이의 협상이나 거래, 바게이닝(bargaining)과 같은 행위는 전혀 용납되지 않는 것이다. 실제로 북한의 대표적 경제운영 원리라고 하는 ‘대안의 사업체계’에서는 모든 물자공급을 중앙이 위계화된 행정기구를 통해 책임을 지고 생산자에게 공급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이러한 비계획 기구에 의한 자원배분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완전 계획화 체계에서는 개별 경제주체의 소비행위 역시 철저히 중앙계획자에 의해 계획되고 통제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북한은 그간 식량을 비롯한 거의 모든 주요 소비물자를 배급제를 통해 분배함으로써 이러한 소비행위에 대한 중앙의 통제를 완성하고자 시도했다. 이러한 북한만의 독특한 사회주의 경제운영 방법은, 과거 소비에트의 戰時공산주의 경제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회주의 경제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북한경제가 모델로 했었다는 스탈린 시대의 소비에트 경제에서도 기업간, 성 간 또는 기업과 성 사이

에 자원배분을 둘러싼 협상이나 거래는 흔히 발견되는 일이었다. 개별 경제주체의 소비행위를 조직하는 일 역시 배급제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더욱이 이러한 스탈린 시대의 소비에트 경제는 이후 후르 시초프 시기의 분권화와 브레즈네프 시기의 ‘코시킨 개혁’ 등을 통해 과거와는 다른 보다 유연화되고 분권화된 경제체제로 이행하였다. 동구 사회주의 경제의 경우에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실제로 1960년대 이후 대다수 동구 사회주의에서는 광범위한 화폐의 기능이 인정되고, 시장과 계획이 양립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계획의 유연화·분권화나 이운동기가 강조됨으로써 기업의 (부분적) 시장참여와 개인영리활동의 추구, 중요 자산의 개인적 점유 등과 같은 시장경제적 현상들이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일부분으로 작용하였다. 북한경제가 비록 사회주의 경제의 기본 원리 위에 건설된 것이기는 했지만, 그 운영방법만은 다른 나라와 달리 독특하고 통제적인 것이었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이런 북한식 계획경제의 운영방법에는 두 가지 커다란 약점이 있다. 하나는, 여타의 사회주의 경제에 비해서도, 계획을 작성하고 계획기구를 유지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매우 클 것이라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기업과 개인 모두를 포함한 개별 경제주체의 인센티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약점들은 아직도 경제발전을 위해 동원할 수 있는 가용자원이 충분히 남아 있는 개발 초기 단계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미 보유한 가용자원이 바닥나고, 특히 산출량 마저 하락하기 시작하는 경제위기의 시기에는 사정이 전혀 다르다. 경제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생산성을 향상 시키는 것이 급선무인데, 기존의 북한식 경제운영 체제로는 이

두 가지 모두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1980년대 이후 북한이 경제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기존의 사회주의 경제질서 자체는 유지하면서도, 그 질서의 운영방법은 개혁하려 시도했다는 위의 [C-3]의 주장은 어떻게 보면 매우 당연한 것이다.

<그림 III-3> 북한경제의 일반성과 특수성



문제는 [C-4]의 주장이다. 1980년대 이후 북한이 기존의 경제운영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한 정책들을 아주 좁혀서 말하면, 그것은 계획부문 밖에 시장의 존재를 인정하고, 또 계획부문 안에도 시장적인 요소들을 도입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정책이 결국에는 시장화를 진행시키는 정책이 아니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러한 의문은 사회주의 경제 또는 북한경제에서 시장과 계획이 가지는 연관관계를 살펴 보면 의외로 쉽게 풀릴 수 있다. 다시 말해, 북한경제에서의 시장의 발전은 특수한 조건 아래에서는 계획경제의 회복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2003년 북한은 기존의 농민시장을 (종합)시장으로 재편했다. 이는 종래 체제 밖에 있던 시장의 기

능을 체제 안으로 유도하고, 부과금(장세) 등을 이용해 시장거래의 수익 일부를 국가로 이전하여 계획경제의 회복에 이용하려 한 것은 아닐까? 또한 북한당국은 2003년 이후 공채를 발행하거나 주민들의 외화환전을 장려하고 있다. 이 또한 주민들의 보유 자원을 국가로 환원 시킴으로써 계획경제의 활성화에 투입하려는 것은 아닐까? 2002년 ‘7.1 조치’ 이후 북한의 시장에서는 초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북한당국이 이를 억제하려는 어떤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했다고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 한 가지 이유는 그간 시장에서 화폐적 부를 축적한 일부 계층의 구매력을 떨어뜨리고, 이들의 자원을 강제적으로 국가에 이전시키고자 시도하기 때문인 것은 아닐까? 최근 북한의 기업들은 종업원들의 시장활동을 인정해 주는 대가로 이들로 하여금 일종의 납부금(물)을 걷고 있다. 이는 현재 북한이 추진중인 시장의 제도화가 시장 자체의 발전 보다는 이를 통한 민간부문의 국가(계획부문)로의 자원이동에 더 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 이처럼 북한에서의 시장의 존재는 계획부문의 회복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측면을 갖고 있다.

그런데 1980년대 후반 북한의 경제정책은 존재하지 않던 시장을 새로이 열어 주려던 것이 아니라, 이미 자생적으로 존재하고 그 세력을 확장해 나가는 시장을 ‘승인’ 또는 ‘제도화’하는 정책이었다. 이러한 정책은 두 가지의 상반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하나는 ‘제도화’를 통해 기존 시장의 규모와 세력이 이전에 비해 더욱 확대되는 효과이다. 다른 하나는 북한당국 또는 계획부문으로 하여금 시장을 공식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줌으로써 계획부문이 회복되는 효과이다. 만일 전자의 효과가 후자의 효과 보다 크다면 북한에서 시장의 비중은 더욱 확대될 것이며, 따라서 북한경제가 계속 시장화 되고

있다고 말하기가 매우 수월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전자의 효과보다 후자의 효과가 더욱 크다면, 북한에서의 시장의 비중은 오히려 하락할 것이며, 이에 따라 북한경제가 계속 시장화 되고 있다고 말하기도 매우 어려워질 것이다. 더욱이 이미 언급했듯이 북한당국은 언제든 시장의 성장을 규제하려는 정책을 새로이 도입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위의 [C-4]와 같이 ‘비록 북한경제에서 시장의 위치가 중요해 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근거로 북한경제가 시장화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말하는 것 역시 얼마든지 합리적인 주장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만일 [C-4]의 주장을 합리적인 것으로 받아 들인다면, [C-5]의 주장 역시 합리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1980년대 이후 북한경제가 변화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과 동시에 이러한 변화는 시장화가 아니라고 말할 경우, 남아 있는 유일한 북한경제 변화의 모습이란 결국 기존 계획경제의 운영방법에 관한 변화뿐이기 때문이다.

## 사회주의 비공식화론 비판

그렇다면 이러한 ‘북한 계획경제 정상화’ 가설은 북한경제의 이행에 대해서는 어떤 함의를 내포하고 있을까? 물론 연구자에 따라 이러한 가설을 ‘사회주의 경제 붕괴설’이나 또는 ‘사회주의 경제 비공식화 가설’과 연결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제시한 이 가설의 논리적 친화성을 고려하면, 그것은 사회주의 경제의 운명과 관련된 ‘붕괴설’이나 ‘비공식화 가설’ 모두를 부정하는 것이 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 보인다. 이러한 사실을 조금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명제 또는 주장들에 대해 생각해 보자.

[C-6] 사회주의 경제의 변화과정을 모두 통틀어 하나의 장기적 추세로 살펴보면, 다시 말해 사회주의 경제의 역사를 통제적인 전시공산주의경제에서부터 보다 유연하고 분권화된 계획경제에 이르기까지 변화를 거듭한 장기적인 과정으로 놓고 보면, 본질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회주의 경제의 필연적 붕괴의 증거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C-7] 현실적인 사회주의 경제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비공식 부문이 존재하였지만, 이러한 비공식 부문의 비중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주장에는 이론적으로, 경험적으로 여러 반대 증거가 존재한다.

[C-8] 위의 [C-6]와 [C-7]을 북한의 경우에 적용하면, 북한경제가 보다 분권화되고 유연한 계획경제로서의 변화를 완성할 경우, 이것이 필연적으로 붕괴한다거나 또는 점진적이고도 연속적인 시장화의 경로를 통해 시장경제로 이행할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오히려 매우 극단적으로, 이러한 새로운 모습의 북한경제가 과거 소비에트의 新경제정책 시절이나 집단화 이전 초기 북한경제에서처럼 일정한 경제적 성과를 이루어 낸다면, 북한경제는 향후 상당기간동안 시장과 계획이 공존하는 사회주의 경제를 유지할지도 모른다.

우선 [C-6]의 주장처럼 사회주의 경제의 역사를 그 성립초기에서부터의 장기적인 경제추세의 변화로서 관찰해 보면 본질주의자들의 가설을 지지하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sup>49</sup> 예를 들어, 과거 소비에트

<sup>49</sup> 이하의 논의는 Harrison, M., "Are Command Economies Unstable? Why did the Soviet Economy Collapse?," *University of Warwick Working Paper* (University of Warwick, November 1999); Harrison M., Coercion, "Compliance,

경제의 움직임은 1928~1987년간의 구체적인 데이터로 재구성해 보면, 1) 당시 소비에트의 생산성은 상승추세에 있었으며, 2) 경제주체들의 후생(welfare gain) 역시 증가하고 있었고, 3) 많은 경제주체들이 사회주의적 가치에 우호적인(loyal) 태도를 보였으며, 4) 경제성장률 역시 (+)를 유지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소비에트 경제가 몇 차례에 걸친 요동을 경험했으나, 본질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체제적 불안정성에 시달린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주목해야 할 점은 이 기간동안 소비에트 경제는 新경제정책(New Economic Policy) 이후 스탈린의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시기를 거쳐 후르시초프와 브레지네프 등의 다양한 경제개혁을 통해 끊임없이 변모해 왔다는 것이다. 따라서 만일 북한경제 역시 앞으로 보다 유연화되고 분권화된 계획경제로 변모하고, 또 이처럼 변화된 북한경제를 소급하여 그것이 처음 등장했던 1945년 이후부터의 장기적 경제추세의 변화로서 관찰해 보면, 과연 본질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체제적 불안정성이 나타나겠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쉽게 답을 예단할 수 없다는 뜻이다.

[C-7]의 주장처럼 사회주의 비공식화 가설에 대해서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다. 우선 개념적으로 사회주의 경제 안에서의 시장과 계획은 負(-)의 관계를 맺을 수도 있지만, 또한 正(+)의 관계를 맺을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사회주의 경제에서의 시장은 그 속성상 계획과 대체적인 관계를 맺기도 하지만, 반대로 계획을 보완해 그 성공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것은 불완전한 계획

---

and the Collapse of the Soviet Command Economy,” *Economic History Review*, Vol. 55, No. 3 (2002)에 주로 의존하였다. 舊 소비에트 경제의 생산성 추세에 대한 일반적 설명에 관해서는 Ofer, Gur., “Soviet Economic Growth: 1928~1985,”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Vol. 25, No. 4 (December 1987)를 참조하라.

의 실패 가능성을 줄이고, 계획의 단순성을 보완함으로써 경제주체의 후생에 기여해 역으로 계획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계획부문에 자원을 이전함으로써 계획부문 팽창에 기여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보자.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사회주의 경제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는 A공장과 여기에 볼트를 제공하는 D와 E공장을 이야기 한 바 있다. 현재 이들 공장들은 서로 협상을 통해 자동차 생산에 필요한 7cm 짜리 볼트를 생산, 공급하고 있으며, A공장은 D와 E공장과의 협상에 쓰기 위해 자체의 자원 일부를 축적하여 비축해 두고 있다고 가정하자. 그런데 이 경우 중앙계획자가 A공장에게는 지금부터 D와 E공장 뿐만 아니라 F, G, H 등 여타의 공장으로부터도 볼트를 공급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D와 E공장에게는 기존의 A공장뿐 아니라 A', A" 등 여타의 자동차 공장에도 볼트를 공급할 수 있다고 말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즉 중앙계획자가 기존의 물자공급시장을 확대하여 보다 경쟁적인 시장으로 변모시킨 것이다. 한편으로 A공장은 추가적인 F, G, H공장 등과 협상하기 위해, 또한 경쟁사로 등장한 A'와 A" 등의 공장에 대응하기 위해 더욱 많은 협상 자원을 비축하고자 시도할지 모른다. 이러한 추가적 협상 자원의 비축은 결국 계획부문에 쓰여질 자원이 협상이라는 ‘비계획적’ 용도로 쓰여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계획부문의 성과에는 負(-)의 효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A공장은 추가적인 F, G, H공장 등의 물품 제공처를 확보함으로써 기존 D와 E공장과의 협상 실패로 인한 불량 자동차의 생산 가능성을 그만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로 하는 볼트의 실제 조달비용을 낮추어 더 많은 자원을 계획부문의 자동차 생산에 돌릴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는 계획부문의 자동차 생산에 正(+)의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이처럼 사회주의 경제에서는

시장이 계획에 미치는 正의 효과와 負의 효과가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사회주의 경제가 발전할수록 또는 시장이 발전할수록 반드시 비공식 부문의 비중이 더욱 높아진다고 단정하기가, 적어도 개념적으로는, 매우 힘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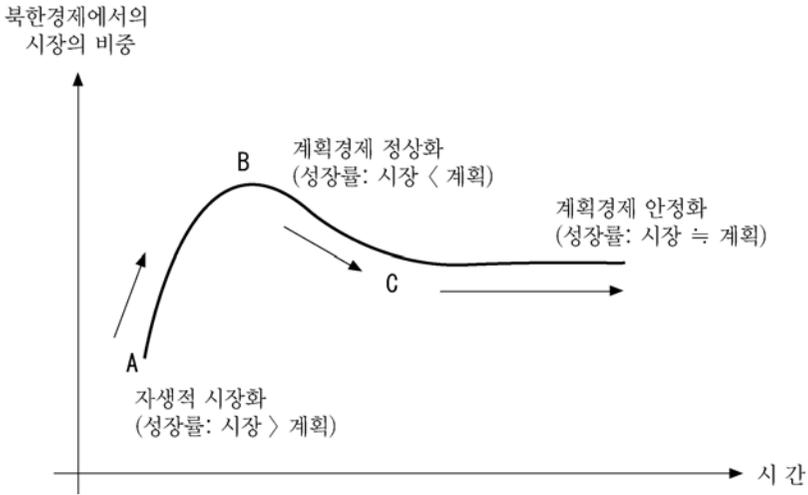
더욱이 과거 소비에트 경제에서 비공식 부문의 규모를 연구한 최근의 연구성과들은 1961~1987년간 소비에트의 비공식부문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정한 수준에서 매우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sup>50</sup> 이러한 사실은 사회주의 중앙계획자의 시장에 대한 정책이 단순히 그 성장을 억제하거나 용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계획부문의 성장과 적절히 균형을 맞추도록 유지함으로써, 전체 경제를 안정적이고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것이었다는 점을 시사한다. 사회주의 경제의 비공식화 가설은 경험적인 측면에서도 여러 반대 증거가 존재한다는 뜻이다.

여기에서 한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이러한 사회주의 붕괴설이나 비공식화 가설에 대한 반론이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북한 계획경제의 정상화 가설과 논리적으로 일맥상통한다는 점이다. 만일 이러한 사실을 인정한다면, 앞의 북한 계획경제의 정상화 가설을 확장할 경우 우리는 위의 [C-8]과 같이 향후 새롭게 등장할 보다 유연한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는 붕괴한다고도 또 점진적으로 시장경제로 이행한다고도 말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다.

---

<sup>50</sup> Kim B., "Informal Economy Activities of Soviet Households: Size and Dynamics,"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Vol. 31, Issue 3 (September 2003).

<그림 III-4> 북한 계획경제 정상화 가설과 사회주의 비공식화에 대한 반론



### 북한 계획경제 정상화 가설과 사회주의 비공식화론 비판

<그림 III-4>는 이상의 ‘북한 계획경제 정상화’ 가설을 도식화 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북한당국은 기존 계획경제의 운영방법을 변화시킴으로써 경제위기에서 벗어나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계획부문에 시장적인 요소들을 도입하고 계획부문 밖에 시장의 존재를 제도화하여 인정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북한경제에서의 시장비중은 곡선 AB로 지속적으로 높아졌다. 그러나 이러한 시장의 비중이 계속 무한정 높아지지는 않는다. 북한당국의 근본적인 목적이 시장 또는 시장적인 요소를 이용하여 계획부문을 활성화 하는 것이기 때문에 1)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시장의 성장과 더불어 계획부문의 회복이 동시에 진행되어 전체 경제에서의 시장의 비중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오히려 떨어뜨릴 수 있으며, 2) 만일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시장

의 성장이 계획부문의 성장을 저해하게 된다면, 북한당국이 강제로 시장을 통제하는 새로운 정책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북한경제에서의 시장의 비중은 그 정점인 점 B를 지나 곡선 BC로 하향 안정화되는 것으로 그려졌다. 이러한 안정화된 시장의 비중은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가 성공을 거두어 보다 유연한 계획경제 체제가 완성된 이후에도 크게 변화하지 않는다. 사회주의 경제는 그 속성상 일방적인 시장화가 진행되어 시장경제로 이행하지도 않으며, 또한 갑작스런 붕괴로 종식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 5. 북한의 경제개혁과 이행에 관한 정치변화의 가설

이제까지 우리는 북한의 경제개혁과 이행에 대한 세 가지의 주요 가설들을 검토했다. 이들 가설들은 각각 나름의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북한경제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펼쳐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들 가설 모두는 공통적으로 두 가지의 이론적 취약점을 갖고 있다. 하나는 이들 가설들이 북한의 ‘정치’ 또는 ‘정치의 경제적 함의’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극단적으로 말해 ‘북한경제의 현재와 미래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북한의 정치’라는 주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연구자가 과연 얼마나 될까? 예를 들어, 현재 북한의 김정일 정부가 보다 민주적인 새로운 정부로 대체된다면, 북한경제에서도 거의 직각변동에 가까운 대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주장은 누구나 쉽게 수긍할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가 앞에서 검토한 가설들에는 이러한 가능성이 전혀 들어 있지 않다.

이들 가설의 또 다른 취약점은 이들이 북한경제의 미래에 대해 어떤 특정한 비전과만 너무 논리적으로 밀착되어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북한은 변화하지 않는다’는 가설은 ‘앞으로 북한경제가 무너질 것’이라는 비전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크지만, 반대로 ‘앞으로 북한경제가 점진적 시장화를 통해 시장경제로 이행할 것이다’라는 비전과는 연결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이것은 다른 두 가지 가설들 모두에 있어서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올바른 경제학적 가설이라면 미래의 상황에 대해 어떤 단정적 비전만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복수의 서로 다른 비전들을 각각의 경우의 수와 대비시켜 모두 포괄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의 경제개혁 및 이행과 관련하여 북한의 ‘정치’를 고려하고, 또한 미래에 대해 서로 다른 복수의 전망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가설이 과연 존재하는 것일까? 불행하게도 현재까지 이 주제와 관련해 이루어진 기존의 논의들 속에는 이러한 가설이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과거 소비에트 경제의 붕괴과정에서 제출된 한 가지 시론적 가설을 보다 새로운 각도에서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북한경제에 적용해 보도록 한다.

과거 소비에트 경제의 붕괴와 관련된 한 가지 흥미로운 가설은 ‘소비에트 경제는 붕괴할 수밖에 없어서 붕괴한 것이 아니라, 일련의 불행한 잘못된 정치적 결정이 누적되면서 우연히 붕괴한 것이다’라고 말한다. 보다 일반론적으로 표현한다면, 사회주의 경제는 이미 붕괴가 운명지워져 있었던 것도 아니며, 시장화와 같은 장기적인 체제의 해체 경향에 시달린 것도 아니지만, 그것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최고 지도자들이 연이어 잘못된 결정을 내림으로써 어쩔 수 없이 사멸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그 필연성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에 따라 이미 일어난 어떤 일이 반드시 일어날 필요가 없었다고 말한다면, 그것을 패자측의 변명 찾기 쪽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소비에트 체제의 붕괴는 몇몇 개인들의 재앙에 가까운 결정이 만들어낸 전혀 예기치 못한 결과였다.”<sup>51</sup>

물론 이러한 가설은 이미 사회주의 경제가 붕괴한 상태에서 제출되었기 때문에 보다 엄밀한 이론화의 작업을 거치지 않는다고, 따라서 현재까지 하나의 시각의 형태로만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여전히 많은 사회주의 연구자들에 의해 공유되고 있는 시각이다. 더욱이 이러한 시각은 1) 사회주의 경제의 미래와 관련해 ‘정치’라는 개념을 명시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2) 사회주의 경제의 ‘붕괴 가능성’과 그것의 ‘유지 가능성’을 동시에 포괄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우리가 북한의 경제개혁과 이행이라는 문제와 관련해 보다 체계적이며 포괄적인 가설을 작성하고자 할 때 충분히 고려해 볼만한 가치가 있는 시각이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각을 어떻게 발전시켜 북한에 적용할 수 있을까?

### 계획자 모니터링과 생산자 노력: 사회주의 경제의 균형과 붕괴

아주 단순화시켜 말한다면, 사회주의 경제는 중앙계획자와 생산자라는 두 개의 경제주체를 축으로 움직이는 경제이다. 계획자는 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생산자에게 지시하고, 생산자는 이러한 지시를 받아 계획을 실행함으로써 경제가 작동하는 것이다.<sup>52</sup> 그런데 이러한

<sup>51</sup> Kontorovich, V., “The Economic Fallacy,” *The National Interest*, Vol. 31 (1988), p. 44; Harrison, M., “Are Command Economies Unstable? Why did the Soviet Economy Collapse?”에서 재인용.

<sup>52</sup> 이하의 논의는 소비에트 경제의 붕괴를 ‘정치’라는 ‘우연적’ 요인으로 설명할 수

계획자와 생산자 사이를 매개하는 변수가 바로 계획자의 모니터링이다. 만일 계획자가 계획을 만들어 지시만 하고 이의 실행을 모니터링하지 않는다면, 생산자는 계획을 실행할 유인을 잃음으로써 계획이 실현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전체 경제가 작동을 멈추게 되는 셈이다.

그런데 당연한 말이지만, 계획자의 모니터링에는 비용이 소요된다. 거대한 모니터링 기구를 유지해야 하고, 생산자가 계획을 효과적으로 달성했을 때에는 보너스 등 유인수단을 제공해야 하며, 반대로 계획을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일정한 징벌(punishment)을 내려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모니터링 비용은 계획자의 호주머니 또는 계획자 잉여에서 나와야 하며, 이러한 계획자 잉여의 크기는 전체 경제의 총산출량의 크기에 비례한다. 따라서 계획자는 경제의 총산출량의 크기가 커질수록 모니터링 또한 강화하려고 하는 유인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런데 경제의 총산출량의 크기란,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생산자가 계획실행에 투여하는 실질적인 노력(effort)의 크기에 비례할 것이다. 따라서 종국적으로 계획자의 모니터링은 생산자의 노력의 함수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주어진 생산자의 노력에 의해서 총산출량의 수준과 계획자 잉여의 크기가 결정되고, 이러한 총산출량과 계획자 잉여의 수준에 의해서 계획자의 모니터링 정도가 결정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는 계획자의 모니터링 변화 스케줄을 생산자가 계획실행에 투여하는 노력의 함수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생산자가 계획실행에 투여하는 노력 역시 계획자의 모니터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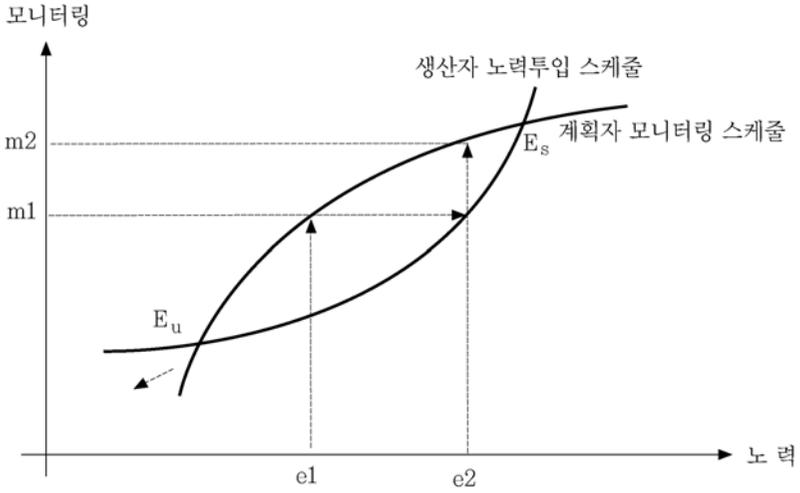
---

있는가를 탐구하는 마크 해리슨(Mark Harrison) 교수와 필자 사이의 개인적인 토론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았다. 특히 이 주제에 대한 그의 두 가지 연구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Harrison, M., "Are Command Economies Unstable? Why did the Soviet Economy Collapse?"; Harrison M., "Coercion, Compliance, and the Collapse of the Soviet Command Economy," *Economic History Review*, Vol. 55, No. 3 (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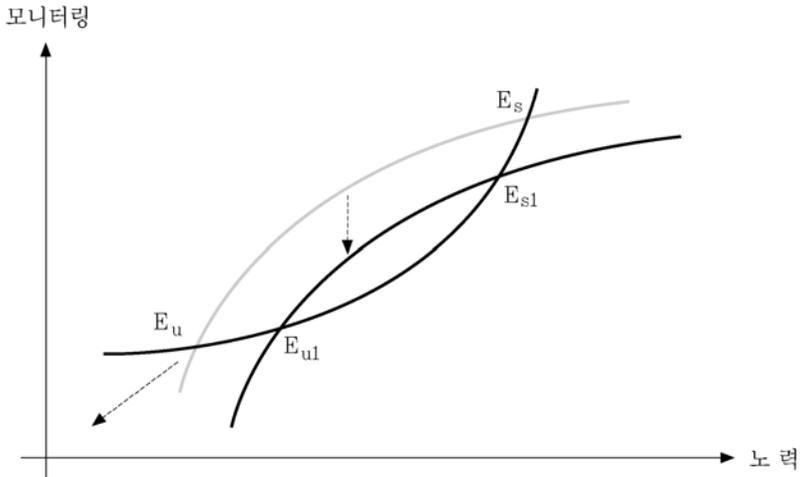
수준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만일 계획자가 계획달성에 보다 많은 보너스를 지급하거나, 계획실패에 보다 가혹한 징벌을 내린다면, 생산자는 계획실행에 보다 많은 노력을 투입할 유인이 생기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산자의 노력 투입 스케줄 역시 계획자의 모니터링의 함수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러한 사회주의 경제의 균형은 계획자의 모니터링 스케줄과 생산자의 노력 투입 스케줄이 서로 일치하는 곳에서 결정될 것이다. <그림 III-5A>는 이러한 균형이 두 개가 존재하는 사회주의 경제를 보여준다.  $E_s$ 에서는 생산자가 계획실행에 많은 노력을 투입하여 총산출량 및 계획자 잉여의 수준이 높고, 이에 따라 계획자 역시 높은 수준의 모니터링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계획자의 높은 모니터링 수준에 따라 생산자의 높은 수준의 노력 투입이 유지됨으로써 高노력-高모니터링의 균형이 지탱되고 있는 것이다. 반면,  $E_u$ 에서는 생산자가 계획실행에 적은 노력을 투입하여 총산출량 및 계획자 잉여의 수준이 낮고, 이에 따라 계획자 역시 낮은 수준의 모니터링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또한 이러한 계획자의 낮은 모니터링 수준으로 인해 생산자의 낮은 수준의 노력 투입이 용인됨으로써 低노력-低모니터링의 균형이 달성되고 있는 것이다.

<그림 III-5A> 생산자 노력투입 스케줄 그리고 사회주의 경제의 균형



<그림 III-5B> 정치변화와 모니터링 스케줄의 이동 그리고 사회주의 경제의 붕괴



그런데 여기에서 흥미로운 점은  $E_s$ 의 高노력-高모니터링 균형은 안정적인 반면,  $E_u$ 의 低노력-低모니터링 균형은 불안정적이라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생산자들의 노력 투입이 어떤 이유에서건  $E_s$ 의 균형을 벗어나  $e1$ 으로 떨어졌다고 하자. 그러면 계획자의 모니터링 수준은  $m1$ 으로 변화할 것이다. 왜냐하면  $e1$ 의 생산자 노력 투입이 가져오는 총산출량 및 계획자 잉여 수준에서 계획자가 시도하는 모니터링 수준이 바로  $m1$ 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m1$ 의 모니터링 수준에서는 생산자들이  $e1$ 이 아니라  $e2$ 의 노력을 투입하려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계획자의 모니터링 수준 역시 다시  $m2$ 로 증가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어 결국 생산자의 노력 투입과 계획자의 모니터링 수준은 종래의 균형인  $E_s$ 의 수준으로 복귀할 것이다. 반면, 동일한 현상이  $E_u$ 의 균형에서 발생했다고 하면, 정반대로 생산자의 노력 감소는 총산출량 및 계획자 잉여의 감소→계획자 모니터링 수준 감소→생산자 노력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벌어져 경제는  $E_u$ 의 균형상태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상과 같은 모델이 어떻게 사회주의 ‘정치’의 변화로 인한 경제의 붕괴 또는 현상 유지 현상을 설명할 수 있을까? 이제 <그림 III-5A>에서 묘사한 사회주의 경제에 보다 민주적인 정부가 들어서 공무원 및 근로자들의 임금인상 요구가 빗발치고 있으나, 새로운 정부는 과거의 보다 억압적인 정부와는 달리 이러한 요구를 물리력으로 억제할 능력이 없다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일단 계획자가 느끼는 호주머니의 크기, 다시 말해 계획자 잉여는 총산출량 수준이 일정하다고 해도 근로자들의 임금인상 등으로 인해 과거에 비해 더욱 작아질 것이다. 더욱이 공무원의 임금인상 등으로 계획자가 지불해야 하는 모니터링 기구의 유지 등 모니터링 비용은 오히려 더 상승할 것이

다. 이에 따라 계획자는 동일한 총산출량 수준에서도 과거에 비해 모니터링 수준을 더욱 낮추려고 할 것이다. 그 결과 <그림 III-5B>에 나타나 있듯이 계획자의 모니터링 스케줄이 과거에 비해 하방으로 이동할 것이다. 즉 동일한 생산자의 노력 투입과 이에 따른 동일한 총산출량 수준에서도 과거보다 더욱 적은 모니터링 수준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만일 이 사회주의 경제가 과거  $E_s$ 의 안정적 균형 상태에 있었다면, 이러한 새로운 변화는 체제 자체의 붕괴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기존 모니터링 스케줄의 하방 이동으로 인해 새로운 안정적 균형인  $E_{s1}$ 으로 균형이 이동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이 사회주의 경제가 과거  $E_u$ 의 불안정적 균형 상태에 있었다면 이야기는 전혀 달라진다. 이제는 기존 모니터링 스케줄의 하방 이동으로 경제는 균형 상태에서 이탈해 생산자 노력 감소→총산출량 및 계획자 잉여의 감소→계획자 모니터링 수준 감소→생산자 노력 감소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 결과 1) 총산출량 급락, 2) 모니터링 기구의 해체 또는 작동 불능, 3) 계획 실행기능 마비, 4) 생산자들의 체제이탈 등의 현상이 만연할 것이다. 사회주의 경제의 붕괴란 결국 이러한 체제의 기능정지 현상을 말한다는 점에서, 앞서와 같은 사회주의 ‘정치’의 변화가 곧 사회주의 경제 전반의 붕괴를 가져온다는 뜻이다.

실제로 과거 소비에트 경제가 붕괴하기 직전 고르바초프 新정부는 사회주의 내부의 광범위한 개혁과 개방정책을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생산자들의 분출하는 사회적 욕구에 직면하였다. 그러나 당시 중앙권력기구에 대한 통제력이 과거의 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했던 고르바초프 정부는 이러한 사회적 욕구의 분출을 통제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했고, 그 결과 기존 소비에트 계획기구의 운영에 많은 장애가 초래되었다. 위의 모델에 따르면 바로 이러한 고르바초프 新정

부와 그를 선출한 소비에트 정치환경의 변화가 사회주의 경제의 붕괴를 가져온 직접적 원인이라는 설명이다.

### 북한 사회주의 경제의 균형 붕괴와 경제정책의 변화

그렇다면 위의 모델을 북한의 경우에 적용하면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될까? 우리는 이 글의 제Ⅱ장에서 북한의 경제정책은 1980년대 후반부터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변화는 악화되는 북한의 경제위기를 반영한 것이었다고 지적하였다. 그런데 북한의 경제위기는 외부적인 경제충격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바가 매우 컸다. 1980년대 후반 소비에트 경제가 붕괴하면서 북한이 그동안 사회주의권과 유지하고 있었던 경제관계가 일시에 혼란에 빠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북한경제의 생명선이라고 할 수 있는 원유 도입량의 경우 1988~1996년 사이 매년 15% 이상씩 감소하고, 그 결과 1992~1996년 북한의 GDP 역시 1/3로 하락함으로써 당시 북한경제가 받았던 충격이 어느 정도인지를 말해주고 있다.<sup>53</sup> 이러한 외부충격의 영향을 위의 모델과 관련하여 해석하면, 그것은 1) 북한 생산자들이 동일한 노력을 계획실행에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2) 외부적인 자원공급 감소로 인해 총산출량이 하락하고, 3) 그에 따라 북한 중앙계획자의 잉여 또한 급격히 감소함으로써, 4) 북한의 중앙계획자는 기존의 모니터링 수준을 그만큼 감소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다시 말해, 1980년대 후반 이후의 외부충격으로 <그림 III-5B>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북한 중앙계획자의 모니터링 스케줄이 아래로 수직 이동했다는 것이다. 만일 당시 북한경제의 균형상태가 <그림 III-5B>의  $E_0$ 처럼 불안정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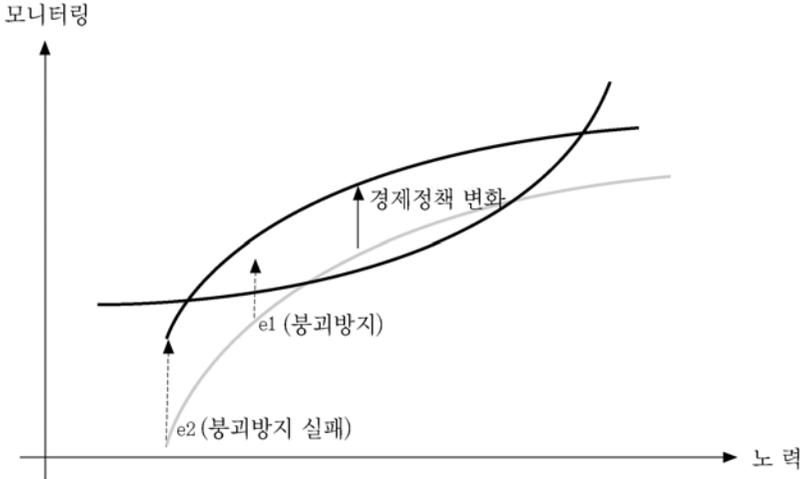
<sup>53</sup> 제Ⅱ장의 <표 II-1>을 참조하라.

인 균형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고 가정한다면, 그 이후 북한당국이 보여준 정책적 변화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다.

우선 북한당국은 불가피하게 기존의 모니터링 수준을 낮추어야만 했을 것이다. 생산자들이 텃밭을 가꾸거나 폐기밭을 경작하는 행위, 직장에 출근하지 않고 시장 거래에 전념하는 행위, 심지어는 직장의 자산을 절취해 시장에서 거래하는 행위 역시 적극적으로 통제할 수 없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체제 밖에서 성장하는 시장과 이로 인한 기존 체제의 침식 현상 모두를 사실상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을 것이다. 또한 위의 <그림 III-5B>처럼 이러한 모니터링의 약화는 곧바로 총산출량의 하락을 불러와 북한의 중앙계획자는 또다시 추가적인 모니터링 수준의 하락을 감내했을 것이고, 이것이 다시 생산자들의 계획실행 노력 감소를 불러오는 악순환이 초래되어 전체 계획경제가 사실상 마비되는 지경에 이르렀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당국의 정책변화는 이러한 계획경제의 마비상황에서 사회주의 경제 자체가 붕괴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졌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를 위해 북한당국은 어떤 방법을 사용할 수 있었을까?

북한 계획경제의 마비상황이 원칙적으로 외부충격에 의한 계획자 모니터링 스케줄의 하방 이동에 있었으니 만큼, 이를 벗어나는 길은 당연히 하방 이동된 계획자 모니터링 스케줄을 다시 상방 이동하는 것뿐이었을 것이다. <그림 III-6>에서 보듯이 북한경제가 e1의 지점에 놓여 있을 때, 점진적인 경제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획자 모니터링 스케줄을 위로 수직 상승시켜 현 경제의 위치를 체제안정 지대로 옮길 필요가 있는 것이다. 계획자 모니터링 스케줄을 상방 이동시키는 데에는 원칙적으로 세 가지의 방법이 있다. 첫 번째 방법은 주어진 생산자의 노력투입 수준에서 총산출량을 증가시켜 종국적으

<그림 III-6>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와 계획자 모니터링 스케줄의 이동



로 중앙계획자의 호주머니를 늘리는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은 총산출량이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중앙계획자의 호주머니를 늘리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중앙계획자가 사용할 수 있는 해외의 원조나 자금지원 등을 받는 것이 그것이다. 세 번째 방법은 중앙계획자의 호주머니가 일정한 상황에서 모니터링의 비용을 경감하는 것이다. 위의 첫 번째 방법은 경제의 생산성 증가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 단기적으로 사용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북한당국으로서는 두 번째와 세 번째 방법을 주로 사용했어야 했을 것이다. 실제로 이 글에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북한당국은 1990년대 중반 이후 꾸준한 개방정책을 실시해 오고 있다. 국제사회로부터 인도주의적 원조와 개발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금강산·개성·신의주 등의 경제특구를 설치해 해외의 투자유치에 노력하고 있고, 무엇보다 남북관계의 개선을 통해 한국자금의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모두 북한

중앙계획자의 호주머니를 늘릴 수 있는 해외자금의 확보와 관련된 것이다.

그런데 1980년대 이후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와 관련해 특별히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세 번째의 방법이다. 실제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가 대부분 이 세 번째의 방법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 중앙계획자의 모니터링 비용을 절감하는 데에는 크게 세 가지의 길이 있다. 하나는 종래 중앙에서 직접 관리하던 모니터링 기구를 축소 개편해, 보다 분권화된 기구로 만드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국가가 모니터링 해야 하는 생산자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체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업체의 경우 여전히 국가가 직접 모니터링 하지만, 그 밖의 소규모 기업체 등에서는 국가의 모니터링을 중지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다. 마지막 수단은 시장을 도입하는 것이다. 만일 국가가 계획부문의 어떤 기업체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중지한다면, 중앙계획자는 그 기업체의 경제적 성과를 파악하고 통제하는 데 애로를 겪게 된다. 이 경우 시장은 그 기업체에 대한 유용한 모니터링 수단이 될 수 있다. 중앙계획자가 그 기업에게 생산량 목표 대신 수익성이라는 지표를 준다면 시장이 중앙계획자를 대신하여 그 기업을 모니터링 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방법은 국가의 중요 기업체에게는 적용하기 위험한 것이다. 이들 기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장에 위임한다면, 이들 역시 중앙계획자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 더욱 시장에 밀착하려 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위기 동안 사실상 작동을 중지한 한계 기업이나 여타의 소규모 기업들에게는 이러한 방법이 얼마든지 적용될 수 있다. 만일 이들이 시장의 모니터링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중앙계획자로서는 사회주의 경제원칙으로서의 실행하기 힘든 사실상의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효과를 얻을 것이며, 반대로 만일 이들이 시장의 모니터링을 통과해 희생한다면, 언젠가 이들을 다시 국가의 모니터링 하에 두어 통제를 부활하는 것이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앞에서 1980년대 후반 이후 북한의 주요한 정책적 변화로 계획의 분권화와 운영방법의 개선 그리고 시장의 제도화 등을 이야기 한 바 있다. 그런데 위의 모델에 따르면 이러한 모든 것은 결국 북한당국이 경제위기를 맞아 이미 손실된 경제에 대한 통제력을 회복시켜 사회주의 경제의 붕괴를 방지하려는 노력과 관련이 있는 것들이다. 이러한 해석을 받아 들인다면, 북한이 왜 그간 수많은 정책적 변화를 보이면서도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유지하겠노라 공언해 왔는지를 이해하는 일은 별로 어렵지 않을 것이다. 또한 왜 한편으로는 시장을 도입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를 규제하려는 반복적인 정책을 실시했는지 역시 이해하기가 별로 어렵지 않을 것이다.

### 북한경제 변화의 정치적 가설

그렇다면 위와 같은 북한의 노력은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당연한 말이지만, 그것은 성공할 수도 또한 실패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만일 그것이 성공한다면 북한경제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하겠지만, 만일 실패한다면 북한경제는 과거 소비에트나 동유럽 경제처럼 붕괴의 길로 접어들게 될 것이다. 위의 <그림 III-6>을 가지고 말한다면, 북한 중앙계획자의 모니터링 스케줄을 상방 이동시키려는 노력이 성과를 거두어 현재의 북한경제 위치 e1이 체제안정화 영역 속으로 들어간다면 북한경제는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이러한 노력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여 현재의 북한경제 위치 e2가

여전히 체제안정화 영역 밖에 위치한다면 북한경제는 붕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북한이 현재처럼 체제 내에 일정 부분 시장을 인정하는 정책을 계속할 경우, 위의 <그림 III-6>은 북한경제의 미래를 토의하는 데에는 다소 불충분하다. 왜냐하면 계획경제 밖에 시장이라는 대안이 존재할 경우 <그림 III-6>의 생산자 노력 투입 스케줄 역시 위 또는 아래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북한의 중앙계획자가 과거와 같은 수준의 모니터링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생산자들은 계획부문 밖에 시장이라는 또 다른 기회가 존재할 경우에는 과거와 똑같은 수준의 노력을 계획부문에 투입하려 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경우 생산자의 노력 투입 스케줄이 위로 이동함으로써 체제 안정화 영역 역시 그만큼 줄어들게 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시장의 존재는 북한 중앙계획자의 모니터링 비용구조에도 본질적인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사회주의 중앙계획자의 모니터링 비용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보너스 또는 경제적 인센티브와 징벌이다. 보너스와 징벌은 그에 상응하는 생산자의 노력을 이끌어 낸다는 측면에서는 동일하지만, 계획자에게 초래하는 부담이라는 측면에서는 매우 다르다. 보너스의 경우에는 계획자가 언제나 자신의 호주머니에서 비용을 지불해야 하지만, 징벌의 경우에는 계획자의 징벌 약속을 생산자가 ‘신뢰’하기만 한다면, 굳이 계획자가 실제 징벌을 실행해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생산자가 징벌이 두려워 기대되는 노력을 실제로 투입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앙계획자의 모니터링 비용은 실현되지 않는 징벌이 많을수록 줄어들게 되며, 이는 계획자의 징벌 약속을 생산자가 얼마나 신뢰하는가 하는 신뢰성의 정도에 따라 좌우된다. 그런데

시장의 존재는 북한의 생산자가 느끼는 계획자의 징벌 약속에 대한 신뢰성에 흠집을 낼 가능성이 있다. 이들이 북한의 사회경제정책이 과거와 비교해 실제로 변화했다고 생각하고, 또한 이를 시장에서 직접 체험한다면, 종전과 같은 계획자의 징벌 약속에 대한 두려움이 점차 감소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북한의 계획자는 점점 더 경제적 인센티브에 의존해야만 하고, 모니터링 비용의 상승으로 인해 기대하는 만큼의 모니터링 수준의 상승이 어렵게 될지도 모르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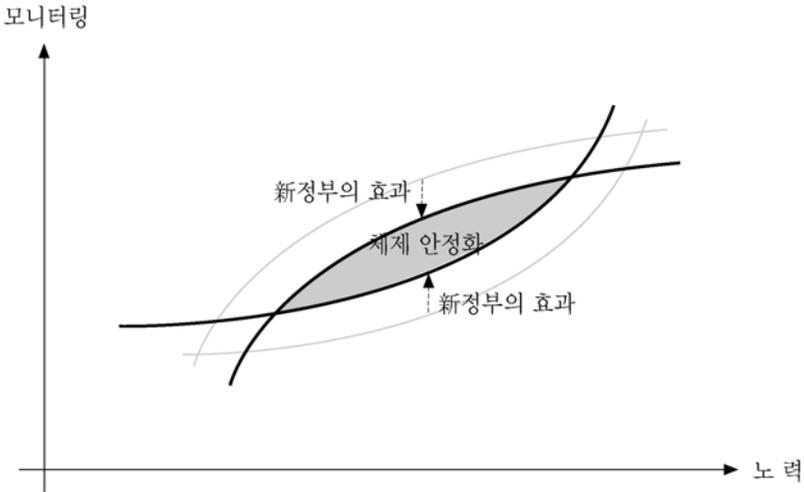
그렇다면 이러한 요소들을 모두 감안할 때 북한경제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여러 시나리오가 존재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북한의 정치적 변화와 관련된 두 가지의 극단적인 경우만을 단지 예제로서 비교 검토해 보기로 한다.

한 가지 경우는 북한의 현정부가 고립된 특정 지역만을 개방해 해외로부터 일정한 추가자금을 확보하고, 이것을 전부 기존의 계획경제의 유지에 사용할 뿐만 아니라, 테러와 같은 극단적인 수단을 통해 주민들을 다시 통제하려 할 경우이다. 다른 한 가지 경우는 북한에 현정부와 똑같은 정도의 권위주의적 新정부가 들어서 첫 번째 경우와 똑같은 방법으로 기존의 계획경제를 유지하려 할 경우이다.

매우 역설적이지만, 이 두 가지 경우 가운데 북한의 계획경제는 첫 번째 경우에서 더 장기간 생존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첫 번째 경우와 두 번째 경우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중앙계획자의 테러와 같은 징벌 부여 약속을 생산자들이 얼마나 신뢰하는가의 차이이다. 現정부는 이미 그러한 징벌들을 사용해 본 경험이 있지만, 新정부는 아직 그러한 징벌들을 실제로 사용해 본 경험이 없다. 따라서 新정부가 징벌과 관련해 생산자들에게 과거와 똑같은 정도의 신뢰성을 확보하려

면, 그는 이 징벌을 실제로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정부는 이러한 징벌의 실제 사용을 시현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은 現정부와 新정부가 비록 동일한 정도의 권위주의적 정부라 해도 그들이 직면하는 계획자 모니터링 비용은 매우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림 Ⅲ-7>에서 보듯이 북한 중앙계획자의 모니터링 스케줄은 新정부보다 현정부에서 더 크게 상향 이동할 것이고, 동일한 논리로 생산자들의 노력투입 스케줄은 新정부보다 현정부에서 더욱 적게 상향 이동할 것이다. 그 결과 북한경제의 체제안정화 영역은 新정부보다 現정부에서 더욱 넓어질 것이다. 모든 것이 동일한 조건에서도 북한의 정치지형의 변화가 북한 계획경제의 생존 가능성에 매우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그림 Ⅲ-7> 북한 신정부의 등장과 그 효과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최근 북한이 체제보위를 위해 現金正일 정부의 유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나, 미국이 매우 조심스럽지만 기존 북한의 ‘체제변화’라는 목표를 ‘정권변화’라는 보다 현실적인 목표로 재조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모두 그 나름대로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IV

## 북한의 비공식 부문 규모 추정과 개혁 가설들의 평가



우리는 이제까지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와 그것의 이행에 대한 함의를 이야기하는 여러 가설들에 대해 살펴 보았다. 그런데 이러한 가설들 가운데 과연 어떤 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적합한 것일까? 이러한 질문과 관련하여 이 장에서는 북한의 비공식 부문 또는 시장을 추정함으로써 각각의 가설들을 평가해 보기로 한다.<sup>54</sup>

물론 제Ⅲ장의 가설들의 적합성 여부를 경험적인 데이터로 완전히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가설은 북한의 시장화 추세에 대한 일정한 가정 또는 주장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예를 들어, 북한의 시장규모가 1980년대 이후 현재까지 현실적으로 변함없이 계속 증대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그렇다면 북한 불변화 가설은, 비록 그 논리적 내용과 함의가 맞다고 하더라도, 경험적으로 지지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에서 시장규모가 계속 상승하는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또 이러한 변화의 의미를 설명하는 다른 가설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북한 불변화 가설은 이러한 현상을 적절히 포용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반면, 북한의 시장규모가 현실적으로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북한 시장화 가설은 아마도 설 자리가 없을 것이다. 그것이 주장하는 핵심적 내용이 경험적으로 부정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계획경제 정상화 가설을 비롯한 여타의 가설에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두 마찬가지이다. 이러

<sup>54</sup> 엄밀하게 말해서, 사회주의 경제의 비공식 부문과 (좁은 의미에서의) 시장이라는 개념은 완전히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前者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수행하는 일체의 경제적 활동이라는 형태로 정의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편의상 양자를 동일한 개념으로 보고 논의를 전개한다. 비공식 부문의 개념에 대해서는 Grossman, G., "The Second Economy of the USSR," *Problems of Communism*, Vol. 26 (1977); O'Hearn, D., "The Consumer Economy: Size and Effects," *Soviet Studies*, Vol. 32, No. 2 (1980)을 보라.

한 이유에서 이 장에서는, 비록 완전한 방법은 아니지만, 앞의 제Ⅲ장에서 제기한 여러 가설들을 평가하기 위한 한가지 방법으로 북한의 비공식 부문 또는 시장규모의 변화추세를 추정하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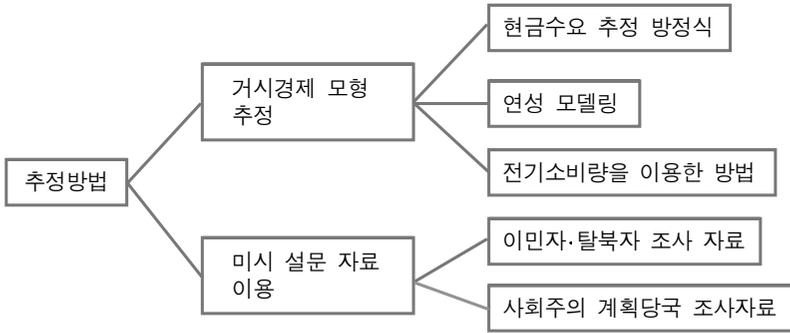
이 장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1절에서는 북한의 비공식 부문 추정과 관련된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며, 2절과 3절에서는 이 가운데 이용 가능한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여겨지는 방법들을 이용해 실제로 북한의 비공식 부문 규모를 추정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절에서는 이렇게 추정된 결과를 가지고 앞의 제Ⅲ장에서 논의한 각종 가설들에 대한 평가를 시도한다.

## 1. 예비적 논의: 사회주의 비공식 부문 추정방법과 북한경제

그렇다면 북한의 시장 또는 비공식 부문의 규모를 어떻게 추정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에 대답하기 위하여 이 글에서는 먼저 과거 사회주의 경제에서의 시장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개발된 여러 기법들에 대해 살펴 보고, 이들이 과연 북한경제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이제까지 연구자들은 사회주의 경제에서의 비공식 부문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크게 두 가지의 방법을 이용해 왔다. 하나는 사회주의 경제에서의 각 가구들을 대상으로 하는 미시적 설문조사자료(microeconomic survey data)를 이용하는 방법이며, 다른 하나는 사회주의 경제의 각 경제변수들의 관계를 이용하는 거시적 경제모형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그림 IV-1> 사회주의 경제 비공식 부문 추정방법



우선 미시적 설문조사자료를 이용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연구자들 스스로가 과거 사회주의 경제에서 생활했던 이민자 가구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사회주의 시절 소득과 지출의 구체적 항목들을 설문 조사하는 방법이 있었다. 실제로 1980년대 후반 미국의 사회주의 연구자들은 당시 미국으로 넘어온 舊소련의 이민자 가구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소비에트 시절 소득 및 지출경로에 대한 구체적이며 계량적인 설문 조사를 실시해 1980년대 소비에트 경제에서 비공식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을 밝혀낸 바 있다.<sup>55</sup> 이러한 방법은 그 후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舊소련 이민자 가구들을 대상으로 또다시 실시되어 유사한 결론이 도출되는 등 舊사회주의 경제에서의 비공식 부문규모 추정을 위한 가장 직접적이고도 효율적인 방법으로 널리 이용되어 왔다. 특히 이러한 방법은 북한의 시장규모를 추정하기 위해서도 몇 차례 이용된 적이 있었다. 예를 들어, 박석삼(2002)과 남성욱 및 문성민

<sup>55</sup> 이러한 서베이의 결과는 Grossman G, Treml V & Alexeev, (ed.), *Berkeley Duke Occasional Papers on the Second Economy in the USSR* (1992)라는 형태로 발간됨으로써 이후 사회주의 경제의 비공식 부문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되어 왔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http://www.econ.duke.edu/Papers/Treml.BDOP.html>>를 참조하라.

(2000)은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자 가족들의 북한 내에서의 소득과 지출 행태에 대한 설문 조사자료를 토대로 북한의 시장규모가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게는 3.6%에서 많게는 27.1%(군수경제 제외시 50% 이상)에 달한다는 결론을 이끌어 내었다.<sup>56</sup>

그런데 이처럼 널리 이용되는 이민자 또는 탈북자 가구에 대한 미시적 설문조사방법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본질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다. 우선 이러한 방법은 설문조사의 대상이 되는 이민자 또는 탈북자 가구의 수가 매우 적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사회주의 경제에서의 사회적 배경 또한 상당히 편향되어 있다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얻어진 결론이 사회주의 경제에서의 비공식 부문의 규모를 체계적으로 과장 또는 축소할 위험이 크다는 뜻이다. 물론 이러한 위험은 앞의 미국 연구자들의 경우에서와 같이 서로 전공을 달리하는 많은 연구자들이 오랜 시간동안 집단적인 노력을 투입해 보다 정교하고도 잘 짜여진 설문문항을 개발하고, 또한 이를 통해 얻어진 결론들을 매우 조심스러운 통계적 기법들을 동원해 제한적으로 해석할 경우 최소화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이 같은 방법은 개별 연구자들이 사용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따르는 방법일 수밖에 없다. 앞의 탈북자 가구들을 설문 조사해 얻어진 북한의 비공식 부문 규모에 대한 추정치가 적게는 전체 경제의 3%에서 많게는 27%까지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는 사실이 이를 잘 말해준

---

<sup>56</sup> 박석삼, 『북한의 사경제부문 연구 -사경제 규모, 유통현금 및 민간보유 외화 규모 추정-』 (한국은행, 2002); 남성욱·문성민, “북한의 시장 경제 부문 추정에 관한 연구: 1998년을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2000). 박석삼의 경우에는 연구자 스스로가 탈북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행해 그 결과를 이용하고 있으며, 남성욱과 문성민은 직접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기 보다는 한국 통일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다양한 관련 변수에 적용해 북한 비공식 부문의 규모를 추정하고 있다.

다. 두 번째로 이러한 방법은 사회주의 경제에서의 비공식 부문의 비중 변화를 추정하는 데에는 적합하지 않은 방법일 수도 있다. 설문 조사 대상이 되는 대부분의 이민자 또는 탈북자 가구들이 특정 시점이나 시기에 사회주의 경제를 이탈하는 경향이 강하고, 이에 따라 그들에 대한 설문조사결과는 어떤 사회주의 경제의 특정시점에서의 비공식 부문 비중만을 알려줄 뿐 그것의 장기적 추이에 대해서는 별다른 정보를 제공해 주지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글에서 우리가 북한의 비공식 부문 규모를 추정하려는 이유는 특정시점에서의 그것의 크기를 알고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것의 장기적인 추이가 1980년대 후반 이후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와 더불어 어떻게 변모해 왔는지를 검토하기 위해서이다. 이런 측면에서 탈북자 가구를 설문 조사해 특정 시점의 북한의 비공식 부문 비중을 추정하는 일은 이 글의 목적과는 그렇게 크게 부합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

이민자 및 탈북자 가구를 이용한 설문조사방법이 가지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회피하는 한 가지 방법은 그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미시설문 조사자료를 이용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경제에서는 소비자들의 선호체계 변화를 파악하기가 매우 힘들다. 모든 재화의 가격이 중앙 계획자에 의해 고정되어 있는데다, 사회주의 경제의 속성상 이들 재화들은 언제나 초과 수요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주의 중앙 계획자들은 소비자들의 선호체계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조금은 색다른 방법을 사용해 왔는데, 이 중 대표적인 것이 이른바 국가에 의한 설문조사 방법이었다. 실제로 과거 소비에트의 중앙계획자는 거의 주기적으로 소비에트의 표본 가구들을 추출해 이들의 소득 및 지출행태에 관한 구체적 조사를 실시하였다.<sup>57</sup> 이러한 자료는, 사회주의 경제

<sup>57</sup> Kim B., "Informal economy activities of Soviet households: size and

에서의 비공식 부문 규모 추정이라는 목적에 관한한, 앞의 이민자 또는 탈북자 설문조사자료와 본질적으로 유사하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 커다란 장점을 갖고 있다. 하나는 사회주의 당국 자체가 전국적으로 실시한 조사라는 점에서 이민자 또는 탈북자 조사자료와 같은 표본 크기의 제한이나 표본 자체의 편향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이러한 조사가 장기간에 걸쳐 주기적으로 실시되었다는 점에서 이를 통해 비공식 부문 규모의 장기적 추세를 알아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김병연(Byungyeon Kim, 2002)의 경우 과거 소비에트 중앙계획자의 이러한 설문조사 자료를 토대로 1961~1987년까지의 소비에트 비공식 부문의 규모를 장기적 추세로서 재구성해 내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sup>58</sup> 그러나 불행하게도 북한의 경우에는 현재 이러한 자료를 입수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며, 심지어는 북한당국이 실제로 이러한 조사를 실시해 왔는지에 대해서도 확신이 없는 상태이다. 비록 이러한 방법이 과거 사회주의 경제의 비공식 부문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이용되었던 가장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일지는 모르나 북한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는 뜻이다.

한편, 앞서와 같은 미시설문 조사자료를 이용하는 방법과는 별도로 거시경제모형을 이용해 사회주의 경제에서의 비공식 부문을 추정하려는 시도 또한 이루어졌다. 이러한 시도를 위해서는 우선 시장경제에서의 지하경제 규모를 추정하는 방법을 원용하는 길이 있었다.<sup>59</sup> 시장경제에서의 지하경제 규모추정은 크게 두 가지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현금수요(currency demand)라는 변수를 이용하는

---

dynamics” 참조.

<sup>58</sup> *Ibid.*

<sup>59</sup> Lacko, M., “Hidden Economy—an Unknown Quantity,” *Economic of Transition*, Vol. 8, No. 1 (2000), pp. 120~122.

방법이며, 다른 하나는 보통 연성 모델링(soft modelling)이라고 불리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시장경제에서의 지하경제는 그 속성상 현금거래로 구성될 것이며, 이에 따라 지하경제가 발전할수록 현금에 대한 초과수요요인이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전통적인 현금수요방정식으로는 잘 설명이 되지 않는 현금에 대한 초과수요를 추정함으로써 지하경제의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연성 모델링은 지하경제의 원인변수 및 지표 변수들을 추출하여 이들 변수의 가중치를 추정함으로써 지하경제 규모를 추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들 방법은 원칙적으로 사회주의 경제의 비공식 부문 추정에도 얼마든지 원용될 수 있는 것들이었다. 사회주의 경제의 비공식 부문 역시 정부의 공식적 집계에는 잡히지 않는 일종의 지하경제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에 기초한 추정시도는 실제로 많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들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제변수들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필요한데, 사회주의 경제의 경우 이러한 데이터를 입수하기가 매우 어렵거나 심지어는 이들 변수들이 국가의 통제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거시경제 모형을 이용한 사회주의 경제에서의 비공식 부문 규모 추정은 시장경제에서의 지하경제를 추정하는 것과는 약간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져왔다. 아마도 이러한 차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이른바 ‘전기소비량(electricity consumption)’을 이용한 사회주의 경제 비공식 부문 추정방법일 것이다. 카우프만과 칼리베르다(Kaufmann and Kaliberda 1996)는 어떤 경제에서건 전기소비량과 GDP의 관계는 매우 안정적이므로 사회주의 경제에서의 비공식 부문의 크기 역시 전기소비량이라는 변수를 통해 추정 가능하다고 보았다.<sup>60</sup> 사회주의 당국이 발표하는 GDP는 비공식 부문을 제외한 공

식부문의 GDP인데, 우리는 전기소비량을 통해 사회주의 경제 전체 부문의, 다시 말해 공식부문과 비공식 부문 모두를 포함한 GDP를 알 수 있으므로, 이런 전체 부문의 GDP에서 사회주의 당국이 발표하는 공식부문의 GDP를 차감하면 당연히 비공식 부문의 GDP 규모를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추정방법은 이후 존슨 등(Johnson et al 1997)과 라코(Lacko 2000), 알렉세프와 파일(Alexeev & Pyle) 등을 거치면서 보다 정교화되었고, 이에 따라 거시경제모형을 이용한 사회주의 비공식 부문 추정을 위한 가장 대표적인, 아니 실질적으로 거의 유일한 방법으로 자리를 잡았다.<sup>61</sup> 더욱이 이러한 방법은 사회주의 경제에서의 전기소비량과 GDP 데이터만 구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사용 가능한 매우 간편한 방법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다. 실제로 뒤에서 살펴 보겠지만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 북한 비공식 부문의 크기를 추정하는 일 역시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에는 한 가지 중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과연 카우프만과 칼리베르다가 주장하는 것처럼 전기소비량과 GDP의 관계가 그렇게 안정적인가 하는 점이다. 만일 어떤 사회주의 경제에서 전기소비량의 소득탄력성이 시기적으로 크게 변화를 보인다면 전기소비량을 통해 비공식 부문의 규모를 추정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해 질 것이다. 물론 이러한 의문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sup>60</sup> Kaufmann D and Kaliberda A., "Integrating the Unofficial Economy into Dynamics of Post-Socialist Economies,"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WPS 1691* (World Bank, December 1996),

<sup>61</sup> Lacko, M., "Hidden Economy—an Unknown Quantity"; Alexeev M. and Pyle W., "A Note on Measuring the Unofficial Economy in the Former Soviet Republics," *Middlebury College Economics Discussion Paper 02-03* (Middlebury College, 2002); Johnson S., Kaufmann D. & Shleifer A., "The Unofficial Economy in Transition,"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Vol. 1997, Issue 2 (Brookings, 1997).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이러한 전기소비량과 GDP의 안정적 관계는 적어도 장기적으로는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왜냐하면 비록 1980년대까지 양자의 관계가 안정적이었음에도 모르나, 1990년대의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북한의 경제구조가 급격히 변화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의 전기소비량과 GDP의 관계가 시기별로 변화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관계를 맺었다고 가정하는 것은 직관적으로 그렇게 쉽게 납득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상에서 살펴 본 것처럼, 이제까지 사회주의 경제에서의 비공식 부문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개발된 여러 방법들은 나름대로의 문제점을 갖고 있고, 또 이것을 북한경제에 직접 적용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러한 어려움과 문제점을 감안하여 이 글에서는 북한 비공식 부문의 규모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추정한다.

첫째, 우선 카우프만과 칼리베르다가 이야기하는 전기소비량과 GDP의 관계를 이용해 북한 비공식 부문의 규모를 추정한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이들 두 변수의 관계가 장기적으로 안정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추정 시기는 북한의 경제위기가 본격화되는 1990년대 이후 몇 년으로만 한정한다. 또한 이렇게 하여 획득된 결론 역시, 여타의 방법으로 하여 도출된 결론과 동일할 경우에만 인정하는, 잠정적 결론으로 간주한다. 둘째, 북한의 경우 전기소비량보다 더욱 안정적인 경제변수를 찾아내, 이 경제변수를 설명하는 데 있어 공식부문의 소득과 비공식 부문의 소득이 각각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아보는 '새로운' 방식으로 북한에서의 비공식 부문의 규모를 추정한다. 셋째, 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 모두를 막론하고 그 결과로 나온 북한 비공식 부문의 절대적 크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는다. 여기에 이용되는 데이터가 현실적으로 상

당한 불확실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 두 방법을 이용해 나온 북한 비공식 부문의 규모의 변화 또는 움직임에 대한 결론이 서로 일치할 경우에는, 우리는 북한 비공식 부문이 이들 두 방법을 통해 나온 결론과 같은 추세로 움직였다고 주장할 것이다. 넷째, 탈북자들에 대한 설문조사와 같은 방법은 사용하지 않는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러한 방법은 개별 연구자가 북한 비공식 부문의 규모를 추정하는 데에는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이 방법은 비공식 부문의 변화추세를 파악하는 데에는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 2. 전기 소비량을 이용한 북한의 비공식 부문 규모 추정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카우프만과 칼리브레다는 사회주의 경제의 전기 소비량을 이용해 비공식 부문의 규모를 추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들의 방법은 비교적 적은 자료와 간단한 기법으로 사회주의 경제의 비공식 부문 규모를 추정할 수 있다는 커다란 장점을 갖고 있다. 우선 어떤 사회주의 경제의 전기 소비 증가율이 알려져 있다고 가정해 보자. 만일 이 사회주의 경제의 전기 소비가 소득에 대해 단위 탄력적이라고 한다면, 앞의 전기 소비증가율은 곧 이 사회주의 경제의 실질 GDP 증가율과 일치하게 된다. 그런데 이 사회주의 경제에서 발표하는 공식 GDP는 정의상 비공식 부문의 GDP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전기소비량을 이용해 추정된 실질 GDP 증가율에서 공식 GDP 증가율을 차감하게 되면, 그 차이가 바로 비공식 부문의 GDP 증가율이 된다는 것이다.

## 추정방법과 이용 데이터

한 가지 숫자 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 2000년 현재 A라는 사회주의 경제에서는 비공식 부문이 전체 경제의 10%를 차지하고 있다고 가정하자. 그렇다면 이 사회주의 경제의 실질 GDP를 100이라고 할 때, 공식부문과 비공식 부문의 GDP는 각각 90과 10이 될 것이다. 그런데 2001년 A가 발표한 공식 GDP 증가율은 5%이지만, 전기 소비 증가율은 10%에 이른다고 해보자. 이 경우 A의 공식 GDP는 90에서 94.5로 증가하지만, 비공식 부문을 포함한 실질 GDP는 100에서 110으로 증가할 것이다 (전기 소비는 소득에 대해 단위 탄력적이라고 가정한다). 따라서 2001년의 실질 GDP와 공식 GDP의 차이 15.55는 이 해의 비공식 부문의 규모가 될 것이며, 이는 A의 비공식 부문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의 10%에서 2001년에는 14.13%로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전기 소비량을 이용한 비공식 부문의 추정은 어떤 사회주의 경제이든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변수에 대한 데이터 또는 가정만 있으면 가능하다. 첫째는 그 사회주의 경제의 전기 소비량 데이터이고, 둘째는 공식 GDP 데이터, 셋째는 전기 소비량의 소득 탄력성 데이터 또는 그에 대한 가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넷째는 추정의 기준이 되는 기초 년도의 비공식 부문의 비중에 대한 데이터 또는 가정이 그것이다. 그렇다면 북한경제의 경우에는 어떨까?

우선 북한의 전기소비량 데이터에 관해 생각해 보자. 이에 대한 북한의 공식 데이터는 현재로서는 입수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를 대체 할만한 다양한 외부기관들의 추정치가 존재한다. 실제로 한국의 통일부와 통계청, 미국의 에너지부 그리고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 등이 이러한 추정치들을 발표하고 있다. 물론 이들 추정치들의 절대치 또는 수준에서는 서로가 커다란 편차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시계열 추세라는 측면에서는 서로가 매우 흡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기소비량을 통한 북한의 비공식 부문 규모를 추정할 경우, 그 규모의 절대치가 아니라, 단지 그것의 변화의 추세를 관찰하고자 할 때에는 이들 외부기관들에 의한 북한 전기소비량 추정치들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여기에서는 이들 추정치 가운데 미국 에너지부의 추정치를 이용한다. 이것이 이용 가능한 여러 추정치들 가운데 가장 일관된 시계열 자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sup>62</sup>

다음으로 북한의 공식 GDP 데이터에 대해 생각해 보자. 1960년대 초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북한은 자국의 GDP 규모와 관련된 그 어떤 형태의 통계수치도 발표하지 않았다. 그러나 1998년 북한당국은 사상 처음으로 1992~1996년까지의 자국의 달러화 표시 GDP관련 자료를 UNDP에 제출하였으며, 이러한 관행은 그 후에도 이어져, 현재 2000년까지의 공식적인 북한 GDP자료가 입수 가능하다.<sup>63</sup> 물론 이러한 제한적인 자료로는 장기간에 걸친 북한 비공식 부문의 추세를 알아보기가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자료를 통해 북한의 경제위기가 본격화하고, 이에 따라 비공식 부문의 규모가 급속히 늘어났다고 알려진 1990년대 중후반의 趨勢만큼은 얼마든지 추정할 수 있는 것이다.

세 번째로 북한에 있어 전기 소비량의 소득 탄력성에 대해 생각해

<sup>62</sup> 이 자료는 <<http://www.eia.doe.gov/emeu/international/contents.html>>에서 이용 가능하다.

<sup>63</sup> DPRK, *Core Document Forming Part of The Reports of State Parties; DPRK/UNDP, Thematic Round Table Meeting on Agricultural Recovery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For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Geneva, 28~29 May.*

보자. 불행하게도 이에 대해서는 그 어떤 관련 데이터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북한 전기 소비의 소득 탄력성이 얼마인지 또 그것이 시기별로 어떤 변화를 보였는지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은 예상외로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먼저 북한 전기 소비의 소득탄력성 크기에 대해 생각해 보자. 물론 그것은 1보다 클 수도, 작을 수도, 또는 같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것의 크기가 1의 주위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카우프만과 칼리브레다가 인용하고 있듯이, 세계은행에 의한 국가간 시계열 자료 분석결과를 보면, 거의 모든 나라에서 전기소비량의 소득탄력성은 비록 일정한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모두가 1에 가까운 값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sup>64</sup> 그런데 실제적인 추정과정에서, 북한 전기 소비량의 소득 탄력성 값을 1에서 조금씩 변화시켜 새롭게 비공식 부문의 규모를 추정할 경우, 그 규모의 절대치는 그에 따라 조금씩 변화할지 모르지만, 그 추세만큼은 전혀 변화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의 추정목적이 북한 비공식 부문의 절대적 규모를 알아보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규모의 추세를만 알아보려는 데 있는 것이라면, 북한 전기 소비량의 소득 탄력성 수치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편의상 북한의 전기 소비량은 소득에 대해 단위 탄력적, 다시 말해 소득 탄력성이 1이라고 가정하고 논의를 진행한다.

한편 우리는 북한 전기소비의 소득탄력성이 시기적으로 어떤 증대

---

<sup>64</sup> Kaufmann D. and Kaliberda A., "Integrating the Unofficial Economy into Dynamics of Post-Socialist Economies,"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WPS 1691* (World Bank, December 1996); Dobozi, I & Pohl, G., "Real Output Decline in Transition Economies-Forget GDP, Try Power Consumption Data," *Transition Newsletter*, Vol. 6 No. 1~2 (World Bank, 1996).

한 변화를 보였는지도 알지 못한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 역시 그 추정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의 동질적 시기라면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미 말한 것처럼, 북한의 공식 GDP 데이터가 1992~2000년 사이에만 존재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런데 앞의 제Ⅱ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북한의 경제위기는 1994년부터 본격화되어 2000년까지 지속되었다. 따라서 만일 우리가 북한의 전체적 역사기간에 대해 서가 아니라 경제위기가 본격화되고 지속되었던 1994~2000년 사이의 비공식 부문 비중만을 추정한다면, 이러한 ‘전기소비량과 GDP사이의 안정적 관계’에 대한 의문은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이 기간 중의 북한경제는 상대적으로 동질적이며, 또 그 기간 역시 상대적으로 단기간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 절에서는 위의 공식 GDP 자료를 토대로 북한의 경제위기 기간이라 할 수 있는 1994~2000년까지의 비공식 부문 규모만을 추정 하도록 한다.

<표 IV-1> 전기소비 증가율을 이용한 북한의 GDP 증가율 추정 결과, 1993~2000

	1993	1994	1995	1996
전기소비 증가율	0.00%	0.09%	-0.28%	-8.19%
GDP 증가율 추정치	0.00%	0.09%	-0.28%	-8.19%
GDP지수 (1993=100)	100.00	100.09	99.81	91.64
공식부문 GDP지수 (1993년 기준)	97.00	71.43	59.29	49.06
	1997	1998	1999	2000
전기소비 증가율	-9.37%	-4.84%	-13.49%	4.15%
GDP 증가율 추정치	-9.37%	-4.84%	-13.49%	4.15%
GDP지수 (1993=100)	83.05	79.03	68.37	71.20
공식부문 GDP지수 (1993년 기준)	-	-	47.57	49.06

<표 IV-2> 북한의 공식부문과 비공식 부문의 경제규모 추정 결과, 1993~2000

	1993	1994	1995	1996
공식부문 GDP 지수	97.00	71.43	59.29	49.06
비공식 부문 GDP 지수	3.00	28.67	4.52	42.58
전체 GDP 지수	100.00	100.09	99.81	91.64

	1997	1998	1999	2000
공식부문 GDP 지수	-	-	47.57	49.06
비공식 부문 GDP 지수	-	-	20.79	22.15
전체 GDP 지수	83.05	79.03	68.37	71.20

<표 IV-3> 북한의 비공식 부문 비중 추정 결과, 1993~2000

	1993	1994	1995	1996
공식부문 비중	97.00	71.36	59.40	53.53
비공식 부문 비중	3.00	28.64	40.60	46.47
전체	100.00	100.00	100.00	100.00

	1997	1998	1999	2000
공식부문 비중	-	-	69.59	68.89
비공식 부문 비중	-	-	30.41	31.11
전체	100.00	100.00	100.00	100.00

마지막으로 1994~2000년 북한 비공식 부문의 추세를 파악하는데 기초연도가 되는 1993년의 경우 비공식 부문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과연 얼마나 되었을까? 여기에서는 이를 3%라고 가정한다. 이러한 가정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과거 북한경제는 舊소비에트 및 동유럽 경제보다도 훨씬 더 통제적인 배급제 경제체제를 유지해 왔다는 점에서, 비공식 부문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들 나라들에 비해 현저히 낮았을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舊

소비에트 및 동유럽 경제의 경우 이행이 시작되기 이전 비공식 부문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12~15%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1994년 북한의 수치는 12% 보다도 훨씬 더 낮았을 것이다. 둘째, 탈북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북한의 비공식 부문 규모를 추정한 기존의 연구 가운데 그 비중을 가장 낮게 추정하고 있는 박석삼(2002)의 경우 이 수치를 3%라고 보고하고 있다. 셋째,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북한의 수송용 석유소비 방정식을 이용해 1971~2000년까지의 장기적인 비공식 부문 규모변화를 추정해 보면, 1990년대 초반까지 북한 비공식 부문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4%를 넘지 못했다.

## 추정결과

<표 IV-1>부터 <표 IV-3>은 이상의 데이터와 가정을 토대로 1994~2000년 북한의 비공식 부문 규모를 추정한 것이다. 우선 <표 IV-1>을 살펴보자. 앞에서 언급한대로 추정의 기본연도가 되는 1993년 북한의 비공식 부문 비중은 3%라고 가정하였다. 이에 따라 이 해 북한의 실질 GDP는 100으로, 공식부문의 GDP는 97로 각각 표시되어 있다. 그런데 1994년 이후 북한의 전기 소비량은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전기 소비량의 변화율을 가지고 북한의 실질 GDP 변화를 추정한 결과, 그것은 1993년의 100에서 1994년에는 100.09로 조금 늘었으나, 그 후에는 감소를 계속해 1999년의 경우 68.37까지 하락하였다. 다만, 2000년에는 이러한 감소추세에서 벗어나 실질 GDP는 71.2로 조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북한당국이 발표한 공식부문의 GDP는 같은 기간 중 실질 GDP보다 훨씬

큰 폭으로 떨어졌다. 1993년 97에서 1994년 71.43으로 급격한 하락세가 시작된 이래 1999년 47.57까지 절반 이상이나 떨어진 것이다. 물론 공식 GDP 역시 2000년의 경우에는 이러한 지속적인 하락세에서 벗어나 49.06으로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표 IV-2>는 이러한 추세를 토대로 북한의 비공식 부문 규모를 산출한 것이다. 기준년도인 1993년의 경우에는 가정에 의해, 실질 GDP가 100으로 상정되어 있으므로, 비공식 부문의 규모 역시 3으로 표시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규모는 1994년 28.67로 급상승한 이래 1996년 42.58까지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연히 이러한 증가는 같은 기간 중 공식부문의 GDP 감소율이 실질 GDP 감소율보다 더욱 컸고, 따라서 그 차이가 비공식 부문의 GDP 증가로 나타났던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1990년대 중후반 북한의 급격한 경제위기로 주민들의 생존을 위한 비공식 부문의 규모가 급속히 늘어났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인식과 잘 부합한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비공식 부문의 규모는 1999년과 2000년 큰 폭으로 하락했다. 1996년 42.58에 달하던 비공식 부문의 규모가 1999년에는 20.79, 그리고 2000년에는 22.15로 거의 절반 가까이 하락한 것이다. 우리는 앞의 제Ⅱ장에서 북한당국이 1998~2000년 사이에 본격적인 경제 쇠기기에 나섰고, 이러한 정책은 주로 기존의 계획부문을 재정비하여 이를 정상화하는 데 맞추어졌었다는 사실을 살펴 본 바 있다. 만일 <표 IV-2>의 추정결과가 합리적인 것이라면, 이는 1998~2000년 사이 북한당국이 실시한 계획부문을 중심으로 한 경제 쇠기기의 결과가 실제로 북한 비공식 부문의 상대적 위축을 가져왔다는 말이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표 IV-3>은 <표 IV-2>의 결과를 가지고 북한 비공식 부문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추정하고 있다. <표 IV-2>에서의 비공식 부문의 절대적 규모와 유사하게 그것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1996년까지는 과거의 3% 수준에서 46% 수준까지 급격히 증가했으나, 1999년을 기점으로 2000년까지는 다시 30% 수준으로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90년대 중반까지 상승 추세를 보였던 북한 비공식 부문의 비중이 1999년을 기점으로는 하락 또는 하향 안정세로 접어들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물론 1999~2000년의 비중 역시 1993년의 3% 수준에 비하면 매우 큰 수치이다. 따라서 비록 북한 비공식 부문의 비중이 1999년을 기점으로 하향 안정세로 접어들었다고 할지라도, 그 절대적인 수준은 과거 북한경제에 비해서는 여전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상과 같은 추정결과를 과연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 물론 위의 결과들은 그간 외부 관찰자들이 북한의 비공식 부문의 규모와 관련하여 가지고 있던 일반적인 인식이나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와도 잘 부합한다. 더욱이 앞에서 이미 언급한 것처럼, 위의 결과들은 전기 소비량을 이용해 북한의 비공식 부문을 추정했을 때 제기될 수 있는 몇몇 문제들을 이미 충분히 고려한 상태에서 얻어진 것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들에도 불구하고 위의 결과들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는 여러 제약요인이 따르는 것처럼 보인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인 두 가지만을 생각해 보기로 하자.

우선 1994~2000년 경제위기동안에는 북한의 전기 소비량과 소비 형태 자체가 매우 불안정했을 가능성이 있다. 1990년대 북한 경제위기의 한가지 특징은 에너지 공급이 급격히 감소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북한당국은 한편으로는 상대적으로 생산이 어려운 에너지 공급 형태를 상대적으로 생산이 손쉬운 여타의 에너지 공급형태로 전환시

키고자 노력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주요 에너지를 경제의 기간산업에 집중 공급하는 데 주력했다. 전기는 북한에서 상대적으로 생산이 어려운 에너지 공급 형태이므로, 이것이 석탄이나 기타의 에너지 공급형태로 빠르게 대체되어 갔을 것이다. 예를 들어, 기존의 난방용 전기소비의 경우 석탄이나 기타 뿔감과도 같은 에너지원으로 대체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전기는 북한의 주요 산업시설을 가동시키는 주요한 에너지 공급 형태이므로, 그 소비는 주요 기간 산업이 더욱 더 독점했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경제위기 기간 동안 북한의 모든 경제주체가 극심한 에너지 부족에 직면했고, 더욱이 앞의 제Ⅱ장에서 살펴 본 것처럼 북한의 기존 경제시스템은 거의 작동불능 상태에 빠져 있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기간 중 북한당국의 에너지 정책 역시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었을 것이 분명하고, 이는 북한의 전기소비량과 소비형태가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화했을 가능성이 컸을 것이라는 점이다. 만일 이러한 가능성이 현실로 나타났다면, 1994~2000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서도 북한의 전기 소비량과 실질 GDP의 관계는 매년 극심한 편차를 보였을지도 모른다. 이런 측면에서 북한의 경제위기 동안의 비공식 부문의 비중을 전기소비량의 변화로 측정하는 것이 얼마나 효율적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위의 추정결과의 신뢰성과 관련된 또 다른 제약요인은 바로 1993년 북한 비공식 부문의 비중이 3%라는 가정이다. 물론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여기에는 여러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 그러나 누군가가 또 다른 합리적인 이유를 제공하면서 1993년 북한의 비공식 부문 비중은 3% 보다 높거나 낮다고 주장하는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문제는, 이 해 북한의 비공식 부문 비중을 3%가 아닌 다른 숫자

로 가정한다면, 이를 이용한 추정 결과는 상당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런 이유에서 위의 추정결과는 상대적으로 논쟁적인 가정을 도입한 취약한 결론일지도 모른다.

이상과 같은 제약 요인들로 인해 우리는 <표 IV-1>부터 <표 IV-3>에 나타난 추정결과들을 다음과 같이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한다. 첫째, 북한 비공식 부문의 규모와 비중에 대한 추정수치의 절대적 수준에는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추정수치의 추세에만 의미를 둔다. 예를 들어, 북한 비공식 부문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3년 3%에서 1996년 46.47%, 그리고 2000년에는 31.11%로 추정되었다면, 우리는 이들 수치의 절대치는 모두 무시하고, 단지 북한 비공식 부문의 비중이 1993년에 비해 1996년까지는 상승하는 추세에 있었으나 그 후 2000년까지는 이러한 상승추세가 반전해 하향 안정화 되었다라고만 이해하는 것이다. 둘째, 이러한 추세 역시 잠정적인 결론으로만 받아 들인다. 다시 말해, 위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방법과는 전혀 다른 또 다른 방법으로 추정했을 경우에도 동일한 추세가 관찰되었을 경우에 한해서만, 위의 추세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의 방법과는 또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북한의 비공식 부문 규모를 추정하는 일이 가능한 것일까?

### 3. 수송용 석유 소비방정식을 이용한 북한 비공식 부문 규모 추정

우리는 앞에서 전기 소비량을 가지고 북한의 비공식 부문 규모를 추정할 경우 두 가지 커다란 어려움에 직면한다는 사실을 지적하였

다. 하나는 북한에 있어 전기 소비량과 GDP의 관계가 장단기적으로 매우 불안정할 위험이 있다는 점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실제적인 추정을 위해서는 기준년도의 비공식 부문 비중에 대해 임의적인 가정을 도입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점이었다. 따라서 북한의 비공식 부문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추정 방법이라면 이러한 문제점들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방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여기에서는 북한의 수송용 석유 소비 방정식을 이용하여 비공식 부문의 규모를 추정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자.

### 추정 방법

북한에 있어 수송용 석유 소비라는 변수는 아마도 모든 에너지 소비형태 가운데 여타의 경제 변수들에 의해 가장 체계적으로 설명되는 안정적인 경제변수의 하나일 것이다. 에너지 형태의 특성상 기술적으로 다른 에너지원으로 대체되기가 매우 어려운 에너지 공급 형태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난방용) 전기소비의 경우 석탄이나 기타의 뿔감 등으로 대체되기가 상대적으로 쉬울지 모르지만, 수송용으로 사용되는 디젤이나 가솔린이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대체되기는 상대적으로 더욱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이 변수는 북한당국의 에너지 대체 노력과 같은 정책적 요인 보다는 소득이나 가격과 같은 경제 변수에 의해 더욱 체계적으로 설명될 것이다. 더욱이 이 변수는 북한에서의 비공식 부문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북한 주민들이 당국의 눈을 피해 시장 거래를 시도할 경우, 이를 위해 전기를 끌어다 쓰는 것은 상대적으로 더욱 어려울지 모르지만, 사람과 물자를 시장으로 이동하고 또 시장으로부터 이동해 오는 것은 거의 필수적이기 때

문이다. 이는 북한에 있어 수송용 석유 소비는 비단 공식부문의 경제 활동뿐만 아니라 비공식 부문의 경제활동 모두를 포괄하는 경제변수라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이 변수의 소비 방정식에는 공식 부문의 경제변수들뿐만 아니라 비공식부문의 경제변수들 역시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만일 우리가 이 변수의 소비방정식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만 있다면, 이를 이용하여 역으로 북한에서의 공식부문의 경제활동과 비공식 부문의 경제활동 비중, 다시 말해 비공식 부문의 경제활동이 전체 경제(수송용 석유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알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앞서 전기 소비량을 가지고 북한의 비공식 부문을 추정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로부터 자유롭다는 이점이 있다. 우선 특정연도의 비공식 부문의 규모를 일정하게 가정할 필요가 없어진다. 공식부문과 비공식 부문의 경제 변수들을 모두 포함한 수송용 석유소비 방정식이 얻어질 경우, 이를 토대로 해당연도의 비공식 부문 경제변수들의 값을 대입하면, 전체 방정식에서 그것의 비중을 곧바로 산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방법은 전기 소비량에서와 같이 GDP와의 안정적 상관관계를 가정할 필요도 적어진다. 물론 북한의 전체 GDP에서 비공식 부문의 비중이 정확히 얼마인지를 산출하려면, 북한 GDP의 수송용 석유소비에 대한 탄력성을 산출해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이 전체 GDP에서 비공식 부문이 차지하는 절대적 비중이 아니라 그것의 변화 추세일 뿐이라면, 굳이 북한 GDP와 수송용 석유소비의 탄력성을 산출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양자의 관계가 안정적이든 불안정적이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만 한다면, 수송용 석유소비 방정식에서 나타난 비공식 부문의 비중의 변화방향과 북한 GDP에서 나타나는 비공식 부

문 비중의 변화 방향은 일치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북한 GDP상에서의 비공식 부문의 비중이 아니라 수송용 석유소비 방정식에서의 비공식 부문의 비중의 추세만을 도출하여 검토하기로 한다.<sup>65</sup>

### 추정 모델과 이용 데이터

우선 북한의 수송용 석유소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가장 간단한 방정식을 생각해 보자.

$$\ln OC^t = \alpha_1 \ln y^t + \alpha_2 PR^t = \alpha_{11} \ln y_f^t + \alpha_{12} \ln y_{if}^t + \alpha_2 PR^t \quad (1)$$

$$\alpha_1 \geq 0, \quad \alpha_{11} \geq 0, \quad \alpha_{12} \geq 0, \quad \alpha_2 \leq 0$$

(단,  $OC^t$ : 수송용 석유소비,  $y^t$ : 실질 GDP,  
 $y_f^t$ : 공식부문 GDP,  $y_{if}^t$ : 비공식부문 GDP  
 $PR^t$ : 국제 석유가격,  $\alpha_1, \alpha_{11}, \alpha_{12}, \alpha_2$ : 계수)

위의 식(1)은 북한의 수송용 석유소비가 소득과 가격이라는 두 가지 변수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소득이 증가할수록 그리고 가격이 하락할수록 석유소비는 증가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북한의 소득은 두 가지의 형태가 존재한다. 하나는 공식부문에서의 소득이고, 다른 하나는 비공식 부문에서의 소득이다. 식(1)에서는 공식부문에서의 소득과 비공식 부문에서의 소득이 수송용 석유소

<sup>65</sup> 이러한 방법은 락코(Lacko, “Hidden Economy—an Unknown Quantity”)가 전기 소비방정식을 추정하여 비공식 부문의 비중을 추정하는 것과 매우 유사하다. 다만, 그는 GDP의 전기 소비에 대한 탄력성을 가정하여 비공식 부문을 추정하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생략하고 있다.

비에 각각 다른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고, 이를 표시하기 위해 각각 별도의 계수를 갖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다. 한편, 북한은 소비하는 수송용 석유의 거의 전량을 해외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것의 소비 역시 국제 석유가격의 변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그런데 식(1)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북한의 비공식 부문의 소득을 어떻게 표시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개념적으로 북한에서의 비공식 부문의 소득은 비공식 부문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 정도와 그곳(시장)에서의 가격수준이라는 두 가지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다. 비공식 부문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 정도가 높을수록 또한 시장에서의 가격수준이 높을수록 비공식 부문을 통해 얻어지는 소득은 더욱 높을 것이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현재 이들 변수에 대해서는 그 어떤 데이터도 입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북한 비공식 부문의 소득을 전혀 표현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북한 비공식부문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의 정도와 시장에서의 가격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의 대체변수를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 대체변수의 하나는 북한 배급제의 안정성이라는 변수이며, 다른 하나는 북한 주민들이 느끼는 공식부문에서의 소득 하락이라는 변수이다.

북한과 같은 통제적인 사회주의 경제에서 비공식 부문이 활성화된 직접적인 계기는 식량배급으로 상징되는 북한의 배급제가 급속히 불안정해졌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주민들이 더 이상 충분한 식량배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 시장이라는 비공식 부문에서의 활동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의 배급제가 불안정해질수록 주민들의 비공식 부문에 대한 참여도는 높아질 수 밖에

없을 것이며, 동일한 이유에서 시장가격 수준, 보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시장가격과 공식가격의 괴리 역시 더욱 커졌을 것이라는 의미이다. 한편, 북한 주민들의 비공식 부문에 대한 참여도는 그들이 공식부문에서 얻는 소득이 하락하는 정도에 의해서도 크게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북한에서 비공식 부문이 크게 비대하게 된 한가지 원인이 공식부문의 침체로 상당수 주민들이 실질적인 실업자 신세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들을 감안하면 북한에서의 비공식 부문의 소득은 기존 배급제가 불안정해 질수록 또한 공식부문의 소득하락 효과가 클수록, 주민들의 비공식 부문 참여도가 높아지고 시장가격 역시 상승함으로써 더욱 늘어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제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북한 비공식 부문에서의 소득에 대한 다음과 같은 방정식을 생각해 보자.

$$\ln y'_{if} = \beta_1(1 - SI^t) + \beta_1(\theta - \hat{y}'_f) = \beta_1 UI^t + \beta_2 IE^t \quad (2)$$

$$\beta_1 \geq 0, \quad \beta_2 \geq 0$$

[ 단,  $SI^t$  : 이석(2004)의 1960년을 기준으로 한 북한 배급제의 상대적 안정성 지수

$UI^t$  : 북한 배급제의 상대적 불안정성 지수 ( $=1 - SI^t$ )

$\hat{y}'_f$  : 공식부문 GDP 증가율

$\theta$  : 1971~2000년간 공식부문의 평균 GDP 증가율

$IE^t$  : 공식부문의 GDP 하락효과 지수 ( $=\theta - \hat{y}'_f$ ) ]

우선 식(2)는 북한 비공식 부문의 소득이 배급제가 불안정해질수록, 또한 공식부문에서의 소득하락 효과가 클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우선 배급제의 불안정성 대해서는 이석(2004)에 나타난 북한 배급제의 상대적 안정성 지수를 이용하고 있다.<sup>66</sup> 이 지수는

1960년 북한 배급제의 안정성을 1이라고 가정하고, 그 이후 배급제의 안정성 정도를 계량화 한 것이다. 위의 식(2)에서는 이 지수를 이용해 1960년의 북한 배급제의 불안정성을 0으로 가정하고, 이후 북한 배급제의 안정성이 감소하면 그 수치가 증가하는 ‘배급제 불안정성 지수’를 선정해 이용하고 있다. 다른 한편 식(2)에서는 북한 공식부문에서의 소득하락 효과 역시 계량화 하기 위해, 1970-2000년간 공식부문의 평균 GDP증가율에서 각 연도 공식부문의 GDP 증가율을 차감한 지표를 이용하고 있다. 이 지표의 수치가 커진다는 의미는, 해당 연도의 GDP 증가율이 지난 30년의 평균 증가율을 더욱 밑돌게 됨으로써, 상대적으로 북한 주민들이 느끼는 공식부문의 소득하락 효과가 더욱 커진다는 의미이다. 요컨대 식(2)는 북한의 배급제가 불안정해지고 북한 주민들이 느끼는 공식부문에서의 소득하락 효과가 클수록 비공식 부문에서 창출되는 소득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의미이다.

이제 위의 식(2)를 식(1)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은 방정식을 얻을 수 있다.

$$\ln OC^t = \alpha_{11} \ln y_f^t + \delta_1 UI^t + \delta_2 IE^t + \alpha_2 PR^t \quad (3)$$

$$\delta_1 = \alpha_{12} \beta_1 \geq 0, \quad \delta_2 = \alpha_{12} \beta_2 \geq 0$$

식(3)의 커다란 이점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도 북한의 수송용 석유소비 방정식을 추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추정을 통해 북한 비공식 부문의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볼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북한의 수송용 석유소비가 비공식 부문의 경

<sup>66</sup> 이석, “1980년대 북한의 식량생산, 배급, 무역 및 소비,” 『현대북한연구』, 제7권 1호 (2004).

제활동과 어느 정도로 연관되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수식을 계산하기만 하면 될 것이다.

$$is^t = \frac{\delta_1 UI^t + \delta_2 IE^t}{\ln OC^t} \quad (4)$$

(단,  $is^t$ : 북한의 수송용 석유소비에 있어 비공식 부문의 비중)

물론 식(4)는 북한의 GDP로 표시된 비공식 부문의 비중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것의 변화방향은 GDP로 표시된 비공식 부문의 비중의 변화방향과 일치할 것이다. 북한 비공식 부문의 절대적인 규모가 아니라 그것의 추세만을 검토하고자 할 때에는 식(4)가 매우 유용한 대응변수가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여기에서는 앞의 식(3)을 추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데이터를 이용한다. 우선 북한의 수송용 석유소비에 관해서는 IEA가 제공하는 추정치를 이용한다.<sup>67</sup> 실제로 북한의 수송부문 석유소비에 관해서는 IEA의 추정치 이외에는 북한의 공식통계나 다른 기관의 추정치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국제 석유가격에 관해서는 미국 에너지성이 집계한 해당연도의 매월 1일의 국제석유 거래 가격을 연간 평균한 값을 사용한다. 물론 이러한 데이터는 북한이 수입하는 수송용 석유의 정확한 국제가격과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전반적인 가격추세를 나타내는 데이터로는 별다른 무리가 없을 것이다.<sup>68</sup>

<sup>67</sup> 이러한 데이터는 IEA, *Energy Statistics of Non-OECD Countries* (IEA, Various Years)에서 이용 가능하다.

<sup>68</sup> 이러한 데이터는 <<http://www.eia.doe.gov/emeu/international/contents.html>>

공식부문의 GDP와 관련해서는 한국 통일부와 한국은행이 제공하는 북한 GDP 또는 GNI 추정치를 이용한다.<sup>69</sup> 앞서 언급한 것처럼, 북한 공식통계의 경우 1990년대 이전 통계는 입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UN이 제공하는 북한 GDP 추정치의 경우에는 1990년대의 북한 공식통계를 그대로 이전시기에 소급시켜 적용함으로써 GDP의 (산업)항목별 구성비가 시기에 따라 전혀 변화하지 않는 등의 문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공식부문 소득하락 효과와 관련된 GDP 증가율 역시 앞의 한국 통일부 및 한국은행의 추정치를 이용하여 계산한다. 마지막으로 북한 배급제의 불안정성과 관련해서는 이석(2004)이 계산한 배급제의 상대적 안정성 지수를 이용한다.<sup>70</sup> 여기에 사용된 북한의 GDP 데이터 역시 한국 통일부 및 한국은행의 추정치라는 점에서 전반적인 이용 데이터간의 일관성에는 별다른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것이다.

## 추정 결과

<표 IV-4>는 이상의 데이터를 토대로 1971~2000년의 기간 동안 식(3)을 추정된 결과를 보여준다. 우선 식(3)에 삽입된 변수들의 설명력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든 변수들의 계수가 기대했던 것과 동일한 부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북한의 수송용 석유소비는 공식부문의 소득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며, 국제석유 가격이 하락할수록 증가하고, 배급제가 불안정해 질수록 비공식 부문

---

에서 이용 가능하다.

<sup>69</sup> 이들 추정치는 통일부의 각종 발간 자료와 한국은행의 웹사이트에서 이용 가능하다.

<sup>70</sup> 이석, “1980년대 북한의 식량생산, 배급, 무역 및 소비.”

의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증가하며, 공식부문의 소득증가율과 주민들의 기대소득 수준 사이의 괴리감이 커져 주민들의 비공식 부문활동이 늘어날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특히 이들 변수들에 대한 계수는 가격 변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 북한의 수송용 석유소비 방정식 추정결과

	계수	t-값
상수항	2.2443**	5.5225
GDP	1.0361**	10.3760
석유가격	-0.0009	-0.2112
배급제 불안정 지수	0.3608*	1.7383
소득하락효과 지수	0.0047*	1.7548
F-Statistics: 62.77    R <sup>2</sup> : 0.936		

\*\* 95% 신뢰구간에서 유의미, \* 90% 신뢰구간에서 유의미.

한가지 문제는 국제 석유가격의 경우 북한의 수송용 석유소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실제로 이러한 결과는 직관적으로 납득하기가 매우 힘들다. 아마도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을지도 모른다. 우선은 실제 추정에 이용된 데이터의 한계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식(3)의 추정에 사용된 석유 가격 데이터는 북한이 수입한 수송용 석유가격의 데이터가 아니라 당시의 국제석유가격 전반에 관한 데이터였다. 물론 이것은 이용 가능한 데이터의 한계 때문에 발생한 일이었다. 그러나 만일 이 두 가지 가격이 서로 커다란 차이가 있었다면, <표 IV-4>에서처럼 국제 석유가격이 북한의 수송용 석유소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일 것이다. 또 다른 가능한 이유는 북한의 석유수입 패턴의 문제이다. 북한은 이제까지 석유수입의 대부분을 舊소련을 위시한 사회주의 경제권에 의존하여 왔으며, 1980년대 말 사회주의권이 붕괴된 이후에는 중국의 도움을 크게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주의 무역의 경우 정치적 변수나 이른바 호혜가격 등 경제 외적인 고려가 크게 작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만일 북한의 석유수입이 이러한 패턴에 크게 의존했다면, 국제시장에서의 석유가격 변화 역시 북한의 수송용 석유소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 것이다.

<표 IV-5> 북한경제(수송용 석유소비)에서의 비공식 부문 비중 추정결과, 1971~2000

(%)

연도	비중 (%)	연도	비중 (%)
1971	2.69	1990	3.32
1973	1.51	1991	3.97
1978	3.01	1992	4.33
1980	2.71	1993	3.98
1983	2.81	1994	4.04
1984	3.08	1995	4.67
1985	3.05	1996	5.43
1986	2.49	1997	6.27
1987	2.72	1998	7.01
1988	3.24	1999	3.40
1989	3.55	2000	4.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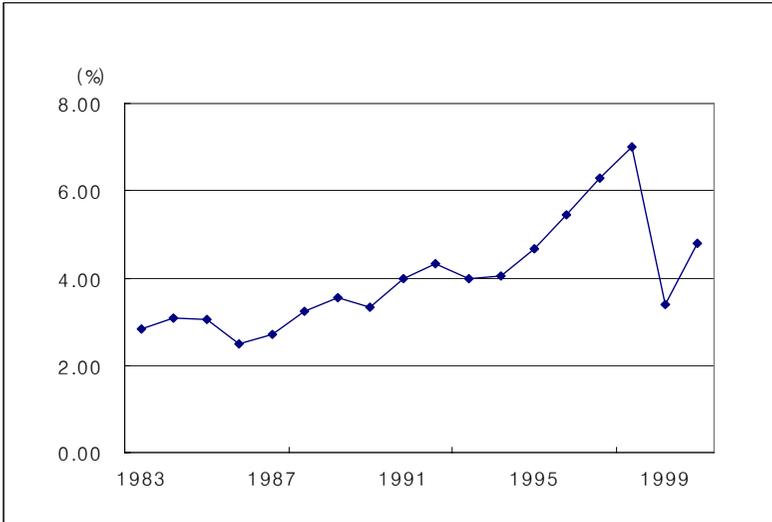
한편, <표 IV-5>는 이상의 추정결과를 가지고 앞의 식(4)를 계산하여 1971년 이후 북한 비공식 부문의 비중을 추정한 것이다. 물론 여기에서 의미하는 비공식 부문의 비중이란 수송용 석유소비에 있어

비공식 부문의 경제활동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는가를 말한다. 그 결과는 한편으로는 매우 흥미롭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까지 알려진 북한의 현실과 잘 부합한다. 우선 북한 비공식 부문의 비중은 1980년대 초반까지 전체의 3%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매우 작은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비중은 1980년대 초 중반부터 점차 증가 추세를 보여 3-4%대를 오르내렸으며, 특히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최고 7%까지 급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앞서 전기소비량을 이용한 추정에서와 마찬가지로 1999년 이후 2000년에는 이러한 급상승 추세에 제동이 걸려 비공식부문의 비중이 다시 전체의 4%대로 떨어지는 모습이다.

<그림 IV-2>는 이상의 결과를 보다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북한의 비공식 부문 추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북한의 비공식 부문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대 초중반 이후 뚜렷이 상승하는 추세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앞의 제2절에서 살펴본 북한 경제정책의 변화와 이를 통한 (농민)시장의 확대 현상과 정확히 일치한다. 둘째, 북한 비공식 부문의 상승추세는 1990년대 초중반 더욱 급격해져 1990년대 후반 정점에 달했다. 이러한 결론은 앞의 전기 소비량을 이용한 추정결과와 동일한 것으로서 1990년대 북한의 경제 위기로 자생적 시장화 경향이 더욱 가속화되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셋째, 1999년 이후 북한 비공식 부문의 상승추세는 다소 완화되었거나, 아니면 기존의 상승 추세에서 벗어나 하향 안정화되는 추세에 접어들었는지도 모른다. 이러한 결론 역시 앞의 전기 소비량을 이용한 추정결과와 동일한 것으로서, 이는 1990년대 말부터 시작된 북한당국의 경제 챙기기와 이를 통한 공식부문의 희생 노력이 기

존의 북한경제 시장화 추세 보다도 더욱 가시적인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그림 IV-2> 북한경제(수송용 석유소비)에서의 비공식 부문 비중(%) 추이, 1983~2000



#### 4. 북한의 비공식 부문 추이와 개혁가설들의 평가

우리는 이제까지 전혀 다른 두 가지의 방법을 이용해 북한의 비공식 부문 추세를 검토한 결과 거의 완전히 동일한 결론에 도달했다. 북한 비공식 부문의 비중이 1990년대 초중반 이후 급속히 확대되는 추세에 있었으나, 이러한 추세는 1999년을 기점으로 진정 또는 반전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결론을 얻기 위해 사용한 방법은 북한의 비공식 부문 추정과 관련하여 현 수준에서 개별 연

구자가 이용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합리적 방법들이었다. 따라서 우리는 이상의 결론을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와 정보의 수준에서 개별 연구자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결론이라고 가정하고, 그것의 의미를 검토하기로 한다.

우리는 앞의 제Ⅲ장에서 1980년대 이후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에 대한 다양한 가설들을 살펴 보았다. 그런데 이러한 가설들을 북한에 있어 시간에 대한 시장화의 추세를 나타내는 그림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 아마도 북한 불변화 가설은 ‘일정 기간동안 북한의 시장 비중은 확대되었지만, 이러한 추세는 조만간 역전되어, 시장의 비중은 다시 과거의 수준으로 돌아가는’ 그림을 그릴 것이다. 북한 경제정책의 궁극적 목표가 과거의 경제시스템을 보호하여,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이를 복구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북한 시장화 가설은 ‘시장의 비중이 꾸준히 확대’되는 그림을 그리려 할 것이다. 또한 계획경제 정상화 가설은 ‘시장의 비중이 일정기간을 지나면 기존의 급격한 확대 추세에서 벗어나 진정되었지만, 그렇다고 과거와 같은 수준으로까지는 복귀하지 않는’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그림들을 이 장에서의 추정결과인 <그림 IV-2>와 비교하면 어떻게 될까?

우선 북한 불변화 가설은 현실적으로 지지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림 IV-2>는 북한 비공식 부문의 비중이 1980년대 이후 뚜렷한 상승추세에 있으며, 비록 1999년 이후 이러한 상승추세가 진정되었는지는 모르나, 그 비중은 여전히 과거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고 말한다. 북한 불변화 가설이 내포하고 있는 과거로의 복귀가 실현될 수 없는 것이거나, 적어도 아직까지는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이런 의미에서, 앞으로 북한경제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지만,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

터와 정보의 수준으로는 북한 불변화 가설을 쉽게 지지할 수만은 없다고 결론짓는 것이 현명한 것이다.

반면 북한 시장화 가설은 충분히 지지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1980년대 이후 북한 비공식 부문의 비중이 뚜렷한 상승추세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가지 유보조건이 따른다. 1999년 이후 이러한 상승추세는 진정되었을지도 모르며, 이러한 진정 현상이 발생한 시점이 바로 경제위기 이후 북한당국의 본격적인 경제정책 변화가 시작되는 시기였다는 사실 때문이다. 실제로 이러한 사실은 2002년 ‘7.1조치’를 포함한 최근의 북한경제정책 변화가 진정으로 의도하는 바는 시장의 용인이 아니라 이를 통한 공식부문의 회복이라는 심증을 갖게 만든다. 물론 북한 시장화 가설은 이에 대해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비록 북한당국의 의도가 그와 같을지라도, 이는 기존의 시장화 추세를 이기지 못할 것이며, 따라서 북한에 있어 시장의 확대추세는 계속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는 다시 실증의 문제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실제로 2000년 이후 현재까지 북한의 비공식 부문 규모를 추정하면, 이러한 답변에 대해 보다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여기에서는 입수 데이터의 한계 때문에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북한경제의 시장화 가설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한가지 숙제가 남겨진 셈이다.

한편, 이 장의 추정결과를 가지고 가장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는 가설은 아마도 북한 계획경제의 정상화 가설일 것이다. 북한에서의 시장의 추세와 관련하여 양자가 그리고 있는 그림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설 역시 시장화 가설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가지 유보조건이 따른다. 1999년 이후 시장 비중의 증가추세가 진정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과연 진정한 추세의 변화인가 하는 점이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사실 때문이다. 물론 이 역시 2000년 이후 현재까지의 북한 비공식 부문의 비중 변화를 추정하면 보다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고, 이는 다시 실증의 문제로 돌아간다. 계획경제의 정상화 가설을 주장하기 위해서도 여전히 실증이라는 한가지 숙제가 남겨져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한경제에 대한 정치적 변화의 가설은 이 장의 추정 결과를 가지고 논의하기가 매우 힘들다. 이 가설이 북한경제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복합적 가능성을 동시에 포괄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 장의 추정결과를 토대로 볼 때, 이 가설을 이용해 북한경제의 붕괴를 논의하는 것 보다는 그것의 안정화 또는 새로운 균형으로의 복귀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보다 더 현실적인 방안일지도 모른다는 판단이다. 북한에서의 비공식 부문의 비중이 무한정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는지도 모르며, 이러한 현상이 경제위기 이후 북한당국의 본격적인 경제정책 실행 과정에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는 한편으로는 북한의 중앙 계획자가 다시 사회주의(공식)경제부문에 대한 통제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의미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이에 대한 북한 생산자들의 반발 역시 중앙 계획자의 통제력을 무력화 시킬 만큼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과거 1990년대와 같은 계획자 통제력(모니터링) 약화 → 생산자 노력 투입 약화 → 산출량 감소 → 계획자 통제력 약화라는 경제붕괴의 악순환이 또다시 초래될 가능성이 그만큼 적어졌을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V

맺음말



이제까지 이 글에서는 1980년대 이후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를 정리하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이를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가설을 검토하고, 또한 북한의 비공식 부문을 추정함으로써 이들 가설을 평가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우리가 도달한 결론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우리가 개혁이라고 부르는 북한경제의 변화는 사실상 북한당국이 1980년대 이후 꾸준히 추진해온 서로 이질적인 정책들의 복합적 산물이었다. 이러한 정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기존의 경제시스템을 유지·복구하기 위한 노력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기존 시스템의 운영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시도였고, 나머지 하나는 기존 시스템 이외의 시장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었다.

둘째, 이러한 북한 경제정책 변화의 특징으로 인해 이를 해석하는 가설 역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다. 북한 불변화 가설과 시장화 가설 그리고 계획경제 정상화 가설이 그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가설들을 사회주의 경제의 이행 가설들과 접목하여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와 그것의 이행론적 함의 역시 살펴볼 수 있다. 이렇게 형성된 가설 가운데 특징적인 것은 1) ‘북한 불변화 가설 + 사회주의 붕괴론’, 2) ‘북한 시장화 가설 + 사회주의 비공식화론’, 3) ‘북한 계획 경제 정상화 가설 + 사회주의 붕괴론 및 비공식화론에 대한 반론’, 4) 북한경제 변화에 대한 ‘정치적 가설’ 등을 들 수 있다.

셋째, 북한의 비공식 부문의 비중을 추정해 보면, 그것은 1998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가 분명히 나타나지만, 1999~2000년에는 이러한 추세가 관찰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 두 해에는 비공식 부문의 비중이 이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북한의 수송

용 석유 소비의 경우 비공식 부문의 비중이 1970년대의 2% 수준에서 1998년까지는 최고 7%수준으로 상승하지만, 이 수치가 1999~2000년 사이에는 4%대로 떨어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넷째, 이러한 비공식 부문의 추세를 감안할 때, 북한 불변화 가설은 경험적으로 지지하기가 힘든 것처럼 보인다. 다만, 북한 시장화 가설이나 계획경제 정상화 가설은 충분히 지지할 수 있지만, 이들 역시 보다 확고한 주장을 하려면 2000년 이후 북한의 비공식 부문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수적인 것처럼 보인다.

우리가 북한의 변화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의 함의를 진지하게 토론하는 이유는 매우 분명하다. 이것이 결국에는 북한경제의 시장경제로의 이행 가능성을 보여주는 가장 효과적인 길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를 둘러싼 다양한 정책적 갈등과 견해의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진지한 토론은 불가피한 것일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북한의 경제현상이 그러하듯이, 북한경제의 변화와 관련해서도 어떤 진지한 토론이나 합리적인 추론을 이끌어 낼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정보나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외부 연구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북한의 변화와 미래에 대한 논의는 그 열의와 성의에도 불구하고 답답할 정도로 발전이 더딘 상태에 놓여 있다.

아마도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은 소비에트 경제의 붕괴를 계기로 이루어졌던 사회주의 경제 일반의 개혁과 이행에 대한 논의들을 다시 한 번 심각하게 검토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이러한 논의과정 속에서 사회주의 경제의 미래와 관련된 다양한 이론 모형뿐만 아니라,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여러 데이터의 성

격과 계량적 기법 또한 밝혀졌기 때문이다. 북한경제를 공부하는 대다수 연구자들이 점점 더 이들 사회주의 경제 일반에 대한 논의에 주목하고 있는 현실적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이에 대한 우리의 토론 수준은 높지 않고, 더욱이 이를 응용하여 북한의 경우를 분석하는 일은 여전히 낯설기만 하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일은 1990년대 북한의 경제위기로 인해 더욱 많은 외부 관찰자들이 북한을 방문하고, 더욱 많은 북한의 정보와 데이터가 외부로 넘어 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데이터와 정보 그리고 관심이 축적되는 경우, 그리고 이를 분석할 수 있는 다양한 모형과 기법에 우리가 익숙해질 경우, 북한경제의 변화와 미래에 대해서도 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토론이 이루어지는 것도 불가능한 일만은 아닐 것이다. 그간 외부 관찰자들에게는 난공불락의 성으로만 여겨졌던 북한경제의 진정한 모습 역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속살을 드러낼지도 모른다는 뜻이다.



# 참 고 문 헌

## 1. 단행본

- 김연철. 『북한의 배급제 위기와 시장개혁 전망』.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1997.
- \_\_\_\_\_. 외. 『북한경제개혁연구』. 서울: 후마니타스, 2002.
- 김영윤·최수영. 『북한의 경제개혁동향(통일정세분석 2005-02)』. 서울: 통일연구원, 2005.
- 내외통신사. 『북한실상 종합 자료집』. 서울: 내외통신사, 1995.
- 박석삼. 『북한의 사경제부문 연구: 사경제 규모, 유통현금 및 민간보유 외화 규모 추정』. 서울: 한국은행, 2002.
- 법률출판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법전(대중용)』. 평양: 법률출판사, 2004
- 양문수. 『북한경제의 구조』. 서울: 서울대 출판사, 2001.
- 오석찬. 『북한의 식량난 해결할 수 있다』. 서울: 대왕사, 1997.
- 이석. 『1994~2000년 북한기근: 발생, 충격 그리고 특징』. 서울: 통일연구원, 2004.
- 장명봉 편. 『김정일체제하의 최근 북한 법령집』. 서울: 북한법연구회, 2005
- 전홍택. 『북한의 비계획 경제부문: 제2경제의 기능과 역할』, KDI, 1998.10.
- Chang, H. & Nolan P.(ed). *The Transformation of Communist Economies*. ST Martin Press, 1995.
- Chung, J-S.. *The North Korean Economy*. Stanford, Hoover Institution Press, 1974.
- Davies, R, Harrison M. and Wheatcroft S.. *The Economic Transformation of the Soviet Union 1913~1945*.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 DPRK/UNDP. *Thematic Round Table Meeting on Agricultural Recovery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For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Geneva, 28~29 May 1998*. UNDP, 1998.
- Gregory, P. and Stuart R.. *Comparative Economic Systems*. Boston:

- Houghton Mifflin, 1980,
- \_\_\_\_\_. *Russian and Soviet Economic Performance and Structure*. Addison-Wesley, 2001.
- IEA. *Energy Statistics of Non-OECD Countries*. Various Years.
- Kornai, J.. *The Road to a Free Society*. 1990
- Nove, A.. *The Soviet Economic System*. 1978.
- Roland, G.. *Transition and Economics*. MIT Press, 2000.
- WFP/FAO. *Special Report-FAO/WFP Crop and Food Supply Assessment Mission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WFP/FAO, 22 November 2004.
- \_\_\_\_\_. *Special Report-FAO/WFP Crop and Food Supply Assessment Mission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WFP/FAO, 8 November 1999.

## 2. 논문

- 강일천. “7.1경제관리개선조치 1년의 평가와 재해석.” 『고려대 북한학 연구소 제4차 국제 학술세미나 발표자료』. 서울: 고려대학교, 2003.6.26.
- 김연철. “북한의 경제개혁 전략 - 쿠바사례의 적용가능성.” 『아세아연구』. Vol. 45. No. 1. 서울: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02.
- 김영운. “북한 암시장의 사회경제적 역할.” 『통일연구논총』. Vol. 6. No. 1. 서울: 통일연구원, 1997.
- 김용술. “북한경제정책 설명.” 『KDI 북한경제리뷰』. 서울: KDI, 2002. 10.
- 김진향. “북한경제의 위기와 대응: 경제관리개선조치의 본질과 전망.” 『한국동북아논총』. Vol. 26. 서울: 한국동북아학회, 2003.
- 남성욱·문성민. “북한의 시장 경제 부문 추정에 관한 연구: 1998년을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2000.
- \_\_\_\_\_. “북한의 7·1 경제관리개선조치와 농업개혁 전망.” 『농촌경제』. 제28권 제1호 통권108호. 서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5.
- \_\_\_\_\_. 공선영. “2002년 북한의 임금과 물가인상에 따른 주민 생산 소비행태

- 의 변화에 관한 연구.” 『고려대 북한학 연구소 제4차 국제 학술세미나 발표자료』. 서울: 고려대학교, 2003.6.26.
- 리민복. “북한주민들의 개인화와 체제 변화 가능성.” 『북한』. 북한연구소, 1996.7.
- 박광작. “북한 신경제 관리체제의 평가와 전망.” 『비교경제연구』. Vol. 10. No. 1. 서울: 한국비교경제학회, 2003.
- 박석삼. “북한경제의 구조와 변화.” 『금융경제총서』. 제9호. 서울: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2004.
- 박순성. “김정일 시대(1994~2004) 북한 경제정책의 변화와 전망.” 『북한연구학회보』. Vol. 8. No. 1. 서울: 북한연구학회, 2004.
- 박제훈. “북한경제체제의 변화 전망: 체제동학적 연구.” 『비교경제연구』. Vol. 9. No. 1. 서울: 한국비교경제학회, 2002.
- 박형중. “국제비교와 관점에서 본 북한의 경제개혁: “부분”개혁과 “시장도입형” 개혁의 구분: 북한과 소련의 비교를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Vol. 5. No. 2. 2002.
- 양문수. “북한의 종합시장: 실태, 파급효과, 성격과 의미.” 『KDI 북한경제리뷰』. 서울: KDI, 2005.2.
- \_\_\_\_\_. “역사적 관점에서 본 7.1경제관리개선조치.” 『7.1경제관리개선조치 현황평가와 과제』.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3.
- 오정찬. “집단농장을 개인화해야 북한 식량난 해결된다.” 『월간조선』. 서울: 조선일보사, 1995.7.
- 이석. “1980년대 북한의 식량생산, 배급, 무역 및 소비.” 『현대북한연구』. 제7권 1호. 2004
- 이석기. “북한의 1990년대 경제위기와 기업지배구조의 변화.” 『비교경제연구』. Vol. 11. No. 1. 서울: 한국비교경제학회, 2004.
- 이영선. “이행경제의 정치경제학: 북한의 체제이행에 대한 시사점을 위하여.” 『국제경제연구』. Vol. 9. No. 1. 서울: 한국국제경제학회, 2003.
- 임채완. “북한과 중국의 경제적 개방·개혁 비교 분석.” 『한국동북아논총』. Vol. 32. 서울: 한국동북아학회, 2004.
- 임현진. “북한의 경제개혁: 자본주의로의 길인가.” 『현대북한연구』. Vol. 7. No. 1. 2004.
- 정세진. “이행학적 관점에서 본 최근 북한경제 변화 연구.” 『국제정치논총』.

- Vol. 43. No. 1. 서울: 한국국제정치학회, 2003.
- 조동호. “계획경제시스템의 정상화: 최근 북한 경제조치의 분석 및 평가.” 『KDI 정책포럼』. 제160호. 서울: KDI, 2002.
- \_\_\_\_\_. “북한 경제정책의 변화 전망: 1960~70년대 동유럽 경제개혁의 시사점을 바탕으로.” 『비교경제연구』. Vol. 11. No. 1. 서울: 한국비교경제학회, 2004.
- 통일부. “북한의 산업조직개편동향.” 『주간 북한동향』. 제474호. 서울: 통일부, 2002.2.12~2.18.
- 하상식. “북한경제의 개혁전망: 7.1 경제관리개선조치의 성격평가를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Vol. 32. 서울: 한국동북아학회, 2004.
- 황동연. “북한 식량난과 남북한 농업협력.” 『통일경제』. 서울: 현대경제사회연구원, 1998. 5.
- Aghion, P.. “Economic Reform in Eastern Europe: Can Theory Help?” *European Economic Review*. Vol. 37. 1993.
- \_\_\_\_\_. & Blanchard O.. “On the Speed of Transition in Central Europe.” *NBER Macroeconomics Annual*. 1994.
- Alexeev, M.. “The Russian Underground Economy in Transition.” Lippert O & Walker M. (ed). *The Underground Economy: Global Evidence of Its Size and Impact*. Vancouver, 1997.
- \_\_\_\_\_. and Pyle W.. “A Note on Measuring the Unofficial Economy in the Former Soviet Republics.” *Middlebury College Economics Discussion Paper 02-03*. 2002.
- \_\_\_\_\_. and Trembl V.. “The Growth of the Second Economy in the Soviet Union and Its Impact on the System.” Campbell (ed). *The Postcommunist Economic Transformation*. Boulder: Westview Press, 1994.
- Brezeski, A.. “The End of Communist Economics.” Edwards (ed). *The Collapse of Communism*. Stanford, 1999.
- Chang, H. and Nolan P.. “Europe versus Asia: Contrasting Paths.” Chang H & Nolan P. (ed). *The Transformation of Communist Economies*. ST Martin Press, 1995.

- Coricelli, F. & Milesti-Ferretti, G.. “On the Credibility of Big Bang Programs.” *European Economic Review*. April 1993.
- Dallin, A.. “Causes of the collapse of the USSR.” *Post-Soviet Affairs*. Vol. 8. No. 4. 1992.
- Dewatripoint, M. and Roland G.. “The Virtues of Gradualism and Legitimacy in the Transition to a Market Economy.” *Economic Journal*. March 1992.
- Dobozi, I. & Pohl, G.. “Real Output Decline in Transition Economies—Forget GDP, Try Power Consumption Data.” *Transition Newsletter*. Vol. 6. No. 1~2. World Bank, 1996.
- DPRK. “Core Document Forming Part of The Reports of State Parties.” *United Nations Human Rights Instruments*. 24 Jun 2002.
- Eberstadt, N.. “Don’t Believe North Korea’s Economic Reform.” *Asian Wall Street Journal*. April 8 2004.
- Ellmann, M.. “General Aspects of Transition.” Admiral P. (ed). *Economic Transition in Eastern Europe*. 1993.
- Fischer, S. & Gelb A.. “The Process of Socialist Economic Transformation.”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May 1991.
- Grossman, G.. “The Second Economy of the USSR.” *Problems of Communism*. Vol. 26. 1977
- Harrison M.. “Are Command Economies Unstable? Why did the Soviet Economy Collapse?” *University of Warwick Working Paper*. November 1999.
- . “Coercion, Compliance, and the Collapse of the Soviet Command Economy.” *Economic History Review*. Vol. 55. No. 3. 2002.
- Johnson, S., Kaufmann D. & Shleifer A.. “The Unofficial Economy in Transition.”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Issue 2. 1997.
- Kaufmann, D. and Kaliberda A.. “Integrating the Unofficial Economy into Dynamics of Post-Socialist Economies.”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WPS 1691*. World Bank, December 1996.
- Kim, B.. “Informal economy activities of Soviet households: size and

- dynamics.”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Vol. 31. Issue 3. September 2003.
- Lacko, M. “Hidden Economy—an Unknown Quantity.” *Economic of Transition*. Vol. 8. No. 1. 2000.
- Lee, Suk. “Food Shortages And Economic Institution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PhD Thesis. University of Warwick, 2003.
- Malia, M. “The Highest Stage of Socialism.” Edwards (ed). *The Collapse of Communism*. Stanford, 1999.
- Mcneill, T.. “Soviet Studies and the Collapse of the USSR.” Cox, M. (ed). *Rethinking the Soviet Collapse: Sovietology, the Death of Communism and the New Russia*. London, 1998.
- Noland, M. · Robinson S. · Wang T.. “Famine in North Korea: Causes and Cures.”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rual Change*. Vol. 49. No. 4. 2001.
- O’Hearn, D.. “The Consumer Economy: Size and Effects.” *Soviet Studies*. Vol. 32. No. 2. 1980.
- Ofer, Gur.. “Soviet Economic Growth: 1928~1985.”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Vol. 25. No. 4. Dec. 1987.
- Qian, Y. and Xu C.. “The M-form Hierarchy and China’s Economic Reform.” *European Economic Review*. Vol. 37. 1993.
- Rutgaizer, V.. “The Shadow Economy in the USSR.” *Berkeley-Duke Occasional Papers on the Second Economy in the USSR*. No. 34. February 1992.
- Weitsman, “Economic Transition: Can Theory Help?” *European Economic Review*. Vol. 37. 1993.

### 3. 기타 자료

『조선신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통일부. “최근 북한농민시장의 실태와 가격동향분석(보도자료).” 1998.12.

<http://www.econ.duke.edu/Papers/Treml.BDOP.html>

<http://www.eia.doe.gov/emeu/international/contents.html>

<http://www.eia.doe.gov/emeu/international/contents.html>

ラヂオプレス, 『北朝鮮 政策動向』



# 최근 발간자료 안내

## 연구총서

2003-01	북한의 인권부문 외교의 전개방향	최의철	저	6,000원
2003-02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이우영	저	5,000원
2003-03	『조선녀성』 분석	임순희	저	6,000원
2003-04	북한의 개인송배 및 정치사회화의 효과에 대한 평가연구	서재진	저	6,500원
2003-05	21세기 미,중,일,러의 한반도정책과 한국의 대응방안	여인곤 외	공저	8,500원
2003-06	부시 행정부의 군사안보전략	이현경	저	5,000원
2003-07	일본의 군사안보전략과 한반도	김영춘	저	4,000원
2003-08	중국의 한반도 안보전략과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최춘흠	저	3,500원
2003-09	한반도 평화정착 추진전략	박영호 외	공저	8,500원
2003-10	핵문제 전개 및 내부 정치변동의 향배와 북한 변화	박형중	저	7,000원
2003-11	미국의 대이라크전쟁 이후 북·미관계 전망	최진욱	저	5,000원
2003-12	북한의 후계자론	이교덕	저	4,500원
2003-13	김정일 정권의 안보정책: 포괄적 안보개념의 적용	박영규	저	5,500원
2003-14	북한의 사회통제 기구 고찰: 인민보안성을 중심으로	전현준	저	4,000원
2003-15	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남북관계 및 북한 경제지원 시나리오	박형중 외	공저	10,000원
2003-16	통일예측모형 연구	박영호 외	공저	8,000원
2003-17	동북아 안보·경제 협력체제 형성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3-18	국제적 통일역량 강화방안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3-19	북한 재산권의 비공식 이행	임강택 외	공저	5,000원
2003-20	북한 노동력 활용방안	최수영	저	3,500원
2003-21	대북 인도적 지원의 영향력 분석	이금순	저	5,500원
2004-01	인도주의 개입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	최의철	저	6,000원
2004-02	A CRITICAL JUNCTURE	최진욱	저	4,000원
2004-03	식량난과 북한여성의 역할 및 의식변화	임순희	저	5,000원
2004-04	통일 이후 갈등해소를 위한 국민통합 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4-05	미·중 패권경쟁과 동아시아 지역패권 변화 연구	황병덕 외	공저	9,500원
2004-06	중국의 부상에 대한 일본의 인식과 군사력 강화	김영춘	저	4,000원
2004-07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와 한국의 국가안보	홍관희	저	4,500원
2004-08	남북경협 실패사례 연구: 대북 경협사업의 성공을 위한 정책과제	김영운	저	7,500원
2004-09	북한의 핵 폐기 가능성과 북·미관계	정영태	저	5,000원
2004-10	미국의 대북인권정책 연구	김수암	저	6,000원
2004-11	김정일 시대 북한의 정치체제	박형중 외	공저	10,000원
2004-12	미국의 한반도 정책과 통일문제	박영호	저	5,500원
2004-13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과 외자유치 전략 :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특구를 중심으로	임강택 외	공저	6,000원

2004-14	7·1조치 이후 북한의 체제 변화 : 아래로부터의 시장사회주의화 개혁	서재진	저	7,500원
2004-15	CSCE/OSCE의 분석과 동북아안보협력에 주는 시사점	손기웅	저	5,000원
2004-16	남북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대내적 기반구축방안 : 통일문제의 갈등구조 해소를 중심으로	조한범	저	4,500원
2004-17	국제적 통일역량 실태분석	여인곤 외	공저	9,000원
2004-18	대북지원민간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연구	이금순	저	5,000원
2004-19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경제 변화 전망 : 실질소득의 변화를 중심으로	최수영	저	4,000원
2004-20	1994~2000년 북한기근: 발생, 충격 그리고 특징	이 석	저	9,000원
2005-01	Toward Greater Transparency in Non-Nuclear Policy : A Case of South Korea	전성훈	저	7,000원
2005-02	유럽연합(EU)의 대북 인권정책과 북한의 대응	최의철	저	8,000원
2005-03	북한의 노동인력 개발체계: 형성과 변화	조정아	저	7,000원
2005-04	Energy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 Issues and Suggestions	김규륜	저	4,500원
2005-05	일본의 보수우경화와 국가안보전략	김영춘	저	5,000원
2005-06	북한주민의 국경이동 실태: 변화와 전망	이금순	저	6,500원
2005-07	북한 청소년의 교육권 실태: 지속과 변화	임순희	저	5,500원
2005-08	미·중 패권경쟁과 우리의 대응전략	황병덕	저	9,000원
2005-09	북한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남북 협력 방안 연구	김영윤	저	7,000원
2005-10	청소년의 통일문제 관심 제고 방안	손기웅	저	5,500원
2005-11	러시아 탈 사회주의 체제전환과 사회갈등	조한범	저	6,000원
2005-12	동북아협력의 인프라 실태: 국가 및 지역차원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13	북한의 형사법제상 형사처리절차와 적용실태	김수암	저	7,000원
2005-14	6·15 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대남협상 행태: 지속과 변화	허문영	저	7,500원
2005-15	북한체제의 분야별 실태평가와 변화전망 : 중국의 초기 개혁개방과정과의 비교분석	이교덕 외	공저	10,000원
2005-16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전망	조 민	저	6,000원
2005-17	북한의 경제개혁과 이행	이 석	저	7,000원
2005-18	북한의 산업구조 연구	최수영	저	5,500원
2005-19	탈냉전시대 전환기의 일본의 국내정치와 대외전략	배정호	저	6,500원
2005-20	부시행정부의 대북 정책 추진 현황과 전망	김국신	저	5,000원
2005-21	미국 외교정책에서의 정책연구기관(Think Tanks)의 역할과 한반도 문제	박영호	저	8,500원
2005-22	2005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23	미국과 중국의 대북 정책 및 한반도 구상과 한국의 정책공간	박형중	저	5,000원

##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03	서재진 외 공저	9,5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3</i>	서재진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4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4</i>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5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5</i>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 연례정세보고서

2003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3~2004		6,000원
2004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4~2005		6,000원
2005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5~2006		6,000원

## 학술회의총서

2003-01	신정부 국정과제 추진방향	5,000원
2003-02	한반도 평화변영과 국제협력	5,500원
2004-01	김정일 정권 10년: 변화와 전망	10,000원
2004-02	한반도 안보정세변화와 협력적 자주국방	10,000원
2004-03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8,000원
2004-04	남북한 교류(화해)·협력과 NGO의 역할	7,500원
2004-05	한반도 평화회담의 과거와 현재	5,500원
2004-06	북한경제와 남북경협: 현황과 전망	6,500원
2004-07	한국 및 미국의 국내환경변화와 한반도 평화	10,000원
2004-08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변영과 한·중 협력	9,000원
2005-01	북한 경제의 변화와 국제협력	8,000원
2005-02	6·15남북공동선언과 한반도 평화·번영: 평가와 전망	10,000원
2005-03	Infrastructure of Region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 Current Status and Tasks	10,000원
2005-04	Implementing the Six-Party Joint Statement and the Korean Peninsula	10,000원
2005-05	북한 광물자원 개발 전망과 정책방안	10,000원

## 논 총

통일정책연구, 제12권 1호 (2003)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2권 2호 (2003)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3권 1호 (2004)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3권 2호 (2004)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4권 1호 (2005)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2, No. 1 (2003)	9,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2, No. 2 (2003)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3, No. 1 (2004)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3, No. 2 (2004)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4, No. 1 (2005)	10,000원

## 영문초록

2003-1 KINU Research Abstracts '02	10,000원
------------------------------------	---------

## 협동연구총서

2003-01	국내적 통일인프라 실태			10,000원
2003-02	통일정책 추진체계 실태연구	허문영 외	공저	10,000원
2003-03	남북관계의 진전과 국내적 영향	최진욱 외	공저	10,000원
2003-04	법·제도분야 통일인프라 실태 연구	제성호 외	공저	10,000원
2003-05	통일교육의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	한만길 외	공저	10,000원
2003-06	국내적 통일인프라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 경제분야	이상만 외	공저	10,000원
2003-07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 연구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2003-08	종합결과보고서: 국내적 통일인프라 실태조사	박영규 외	공저	9,000원
2004-01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방안			10,000원
2004-02	정보화시대 통일정책 거버넌스 개선방안	여인곤 외	공저	7,000원
2004-03	남북관계 개선의 국내적 수용력 확대방안 : 분야별 갈등의 원인 및 해소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4-04	통일관련 법적 인프라 정비 및 개선방안	제성호 외	공저	10,000원
2004-05	통일지향 교육 패러다임 정립과 추진방안	고정식 외	공저	10,000원
2004-06	경제분야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방안	양문수 외	공저	10,000원
2004-07	북한이탈주민 분야별 지원체계 개선방안	이금순 외	공저	8,500원
2004-08	종합결과보고서: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 방안	김영춘 외	공저	5,500원
2004-09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연구			10,000원

2004-10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협력적 아시아 인식의 모색	오명석 외	공저	5,500원
2004-11	동북아문화공동체와 유럽문화공동체의 공통성과 차별성	김명섭 외	공저	5,000원
2004-1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국·중국·일본의 대중문화산업에 대한 비교연구	양영균 외	공저	10,000원
2004-13	동북아 공동의 문화유산에 대한 공동 연구와 관리	박경하 외	공저	10,000원
2004-14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동아시아 지역 확대방안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동남아 문화 공동체 형성 가능성 분석	서중석 외	공저	10,000원
2004-15	동북아 평화문화 비교 연구	조한범 외	공저	9,500원
2004-16	동북아 한민족 사회의 역사적 형성과정 및 실태	최진욱 외	공저	6,500원
2004-17	동북아공동체의 행정조직 구축에 관한 연구: 유럽연합의 행정부인 집행위원회 조직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윤종설 외	공저	5,000원
2004-18	동북아 국가의 인적자원실태 및 개발 동향과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공동체 형성 가능성 연구	강일규 외	공저	10,000원
2004-19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기반 구축방안	전재경 외	공저	8,000원
2004-20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 기반 구축방안 : 형사법제를 중심으로	이진국 외	공저	6,000원
2004-21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교류협력방안	김이선 외	공저	8,500원
2004-2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협력 연구	윤철경 외	공저	10,000원
2004-23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육 분야 교류·협력의 실태	한만길 외	공저	10,000원
2004-24	동북아 국가간 관광교류협력 방안(Ⅰ) : 잠재력과 장애요인	박기홍 외	공저	6,000원
2004-25	동북아 문화공동체 추진의 비전과 과제(Ⅰ)	김광억 외	공저	4,000원
2004-26	종합결과보고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연구	김광억	저	4,500원
2005-01-01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유럽연합의 정책 사례	김명섭 외	공저	9,500원
2005-01-0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중·일 대중문화 교류의 현황 및 증진 방안 연구	문옥표 외	공저	10,000원
2005-01-03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동아시아 지역 확대를 위한 동남아시아 정치 사회 문화 인프라 연구	서중석 외	공저	9,000원
2005-01-04	동북아 평화문화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	전성훈 외	공저	10,000원
2005-01-05	동북아 한민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	배정호 외	공저	10,000원
2005-01-06	동북아 지역인권체제(포럼) 구성 추진	최의철 외	공저	10,000원
2005-01-07	동북아공동체의 정책결정기구 구축에 관한 연구	윤종설 외	공저	10,000원
2005-01-08	동북아 국가의 인적자원개발 제도 및 인프라 분석과 공동체 형성 방향 연구	강일규 외	공저	10,000원
2005-01-09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지원방안 연구(Ⅱ)	전재경 외	공저	10,000원
2005-01-10	변화하는 동북아 시대의 체계적인 국경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장준오 외	공저	8,000원
2005-01-11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연구	김이선 외	공저	10,000원

2005-01-1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인프라 구축 연구	오해섭 외	공저	9,000원
2005-01-13	동북아시아 3국 학생 및 교원의 상호이해에 관한 의식조사 연구	한만길 외	공저	9,000원
2005-08-01	남북한 통합과 통일인프라 확장방안			10,000원
2005-08-02	남북한 통합을 위한 바람직한 통일정책 거버넌스 구축 방안	김국신 외	공저	10,000원
2005-08-03	통일관련 국민적 합의를 위한 종합적 시스템 구축방안 : 제도혁신과 가치합의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08-04	남북한 통합을 위한 법제도 인프라 확충 방안	이철수 외	공저	10,000원
2005-08-05	신패러다임 통일교육 구현방안	박광기 외	공저	10,000원
2005-08-06	남북한 경제통합의 인프라 확장방안	양문수 외	공저	10,000원
2005-08-07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프로그램 연구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2005-08-08	종합결과보고서: 남북한 통합과 통일인프라 확장방안	김영춘 외	공저	10,000원
2005-09-01	동북아 NGO 백서	전봉근 외	공저	10,000원
2005-09-02	동북아 NGO 연구총서	조한범 외	공저	10,000원

◆ 비매품 ◆

통일정세분석

2003-01	중국의 통일외교안보정책 전망: 10기 전인대 1차회의 결과분석			신상진
2003-02	북한 핵문제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향후 전망			임강택
2003-03	북한 인권실태에 관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동향			최의철, 임순희
2003-04	한·미 정상회담과 공조방향			이현경, 박영호
2003-05	일본의 안보개혁과 유사법제 정비			배정호
2003-06	북한 병력제도 변화와 병력감축 가능성			박형중, 정영태
2003-07	11기 1차 최고인민회의 개최 동향 분석			박형중
2004-01	2004년도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 분석	박형중, 전현준, 이교덕, 최진욱		
2004-02	최근 북한 변화 및 개혁 동향			북한연구실
2004-03	제13차 남북장관급회담 결과 분석 및 전망			조한범
2004-04	최근 북한의 주요 대남논조: 「민족공조」론 강조의 배경과 의도			박형중
2004-05	미 국무부의 '2004년 북한 인권보고서' 분석			최의철
2004-06	제2차 6자회담 분석과 전망			전성훈
2004-07	제4대 러시아 대선결과 분석			여인곤
2004-08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2차 회의 결과분석			이석, 최진욱
2004-09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과 우리의 고려사항			최의철, 임순희
2004-10	김정일 국방위원장 중국방문 결과 분석			이교덕, 신상진
2004-11	2차 북·일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영춘
2004-12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CU)프로그램 추진 실태			전성훈
2004-13	2004년 상반기 북한 동향	정영태, 최진욱, 박형중, 서재진, 이교덕		
2004-14	일본 참의원 선거결과 분석			김영춘

2004-15	남북한 전자상거래 추진방안	김영윤, 박정란
2004-16	미의회 '북한인권법': 의미와 전망	김수암, 이금순
2004-17	2004년 미국 대통령선거 동향 분석(Ⅰ) : 케리 민주당 후보의 외교안보정책 방향	박영호, 김국신
2004-18	2004년 미국 대통령선거 동향 분석(Ⅱ) : 부시 공화당 후보의 외교안보정책 방향	김국신, 박영호
2004-19	중국공산당 16기4중대회 결과분석	전병곤
2004-20	2004년 미국 대통령 및 의회 선거 결과 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4-21	중국의 동북공정과 우리의 대응책	전병곤
2005-01	2005년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 분석 및 정책 전망 이교덕, 서재진, 정영태, 최진욱, 박형중	
2005-02	북한의 경제개혁 동향	김영윤, 최수영
2005-03	북한의 「핵보유」 선언 배경과 향후 입장 전망	정영태
2005-04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 이후 주변 4국의 반응과 향후 정책 전망 박영호, 김영춘, 여인곤, 전병곤	
2005-05	북한인권 관련 미 국무부 보고서 분석 및 정책전망	최의철, 김수암
2005-06	중국 10기전인대 제3차회의 결과 분석	전병곤
2005-07	일본의 보수우경화 동향분석	김영춘
2005-08	농업분야 대북 협력 방안	김영윤, 최수영
2005-09	2004년 북한 영향실태조사결과 보고서 분석	이금순, 임순희
2005-10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제11기 제3차 회의 결과 분석	박형중, 최진욱
2005-11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 : 제61차 유엔인권위원회의의 결의안 채택을 중심으로	최의철, 임순희
2005-12	최근 중·일관계와 갈등요인 분석	배정호
2005-13	북한인권국제대회 동향과 향후 전망	김수암
2005-14	북한 주권국가 인정문제의 국제법적 조명: 동·서독 사례와 향후 통일정책 과제	황병덕
2005-15	동서독간 정치범 석방거래(Freikauf)	손기웅
2005-16	일본 총선 결과 분석	김영춘
2005-17	평화비용의 의미와 실익	김영윤, 이 석, 손기웅, 조 민, 서재진, 최수영
2005-18	미·일동맹의 강화와 주일미군의 재편	배정호
2005-19	주변4국과의 연쇄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곤, 박영호, 배정호, 최춘흙
2005-20	APEC 정상회의의 의의와 한국의 역할	김규륜

#### KINU정책연구시리즈

2005-01	북핵보유선언: 향후 정세전망과 우리의 정책방향	허문영
2005-02	북핵문제와 남북대화: 현안과 대책 이기동, 서보혁, 김용현, 이정철, 정영철, 전병곤, 곽진오	
2005-03	6·15 남북공동선언 재조명: 이론과 실제	홍용표, 조한범
2005-04	광복 60년과 한반도: 한미관계, 남북관계 그리고 북핵문제	김근식
2005-05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로드맵: 「6자회담 공동성명」 이후의 과제	조성렬

## Studies Series

2004-01	The Successor Theory of North Korea	Kyo Duk Lee
2004-02	Nine Scenarios for North Korea's Internal Development	Hyeong Jung Park
2004-03	The Impact of Personality Cult in North Korea	Jae Jean Suh
2004-04	The Unofficial Exercise of Property Rights in North Korea	Kang-Taeg Lim and Sung Chull Kim
2004-05	A Study of the Social Control System in North Korea: focusing on the Ministry of People's Security	Hyun Joon Chon
2005-01	Strategies for Development of a North Korean Special Economic Zone through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Kang-Taeg Lim & Sung-Hoon Lim
2005-02	The Food Crisis and the Changing Roles and Attitudes of North Korean Women	Lim Soon Hee
2005-03	Evaluation of South-North Economic Cooperation and Task for Success	Young-Yoon Kim
2005-04	North Korea's Market Economy Society from Below	Jae Jean Suh
2005-05	Continuities and Changes in the Power Structure and the Role of Party Organizations under the Kim Jong-il's Reign	Hyeong-Jung Park and Kyo-Duk Lee
2005-06	The DPRK Famine of 1994-2000: Existence and Impact	Suk Lee

#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 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定期會員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定期會員制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총서, 국문논총, 영문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 「정세분석보고서」 등)을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 1. 정기회원의 구분

- 1)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 2)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3)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 2. 회원가입 및 재가입

- 1) 가입방법: ①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회비를 납부하신 入金證과 함께 본 연구원으로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시므로써 정기회원 자격이 취득됩니다.  
② 본원 홈페이지(<http://www.kinu.or.kr>)에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회비를 납부하신 입금증을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시므로써 정기회원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2) 연 회 비: 회원자격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기관회원 20만원, 일반회원 10만원, 학생회원 7만원)
- 3) 납부방법: 신한은행 온라인 310-05-006298(예금주: 통일연구원)
- 4) 재 가 입: 회원자격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 회비를 재납부하면 됩니다.(재가입 안내장을 발송)

## 3. 정기회원의 혜택

-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 「통일정책연구」와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를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총서(연평균 30-35권), 학술회의 총서(연평균 5-6권), 정세분석보고서(연평균 5-10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송됩니다.
-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 4) 시중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지난자료를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단 비영리에 한함)
- 5) 저작권과 관련하여 DB서비스를 통해 압축한 자료는 제3자 양도 및 판매를 금합니다.

## 4.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우편번호: 142-076)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전화: 901-2559, 901-2529 FAX: 901-2547)







 통일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